政黨·團體·個別人士 統一論議

1989. 1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 統一對話관련　主要論議 (要旨) ………………………………………… 5

가. 政　　黨 ………………………………………………………………… 7

나. 團　　體 ………………………………………………………………… 16

다. 個別人士 ………………………………………………………………… 29

2 . 統一對話論議　關聯資料 (全文) ………………………………………… 39

□ 1987. 1. 27, 중립화 통일방안 (사회민주당 권두영 위원장) ………… 41

□ 1987. 10,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 「나의 입장과 나의 포부」 중 통일문제 관련부문 ……………………………………………… 43

□ 1987. 10. 12,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구상」,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 48

□ 1988. 2.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제 37회총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 53

□ 1988. 3. 20, 중립화통일 (최봉윤 · 재미학자) ……………………… 66

□ 1988. 3. 20,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박종화 · 한신대교수) ……………………………………………………… 69

□ 1988. 3. 29, 한겨레민주당 창당대회 기본정책중 통일정책 관련부문 ……………………………………………………………… 80

□ 1988. 3. 29, 서울대 총학생회 정 · 부회장후보 (김중기 · 유재석),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제 1 차) ……… 82

□ 1988. 4. 15, 서울대 총학생회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제 2차) ………………………………………… 83

□ 1988.4.16,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 ········· 85

□ 1988.4.25～4.29, 세계기독교 한반도평화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청년의 입장" ········· 90

□ 1988.5.9, 서울대「대학신문」, "통일을 위한 선언" ········· 93

□ 1988.5.14,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남한의 백만 청년학도가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3차공개서한" ········· 95

□ 1988.5.14, 전국민적 통일논의 보장을 위한 대정부 공개서한(「전대협」등 6개단체) ········· 98

□ 1988.5.28, 조국통일의 대업을 앞당기기 위한 시국선언 ········· 101

□ 1988.5.30, 「6·10남북학생」실무회담을 준비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전대협」임시의장 오영식) ········· 109

□ 1988.6.8, 민족통일논의에 대한 전국대학원생 연합회의 입장(전국 11개대학원학생연합회) ········· 111

□ 1988.6.11,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제4차 공개서한(「전대협」) ········· 114

□ 1988.6.12, 민족화합 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 "조선불교도 연맹 중앙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남북불교교류 제안) ········· 117

□ 1988.7.1, 재서독음악가 윤이상, "민족합동음악축전"제의 ········· 120

□ 1988.7.2, 민족문학작가회의 성명,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창한다" ········· 123

□ 1988.7.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성명, "남북 사회단체 회담을 제안한다" ········· 126

□ 1988.7.4, 한겨레민주당 성명, "남북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 128

□ 1988.7.4,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결의문" ······ 130

□ 1988.7.4, 「7·4남북공동성명」발표 16돌을 맞이하여
(서울대총학생회) ······ 134

□ 1988.7.6, 「몽양사상연구회」, 재북 여연구 초청 ······ 141

□ 1988.7.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봉초회장,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제의 ······ 143

□ 1988.7.12, 세계불교도회(WFB)한국본부, "남북한
WFB 임원회의" 개최제의 ······ 146

□ 1988.7.2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
협의회 "발족선언문" ······ 148

□ 1988.7.21, 민족화합 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는 2차공개서한" ······ 151

□ 1988.7.23,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 제의의
기만성(「서총련」) ······ 155

□ 1988.7.27, 북한 청년학생에게 보내는 남한 백만청년
학도의 제 5차공개서한(「전대협」) ······ 165

□ 1988.7.27,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투쟁선언문" ······ 169

□ 1988.7.31, 북한해방·남북통일실천 서울시민학생 결의대회
"북한대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장" ······ 173

□ 1988.8.1,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영모회장,
"남북기독교목회자 상호교류"제의 ······ 175

□ 1988.8.2, 사단법인 한국장기협회 이일훈 이사장, "남북한
친선장기대회" 개최제의 ······ 177

☐ 1988. 8. 5,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선언문" ······················· 179

☐ 1988. 8. 8, 카톨릭농민회 성명, "남북농민교류"제의 ····················· 183

☐ 1988. 8. 12, 민족미술협의회 성명, "남북미술교류전" 제안 ·············· 185

☐ 1988. 8. 20, 조국통일운동의 발전과 방향(발췌) ························ 187

☐ 1988. 8. 24,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성명, "남북국회연석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 ·············· 196

☐ 1988. 8. 2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한반도 평화선언" ································ 198

☐ 1988. 8. 31, 노동자시인 박노해, 노동자의 통일운동선언
"남북노동자회담을 제안한다" ·· 202

☐ 1988. 10. 19, 남북국회회담에 임하는 남한측 4당
(민정·평민·민주·공화)에 드리는 공개서한
(민족숭실총학생회) ·· 205

☐ 1988. 10. 20, 북방정책의 본질과 민족적 과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208

☐ 1988. 10. 25, 제 144회국회(정기회) 민주정의당 윤길중
대표위원 대표연설 ·· 213

☐ 1988. 10. 25, 제 144회국회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 대표연설 ··········· 215

☐ 1988. 10. 25, 제 144회국회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 대표연설 ··········· 218

☐ 1988. 10. 25, 제 144회국회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총재 대표연설 ········ 221

* 附錄 : 「社會와 思想」(1988. 9, 創刊號) 特輯
"現段階 民族統一運動의 實踐戰略" ·· 225

1. 統一對話關聯 主要論議(要旨)

가. 政 黨

出 處	要 旨
1987. 1.27 社會民主黨 權斗榮 委員長 記者會見	〈中立化統一方案 제시〉 o 社會民主黨은 民族自主力量을 바탕으로 한 永世中立化 統一만이 南北韓 全民族에게 最善의 길임을 確信함. o 民族主體性에 立脚하면서 4大强國과 유엔이 保障하는 韓半島의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와 類似한 永世中立化 實現 - 이를 위해 6者會談(南·北韓當局, 美·蘇·中·日當局) 開催 實現을 위한 多角的 努力 傾注
1987.10 平和民主黨 金大中 總裁,「나의 立場과 나의 抱負」	〈共和國聯邦制 통일방안 제시〉 o 南北 양쪽은 恒久的인 平和體制의 土臺 위에 南北 兩地域에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완전한 獨立政府의 存在 認定 o 兩政府는 서로 相對의 內政에 干涉하지 않고 直接 또는 聯邦機構를 통해 相互 交流와 協力의 增進에 注力

出　　處	要　　旨
	ㅇ 南北 양 獨立政府 위에 中央聯邦機構를 設立하고 여기에 南北의 對話와 交流增大를 위한 役割과 任務賦與 ㅇ 이러한 「1聯邦 2獨立政府」體制 밑에서 南北은 共存과 交流를 더욱 활발히 하면서 相互間 信賴와 이해의 調整이 增進된만큼 그 權限을 中央政府로 점차적으로 移管, 마침내 완전한 統一政府 이룩
1987.10.12 統一民主黨 金泳三 總裁,「民族統一을 위한 構想」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 제시〉 ㅇ 自主平和統一 6大原則 - 첫째 自主의 原則 - 둘째 和解의 原則 - 세째 段階的 成就의 原則 - 네째 平和의 原則 - 다섯째 轉換의 原則 - 여섯째 民族 大參與의 原則 ㅇ 段階的 統一成就 위한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

出　　　處	要　　　　　旨
	- 第 1 段階, 國內民主改革 (北韓의 民主改革 促求段階) - 第 2 段階, 漸進的 交流 (相互 實相公開단계) - 第 3 段階, 非政治的 分野 協力强化 (自由往來단계) - 第 4 段階, 政治·外交分野 協力强化 (民族統一準備단계) - 第 5 段階, 1 民族 1 體制의 平和的 民族統一(宣布단계)
1987.10.30 新民主共和黨 金鍾泌總裁, 大統領候補受諾演說	〈 5 段階 統一接近論 제시 〉 ㅇ 1 段階, 南北間 平和定着 ㅇ 2 段階, 相互信賴回復 및 對話와 交流의 擴大 ㅇ 3 段階, 相互協力體制의 構築 ㅇ 4 段階, 民族的 同質性 回復 ㅇ 5 段階, 南北統一 實現
1987.11.27 民主正義黨 盧泰愚	〈 統一政策基調 천명 〉 ㅇ 統一問題는 認識과 發想의 大轉換을 통해 接

出　　處	要　　　　旨
大統領候補 「統一問題관련公約」	近해 나가겠음. o 과거 冷戰的 發想으로 接近한 傾向 ㅡ 즉 民族問題의 對立的·鬪爭的 思考 ㅡ 을 앞으로는 止揚하고 北韓에 대해서는 큰 兄처럼 대하는 이니셔티브를 取하겠음. o 南北韓關係는 相互誹謗하고 괴롭히는 敵對論理에서 벗어나 서로돕고 함께 잘사는 互惠論理로 發展시켜 나아가야 함.
1988. 3. 6 民衆의 黨綱領中 統一政策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 표방〉 o 統一論議와 民間次元의 統一推進의 自由, 徹底保障 o 韓半島의 實質的 平和定着으로 統一의 基礎構築 o 政治·經濟·社會·文化·言語 등 모든 方面에 걸쳐 南北韓間의 平和的 交流 적극 展開 o 統一을 위한 南北韓 協商機構 설치

出　處	要　旨
1988. 3.29 한겨레民主黨 政綱政策	〈한겨레共同體 統一案 제시〉 o 7.4南北共同聲明에서 밝힌 바 있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原則에 立脚하여 分斷祖國의 現實 극복 o 한겨레共同體(Korean Commonwealth) 統一案 3段階 - 第1段階, 平和共存과 民族同質性 回復의 단계 - 第2段階, 한겨레共同體 實現의 단계 - 第3段階, 平和統一의 단계
1988. 7. 4 「한겨레民主黨」 諸廷垢代表 聲明	〈南北韓 諸政黨連席會議 開催〉 o 民族의 平和統一을 앞당기고 南北의 相互 信賴回復을 위해 오는 8.15, 板門店에서 〈南北韓 諸政黨連席會議〉의 開催를 北韓 諸政黨에 제의 o 南北韓 政府當局에 〈南北韓 諸政黨連席會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支援· 協調 期待 * 同 會議推進을 위해 民正·平民·民主·共和

出 處	要 旨
	등 與野 4黨에 〈南北韓 諸政黨 共同準備委員會〉構成 제안
1988.10.25 民主正義黨 尹吉重 代表委員, 第 144回 國會 代表演說	〈南北頂上會談 조속開催 희망〉 ㅇ 이제 南北韓은 冷戰的 思考와 對決的 姿勢에 과감히 벗어나 서로 和解하고 協力하면서 統一로 향해 함께 나가는 〈더불어 사는 精神〉을 發揚해야 할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南北頂上會談이 아무런 條件없이 하루속히 열려야 하며 韓半島의 安定과 平和保障을 위한 國際的 環境造成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그리고 北韓側은 이제 統一問題와 南北對話를 赤化革命의 수단으로 보아온 基本的인 思考와 자기의 主張과 立場만을 絶對化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民族의 장래와 歷史의 발전추세를 直視하는 안목을 가져주기를 期待함.

出處	要旨
1988.10.25 平和民主黨 金大中 總裁, 第144回 國會 代表演說	〈南北不可侵宣言 및 全面的 平和交流 主唱〉 o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南北間에 不可侵宣言 등 平和共存의 노력과 全面的인 平和交流의 두가지가 병행해서 推進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 o 이러한 우리들의 努力은 어디까지나 南北의 양당사자가 主體가 되어 推進해야 하며 4大國은 協力者의 立場에서 우리를 도와야 할 것임. o 盧大統領이 말한 平和市의 設置, 北韓이 主張한 平和地帶의 策定, 제가 제안한 바 있는 民族公園과 統一運動場 등은 南北間의 전면적 交流와 병행해서 推進되도록 바라는 바임. o 南北間의 平和共存과 平和交流 체제가 確立되면 머지않아 상징적인 統一機構아래 제 1 단계 統一에의 出發도 可能하다고 봄. o 저는 北韓이 말하는 高麗聯邦制는 實質的인 완전통일을 意味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時機尙早라고 생각함.

出　　處	要　　　　旨
1988.10.25 統一民主黨 金泳三 總裁, 第144回 國會 代表演說	〈南北政治·軍事·經濟·文化會談 同時推進제의〉 o 南北分斷을 지속시키고 있는 本質的 要素와 根本的 요인부터 먼저 제거하는 일에 誠實性과 果敢性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음. o 이런뜻에서 南北關係 改善을 위해 南北間의 政治·軍事會談과 經濟會談이나 文化會談을 同時에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우리側에서 主張하는 人的 交流를 포함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交流를 실시하고 北側에서 主張하는 政治, 軍事問題도 동시에 論議하는 總體的 접근방식에 진지한 姿勢로 임해야 함. o 우리는 南北韓의 交流는 물론 不可侵宣言, 平和協定의 체결, 國家保安法 개정 등 그 어느문제도 統一論議에서 除外될 수 없음을 明白히 해두는 바임.
1988.10.25 新民主共和黨 金鍾	〈南北和解共存 바탕위에 점진적 統一努力 促求〉 o 國際的 冷戰體制의 産物인 祖國分斷을 感覺的

出　處	要　旨
泌總裁, 第 144 回 國會 代表演說	이고 感傷的인 發想과 思考로 克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錯誤일 것임. ○ 統一을 위해서는 뚜렷한 政策基調의 堅持가 要求됨. 우선 南北이 和解共存體制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誘導하는 對內外的 努力을 기울여야 함. ○ 그리고 굳건한 民族的 統一意志와 끈질긴 忍耐를 가지고 北韓과 對話와 交流를 통해 相互信賴와 協力體制를 構築하고, 그 바탕 위에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해 나가야 함.

나. 團　　體

出　　處	要　　　　旨
1988. 2.29 韓國基督教 教會協議會(KNCC) 宣言	〈民族統一을 위한 韓國教會의 基本原則〉 ㅇ 民族統一은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原則에 입각하여 實現, 南北韓當局에 대한 建議 - 分斷傷處의 治癒를 위해 離散家族의 再會・故鄕訪問 周旋 - 分斷克服에 國民參與 실질적 保障을 위해 統一論議 開放・批判許容 - 分斷・思想・制度초월, 民族的 大團結을 위해 信頼造成措置(誹謗・排他중지, 交流・訪問・通信개방, 人的・物的交流) - 緊張緩和와 平和增進을 위해 平和協定(不可侵問題 포함)締結, 信頼造成 및 國際的 保障講究후 駐韓美軍撤收・核武器철거 - 民族自主性의 實現 위해 民族的 利益에 배치되는 外交的 協約, 條約의 修正 또는 廢棄
1988. 4.16. 民主統一民衆運動聯合 機關誌 「民衆	〈民族統一을 위한 具體的 제안〉 ① 平和協定締結, 駐韓美軍撤收, 유엔同時加入 ② 聯邦制統一 第1段階(南北이 軍事・外交 獨立

出　　處	要　　　　旨
의 소리」제 50 호 (文益煥목사)	的 運營 ③ 永世中立化 宣言 ④ 聯邦制統一 第 2 段階(南北이 軍事・外交活動 統合, 南北의 現社會・經濟體制 維持, 南北이 각각 地方自治制 實施) ⑤ 聯邦制統一 第 3 段階(南北의 地方自治制를 道 單位로 細分化)
1988.4.25 ～ 4.29 世界基督教韓半島平和協議會, "民族의 統一과 平和에 대한 基督青年의 立場"	**〈統一의 內容 및 5原則 표명〉** ○ 統一은 갈라진 國土와 民族을 機械的으로 統合하는 것이 아니라 民族的인 自主, 政治的인 民主, 社會經濟的인 平等이 완전히 實現된 상태를 말함. ○ 統一의 原則 ① 民族自主의 原則 ② 平和의 原則 ③ 民族大團結의 原則 ④ 人道主義 原則 ⑤ 民衆主體 統一의 原則

出　　處	要　　　　　　旨
1988. 5. 9 서울大「大學新聞」 "統一을 위한 宣言"	〈民衆主導下의 統一論議 실현주장〉 ○ 우리 겨레도 制度政治圈을 떠난 民衆的 次元에서 統一을 향한 實踐的 작업결행 ○ 統一論議를 民衆的 次元으로 끌어올리며 政府의 統一論議를 무너뜨리고 또 保守野黨의 黨利黨略的 統一論議를 올곧은 方向으로 견인
1988. 6.12 民族和合共同올림픽推進 佛教本部, 朝鮮佛教徒聯盟 中央委員長에 보내는 書翰	〈南北佛教交流 제안〉 ○ 南北佛教와 佛者間의 自主的 交流를 밑거름 삼아 千萬離散家族과 6千萬民族 各界各層의 自主的 交流의 문 開放 ○ 祖國의 自主的 統一을 위한 南北佛者 共同祈願法會를 성사시켜 統一祖國의 未來를 앞당기는 轉機 마련 ○ 朝鮮佛教徒聯盟과 民族和合 共同올림픽推進 佛教本部의 주최로 8.15에 普賢寺와 曹溪寺에서 각각 法會 개최

出　　處	要　　　　旨
1988. 7. 2 「民族文學作家會議」金廷漢회장 記者會見	〈南北作家會談 제의〉 ㅇ 올해안에 7·4共同聲明의 統一原則을 존중하는 南北의 作家들이 모여 〈南北作家會談〉개최 △ 討議內容 - 南北間의 作品交流 - 母國語와 민족정서의 同質性 保存을 위한 共同作業 - 國文學硏究를 위한 現地踏査班의 交換 등 지속적인 人的交流 方案 논의 ㅇ 會談場所는 서울·平壤·板門店이나 또는 그밖에 韓半島 어디라도 좋음. ＊ 會談時期는 今年을 넘기지 않음.
1988. 7. 4 「民主·統一民衆運動聯合」文益煥의장 聲明	〈南北社會團體會談 제의〉 ㅇ 우리는 7·4共同聲明에서 제시한 統一3大原則에 合意하는 南北의 책임있는 社會團體가 中心이 되어 民族의 懸案問題를 協議할 것을 提議

出　　處	要　　　　　　旨
	- 議題 :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자주적 南北交流에 대한 모든 問題포함. * 具體的 內容은 추후 協議・決定 - 場所 : 協議결과에 따라 韓半島 어디라도 좋음. - 時期 :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함. ○ 그밖에 다음 事項에 대한 同團體의 立場表明 - 第 24 次 올림픽의 南北共同開催 및 民族單一팀 構成・참여 - 現在 추진중인 南北學生會談, 南北作家會談, 남북한 音樂合同大祭典, 夢陽큰따님 서울訪問推進 및 民間次元의 自主的 南北交流成事 적극 支援 - 南韓에서 同 會談을 主導할 〈民主社會團體協議會〉 構成提議 및 北韓에서도 相應措置期待

出　　處	要　　　　　旨
1988. 7. 4 統一念願 汎國民 平和大行進推進委員會, " 祖國統一을 위한 共同決議文 "	〈統一運動 目標제시〉 ○ 外勢의 干涉배격, 民族自主的인 交流實現 ○ 美國・北韓간의 平和協定과 남한의 國會와 북한의 最高人民會議 會談에서 南北相互不可侵條約 체결 ○ 南北韓 相互 軍事力 減縮 및 「팀스피리트」 訓練등 일체의 軍事武力示威 中止 ○ 韓半島 非核地帶化
1988. 7. 6 「夢陽思想硏究會」 韓昌浩회장, 北韓赤十字會에 보내는 書翰 * 韓赤에 傳達협조 依賴	〈夢陽 41 週忌 추모제에 在北 呂鷰九 초청〉 ○ 夢陽 呂運亨선생 41 주기 追慕祭를 맞아 先生의 유일한 血肉인 呂鷰九씨가 한번이라도 追慕祭에 참석하여 省墓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平壤赤十字社에 바람. ○ 모든 節次協議는 서울赤十字社를 통하여 주기 바람.

出　　處	要　　　　　　旨
1988. 7. 6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全鳳楚 會長 記者會見	〈南北藝術祝典 개최〉 ○ 南과 北의 藝術人은 理念투쟁과 政治的 갈등을 초월, 純粹한 藝術人의 자세에서 統一의 열망을 昇華시키는 〈民族統一을 위한 南北藝術大祝典〉을 南北藝術人 共同作業으로 成就 △推進方法 - 分野 : 建築·舞踊·國樂·文學·美術·寫眞·演劇·演藝·映畵·音樂 - 場所 : 서울·平壤 交叉訪問, 公演·展示會 개최(기타 板門店 혹은 觀光地域 등 特定場所를 지정하여 共同展示·公演) - 會談 : 大祝典 준비를 위한 〈準備小委員會〉구성, 수시로 豫備會談 개최 - 時期 : 兩側이 적절 時機를 선택, 年1回 定期개최 * 빠르면 올림픽期間 活用 ○ 大祝典의 성공적 開催를 위해 南北 政府當局에 南北藝術人 身分安全保障 및 전폭적 支援·協調 요망

出 處	要 旨
1988. 7.12 民族和合 共同올림픽推進 佛教本部, "朝鮮佛教徒聯盟에 보내는 書翰"	〈南北 佛敎指導者間 對話제의〉 ○ 南北韓의 佛教人들이 앞장서서 佛陀의 慈悲로써 韓半島의 平和를 앞당기고 世界 平和에 헌신하기 위해 北韓 佛教指導者들에게 다음과 같이 提議 1) 南北韓의 WFB(World Fellow of Buddism: 世界佛教徒會) 任員들의 1次會議 개최희망 - 서울, 平壤, 板門店 등 귀하들이 원하는 場所에서 日時는 9月中 開催 2) 2次會議는 11.19부터 美國 LA에서 갖는 第16次 世界大會 이전에, 3次會議는 同會議 기간중 現地에서 개최 3) 南北韓의 有名寺刹 및 佛教界 相互訪問 희망 4) 南北韓의 8萬大藏經 한글飜譯本 相互交換 5) 板門店에서 9月中 南北韓合同 統一祈願法會 개최 * 佛教徒側은 同書翰 발송계획과 관련하여 政府側에 내용검토 및 諸般事項에 대한 協調를 要請해 옴.

出　處	要　旨
1988. 7.13 「全國牧會者 正義平和實踐協議會」 박영모會長 聲明	**〈南北韓 基督敎人 秋收感謝祭 交流제의〉** o 今年 9.25(秋夕)에 南韓 基督敎人은 北韓에서 北韓 基督敎人은 南韓에서 각각 秋收感謝祭 개최 o 이의 實現을 위해 8.15에 南北의 基督敎人 代表團을 板門店에 派遣, 禮拜개최문제 協議
1988. 7.21 民族和合 共同올림픽推進 佛敎本部, "北韓의 朝鮮佛敎徒聯盟에 보내는 2次書翰"	**〈南北共同法會 開催위한 南北實務代表者會談 제의〉** o 共同올림픽 성사를 위해 南北佛者의 力量이 결집되어야 하는 바 8.15를 맞아 南北共同祈願 法會를 위해 南北實務代表者會談을 오는 8.10경 板門店이나 기타 場所에서 개최할 것을 提議 △ 會談議題 — 8.15共同法會의 內容·形式·名稱과 共同課業 討議 — 本 實務會談을 기초로 한 폭넓은 自主的 交流方案 討議

出　　處	要　　　　旨
	○ 朝鮮佛教徒聯盟은 빠른 시일안에 日時・場所를 확정해 通報해 줄 것을 要望 * 同本部 代表 知訥스님을 首席代表로 하는 實務代表 12명의 명단발표
1988. 7.25 서울地域 總學生會聯合(서總聯),「서建推」와 統合決議 및 記者會見	〈南北國會會談 開催촉구〉 ○ 美國과 現政權은 北韓의 平和協定締結 제의에 呼應해야 하며 南北國會會談은 豫備會談 없이 즉시 開催되어야 함. ○ 共同올림픽 개최실현을 위한 南北體育會談을 再開해야 함.
1988. 7.26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民主團體協議會」(祖統協)聲明	〈南北國會連席會議 開催지지〉 ○ 南北國會連席會議에 사회단체 代表가 참가해야 함. ○ 南北國會連席會議에서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이 채택되어야 함.

出　處	要　旨
1988. 7.31 北韓解放・南北統一實踐 서울市民學生決議大會, "北韓大學生들에게 보내는 公開狀"	**〈南北韓大學生 思想公開討論會 제의〉** ○ 우리는 韓半島 分斷의 原因이 思想과 理念의 갈등과 分裂에 있음을 분명히 認識하는 過程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金日成 主體思想은 우리 민족을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거짓思想임을 確認 ○ 그러므로 우리들은 思想問題의 해결없이는 6千萬同胞의 숙원인 祖國統一이 올 수 없다는 판단하에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전제로 하는 南北韓 大學生 思想公開討論會를 北韓大學生들에게 提議
1988. 8. 1 全國牧會者 正義平和實踐協議會 박영모會長 聲明	**〈南北基督敎牧會者 相互交流 제의〉** ○ 南北基督教 牧會者들의 相互交流를 政府次元에서 推進 ○ 이를 위해 南北牧會者間 事前協議 및 共同禮拜 개최제의

出　　處	要　　旨
1988. 8. 2 社團法人 韓國將棋協會 이일훈理事長, "以北同胞에게 드리는 글"	〈南北韓 親善將棋大會 開催제의〉 ○ 저는 以北에 계시는 各界各層의 同胞에게 정감어린 장기판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서로의 安否와 살아가는 얘기들을 주고 받음으로써 막혔던 民族의 血脈이 뚫리기를 希望 ○ 저의 希望을 이루기 위하여 양방政府의 적극적 協調부탁 및 北에 계시는 將棋團體의 代表와 時間·場所에 구애없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希望
1988. 8. 8 카톨릭農民會 聲明	〈南北農民會談 開催주장〉 ○ 分斷으로 인한 가장 큰 희생자인 農民과 勞動者가 統一의 主體가 되어야 함. ○ 南北의 農民들이 만나 營農技術을 相互 交換하고 秋收感謝 大同祭를 개최
1988. 8.12 民族美術協會 聲明	〈南北韓 美術人交流 제의〉 ○ 南北韓 美術人들의 双方地域 巡廻展 개최 ○ 이를 위한 南北韓 美術人들의 事前準備 모임 제의

出　　處	要　　　　旨
1988. 8.24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民主團體協議會 共同代表(문익환·이우정·지선·이재오·오영식) 聲明	**〈南北國會連席會議 즉각 開催促求〉** ㅇ 8월안에 南北의 國會議員, 社會團體 代表가 참석하는 南北國會連席會議 개최 ㅇ 南北韓 相互 不可侵宣言 채택, 共同올림픽 개최, 南北韓 多方面的 交流 등 討議
1988. 8.28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世界大會 및 汎民族大會 推進本部, "韓半島 平和宣言"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6개항 提示〉** ① 休戰協定은 南北相互 不可侵宣言에 기초하여 平和協定으로 代置 ② 駐韓美軍의 단계적 撤收 ③ 韓半島 核武器의 즉각 廢棄 및 韓半島의 非核地帶化 ④ 南北韓 상호간 減軍·軍縮協商 즉각 開始 ⑤ 南北民衆間의 자주적 交流와 平和統一意志의 確認過程 多元化 ⑥ 國民內部의 화해와 民族大團合의 계기로 第24次 올림픽 活用

다. 個別 人士

出 處	要 旨
1988. 2.20 「月刊朝鮮」 88年 3月號 李三悅교수 (崇實大) 卷頭言	〈統一問題 優先的 課題로 定立促求〉 ○ 統一은 民族至上課業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이제까지 統一課業은 정부의 우선적 課題가 아니었음. ○ 새時代 새政府는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南北關係改善과 平和統一에 대한 國民的 要求와 시대적 要請에 따라 統一問題를 最優先的 과제로 삼아야 함.
1988. 3. 6 李相禹교수(西江大) "「北韓孤立化」탈피, 새로운 統一政策을 펴자"(週刊朝鮮)	〈새로운 統一政策 促求〉 ○ 새로운 統一政策의 방향은 北韓이 설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만들어주고 北韓同胞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해주어야 함. ○ 새政府는 北韓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相互主義를 고집할게 아니라 北韓同胞에 利益이 될 일을 一方的으로 해 나가면 됨. ○ 우리의 友邦과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우리 스스로가 주선해 주는 方向으로 努力함으로써 包容力있는 南北韓關係의 양식을 定立

出 處	要 旨
1988. 3. 「民族知性」 88年 4月號 崔鳳潤 전 서울대 敎授, "나의 祖國統一方案"	〈過渡聯邦共和國 樹立方案〉 ○ 祖國統一이라는 공동목적을 達成하는 첫단계로 – 暫定的 過渡聯邦國家 수립 –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 소화 – 調和를 통한 새로운 정치이념·경제체제 創造
1988. 3. 「民族知性」 88年 4月號 이재오, "自主·民主·統一의 새날을 열자"	〈統一達成의 여건〉 ○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大原則하에 南北韓 공히, – 統一論議權의 국민적 보장 – 反統一的 制度·法的裝置 改廢 – 社會의 完全開放 – 交流擴大 및 民族統一廣場 설치 – 南北會議 구성(統一政策 및 統一이후의 國家體制 論議)

出　　處	要　　旨
1988. 3.29 서울大 總學生會 正・副會長候補(金重基・兪在碩), "金日成大學 靑年學生에게 드리는 公開書翰"	〈南北學生會談 제의〉 ○ 南北韓 청년학생 國土縱斷巡禮 대행진 및 體育大會 추진 ○ 이를 위해 南北學生代表가 6.10, 板門店 또는 제네바에서 만나 實務會談 개최 － 4.19까지 回答요망
1988. 7. 1 在西獨 音樂家 尹伊桑, 東京外信記者클럽會見	〈南北韓 共同音樂祭 개최〉 ○ 本人은 몇년전부터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民族和合을 위한 南北韓 音樂合同大祭典 개최를 추진 * 現在 南北韓當局의 高位層과 交涉中 △ 推進內容 - 南北雙方이 각기 대표적 交響樂團・合唱團・聲樂家 등을 선출, 休戰線의 같은 場所에서 公演 - 開催日時는 演習期間 등을 고려, 今年 10月中이 적당

出　　處	要　　　　旨
	△ 推進方法 - 境界線을 중심으로 큰 가설무대 設置 - 南北으로 거대한 가설 觀衆席을 마련, 양쪽에서 각각 2～3만명의 관중참관 - 양쪽 政府는 南北韓 관중외에 外國貴賓을 초청, 본 祝祭의 意義제고 ㅇ 이 大祭典은 정부차원에서 「準備委員會」를 설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民間人인 尹伊桑이 主管・推進 ＊ 양쪽 政府에 實務的 權限 委任要請
1988. 7. 4 統一民主黨 統一政策討論會, 張明奉교수(國民大)	〈統一의 中間段階로 南北韓 國家聯合案 提示〉 ㅇ 統一에의 接近을 시도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할 일은 南北間의 平和共存體制를 確立하는 것임. ㅇ 이런 前提下에 중간단계의 統一方案으로서 南北韓 國家聯合案이 현실적이고 合理的임. 즉 1民族 2體制의 現實認定에 기초하자는 것임. ㅇ 이 方案은 완전한 統一에 이르기까지 南北韓

出　　處	要　　　　旨
	관계를 暫定的으로 相互共存的이며, 協力的인 관계로 轉換시키자는 것임.
1988. 7. 4 統一民主黨 統一政策討論會, 朴寬用議員	**〈美軍駐屯에 대한 槪念再定立 必要〉** ○ 本格的인 政治·軍事會談에 앞서서 韓半島의 美軍駐屯에 대한 개념이 再定立되어야 함. ○ 戰爭抑制力으로서의 駐韓美國의 存在는 인정할 수 있으나 核武器의 保有만은 인정할 수 없음.
1988. 8.20 「新東亞」88年 9月號 金浩鎭교수(高麗大), "在野·學園街의 民衆統一論 解剖"	**〈統一論議관련 國民的 合意基盤構築 促求〉** ○ 韓國에 「統一論議의 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接近法은 統一政策의 合意基盤을 우선적으로 構築하는 일임. — 美·蘇와 南北韓 당국이 分斷論理하의 支配體制 유지와 統一作業에서의 覇權장악에 집착하지 않는 大乘的 姿勢의 견지가 先行되어야 함.

出　　處	要　　旨
	− 統一政策體系가 統一問題의 논의는 물론, 形成과 執行段階(對北接觸)에서도 民間部門의 參與空間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改編이 필요하며 北韓 社會에서도 同時的으로 충족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統一政策, 특히 對北接觸의 民間化는 北韓 社會에서도 상응한 水準의 順機能的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임.
1988. 8.31 勞動者詩人 박노해, "勞動者의 統一運動宣言"	〈南北勞動者會談 提案〉 ○ 南北分斷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받고 希望을 빼앗긴 勞動者이기에 民族史의 運命을 걸머지고 統一運動의 선봉에 나설 수 밖에 없음. 이제 統一運動을 더이상 學生들에게만 떠맡겨 놓아서는 안됨. ○ 저는 진짜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南韓과 北韓의 勞動兄弟들에게 勞動者의 역사적인 統一運動의 개막을 위하여 〈南北勞動者代表會談〉 개최를 提案함.

出 處	要 旨
	○ 南과 北의 勞動者는 지금부터 〈南北勞動者代表會談 推進本部〉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日程과 계획을 論議하고 確定해야 함.
1988. 9. 1 「社會와 思想」 (88.9, 創刊號) 特輯, "現段階 民族統一運動의 實踐戰略" (吳忠一·KNCC 실행위원)	〈體制·理念 초월한 民族共同體 건설〉 * 統一의 方案과 실천과제 ○ 統一이후 民族平和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준비를 위한 「南北民族代表者 協議機構」 설치 - 勞動者·農民을 포함, 社會各界 代表로서 民族的 良心을 대변할 수 있는 人士들로 구성 ○ 南北韓 政治·軍事當局은 民族간의 軍事對決體制를 止揚하고 民族共同防衛體制를 위한 「南北軍事共同會議」 機構설치 ○ 南北韓 민족과 정치당국들은 새로운 民族共同體의 政治·經濟·社會體系를 民族合意에 의해 創出함으로써 韓半島 分斷構造 淸算 등

出 處	要 旨
1988. 9. 1 「社會와 思想」 (88.9, 創刊號) 特輯, "現段階 民族統一運動의 實踐戰略"(金洛中・民族統一促進會 政策研究室長)	〈統一獨立 高麗共同體 樹立〉 * 高麗民族의 平和統一에 관한 南北間 基本條約(草案) 提示 ○ 高麗民族의 平和統一을 促進・保障하기 위하여 超國家的 기관으로 「高麗民族聯邦會議」조직・운영 ○ 1950.1.1 이후 出生한 모든 國民을 自國의 國籍에서 제외하고 이들로 하여금 南北韓 政府에서 獨立하고 전체 高麗民族을 統一할 自治的 生活共同體로서 非同盟中立의 統一獨立高麗共同體 樹立 ○ 非武裝地帶와 板門店지역에 대한 統治權을 統一獨立 高麗共同體에 이양함으로써 동지역 안에 統一獨立 高麗共同體 運營都市를 共同建設 ○ 高麗民族의 平和統一에 관한 國際保障條約締結 推進

出　　處	要　　　旨
1988. 9.20 「新東亞」10月號, “南北韓 經濟交流 可能性과 問題點” (鄭相勳・美일리노이工大經濟學교수)	〈實現可能한 南北韓 經濟交流內容 제시〉 ① 共同프로젝트(共同探査 및 開發, 合作會社 등) ② 商品交易 ③ 共同으로 休戰線地域에 일상용품을 위한 市場 開設 ④ 技術的 「노하우」와 經濟情報의 交換 ⑤ 相互訪問과 交換에 관계되는 事業 ⑥ 共同基金(產業開發基金, 地域開發基金, 共同救濟基金) ⑦ 共同으로 外國의 經濟援助 受容 ⑧ 共同漁撈區域 設定 ⑨ 事務室이나 工場의 支部 설치 ⑩ 經濟的 統合
1988.10.15 朝鮮日報 統韓問題研究所 주최 「統一學術會議」, 安秉俊교수(연세대)	〈南北韓 비교우위 活用, 對北接觸 擴大〉 ○ 現時點에서 對北韓政策의 基本方向은 政經分離 및 民間主導 등 實現可能한 것에 重點을 두고 韓國이 갖는 比較優位를 최대한 發揮, 關係擴大를 蓄積

出　　處	要　　　旨
	○ 우리의 北方 및 北韓政策은 國民的 支持基盤 위에서 韓半島의 分斷矛盾을 克服하고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 平和와 繁榮을 共同으로 누리는데 寄與하도록 해야 함. ○ 北方政策과 相互補完할 對北韓政策의 基本方向은 對話와 協商을 성사시켜 合意에 到達하도록 앞으로 北韓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提案을 하는 것임.

2. 統一對話論議 關聯資料(全文)

□ 1987.1.27, 중립화 통일방안

—사회민주당 권두영 위원장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적사회주의는 극도로 이질화되어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제도와 북한의 공산주의제도를 평화적으로 극복·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범세계사적인 이념체제이며, 사회민주당은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통일을 실현할 새로운 민족통일주체세력 즉, 민족·민주·진보세력을 이 이념을 중심으로 집결하면서 평화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함.

사회민주당은 민족자주역량을 바탕으로 한 영세중립화 통일만이 남북한 전민족에게 최선의 길이며, 이 평화통일 방식은 한반도에서 이해관계가 경합대립하는 4대강국(미·소·중·일)이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국제적 해결책이며 그 실현은 동북아시아 평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민족주체성에 입각하면서 4대강국과 유엔이 보장하는 한반도의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영세중립화 실현을 위하여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동을 추진함.

1) 국제적 활동

가. 미·소·중·일 수뇌와 유엔사무총장에게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통일실현에 대한 협력요청 공문발송

나. 6자회담(남북한당국과 미·소·중·일당국의 6자회담)개최 실현을 위한 다각적 노력

다. 다음에 예상되는 미·소 정상회담시 6자회담 개최를 의제로 채택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영세중립화 방향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해외교포단체들(일본에 있는 한국중립화위원회, 미국에 있는 한국중립화 통일추진협의회등)과 긴밀히 제휴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

라.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강대한 세계평화애호 진보세력에 한반도 영세중립화 실현에 대한 지지협조를 호소하며 국제사회당 기구(S.I)와 비동맹회의로부터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지지협조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

2) 민족내적 활동

가. 통일민족국가 실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회계층 즉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중소기업가, 혁신적 경영계층 및 청년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민족통일주체세력을 사회민주당을 구심점으로 형성하면서 이때까지 구호나 감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온 평화통일운동을 실질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4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민족분단시대를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교착상태만을 되풀이 하는 남북관계를 타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에 있는 사회민주당에 남북사회민주당위원장 회담을 공식으로 제의하며 남북한 당국은 이에 수반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 1987. 10,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 「나의 입장과 나의 포부」중 통일문제 관련부문

〈 통일은 가능할까? 〉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다그쳐온 조국의 통일은 정말로 가능한가? 나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여건이 필요하다. 올바른 자세는 통일을 위한 정열과 냉철의 겸비이며, 필요한 여건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체제의 확립이다.

먼저 전자부터 설명하겠다. 분단 40년의 쓰라림과 동족상잔을 포함한 수 없는 불행들, 무엇보다도 타의에 의해서 억울하게 갈라진 조국의 양분상태, 그리고 통일이 있어야만 이 민족은 완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절실한 진리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제쳐놓고서라도 통일부터 이룩해야 겠다는 열망과 의욕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너무도 냉혹하다. 이질적이고 적의에 찬 남북체제간의 대립, 백만이 넘는 대군을 배경으로 한 위험한 무력집중 현상, 한반도를 둘러싼 어느 대국도 통일을 진정으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지 않는 현실 등을 볼 때 통일은 한낱 허탈한 낭만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통일에의 그치지 않는 정열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치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임한다면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과업만이 아니라 머지 않아서 제1단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을 다루어 온 과거의 두 지도자의 자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한 사람은 김구 선생이요, 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다.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이 길이 존경할 절세의 애국자요, 우리의 스승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자세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가능의 길을 모색하는 자세의 결핍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그의 한없는 정열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구 선생이 귀국해서 돌아가시기까지 4년 동안 그 앞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양자택일의 가능성 밖에 없었다. 하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남조선 단독정부의 대통령이 되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북과의 통일을 추진하거나 하는 양자 중의 하나의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자존의 화신(化身)이었던 그분은, 신탁통치를 필사반대했으며 국토 재결합을 일각여삼추로 갈망했던 그분에게는 남조선 단독정부란 당치도 않은 반역이었던 것이다. 그분이 단신으로 38선을 넘어 북녘땅을 찾아간 모습은 비할바 없는 애국자의 지고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현실의 냉혹함을 중시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의 실패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이승만 박사는 일찌기 1946년부터 남조선 단독정부를 주장하고 공산주의자와의 통일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배제했다. 그에게는 통일에 대한 열정은 찾아볼 길이 없고 다가오는 냉전시대를 내다보는 냉철하고 영악한 현실 정치인의 계산만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일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바쳤다는 이박사가 귀국 후 1년이 채 못돼서 그리 쉽게 통일을 포기할 뿐 아니라, 반분(半分)된 나라에서 자기의 독재적 권력의 확립에만 급급하다 불행하게 마친 그의 일생을 생각할 때, 그리고 통일이라 하면 동족상잔의 무력통일 밖에 내세우지 않았던 그의 태도를 생각할 때 이 민족의 불행의 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이다.

통일을 성취한다는 냉철과 정열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통

일을 운운함에 있어서 북한 공산정권의 야망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는 해방후 40년 동안 남한의 적화(赤化)를 결코 포기한 일이 없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6•25의 전쟁도 서슴없이 도발했다. 6•25전쟁에 실패한 이후에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제2월남화 하려는 야망과 공작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들의 이러한 야망 달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의 존속은 오히려 필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긴장을 조성하고 때로는 통일에의 구실을 주면서 독재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는 것은 당연한 야심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야심을 포기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미 지적한 통일을 위한 둘째 문제, 즉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체제의 확립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회복 없이는 통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국민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을 때만 북한 공산주의자는 남한 공산화의 야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고, 남북간의 항구적인 평화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한 공산화의 야심 포기와 항구평화의 수립이 실현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에의 착실한 제1보를 내딛을 수 있다.

우리는 독일하고 달라서 영구분단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미·일·중·소 어디에도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그리고 남북 양 당사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통일은 의외로 그 제1단계의 출발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 1연방 2독립정부의 통일방안 〉

나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제1단계의 구상을 미국에 있는 동안에 「공화국연방제」라는 표현 아래 발표하고 한국문제에 관심있는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다. 앞으로 이 안은 남북통일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나의 「공화국 연방제」안은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북한의 안은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하여 남북 양 지역 정부는 하나의 자치정부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도·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그들은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군대와 외교의 권한도 중앙정부가 장악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사실상의 완전 통일로서 현단계에서는 그것이 실현 불가능함은 너무도 명백하다. 내가 주장하는 공화국 연방제는 이러한 북한의 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남북 어느 쪽도 불신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실현 가능성이 큰 안이라고 믿는다.

즉 남북 양쪽은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토대 위에 남북 양 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 양 정부는 서로 상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직접 또는 연방기구를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주력한다. 일방 남북 양 독립정부 위에 전기의 중앙 연방기구를 설립하고 여기에 남북의 대화와 교류의 증대를 위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한다. 즉 남북간의 문화·학술·체육·언론·경제, 그리고 인도적 교류를 중앙 연방기구가 장악하고 남북의 대표가 모여서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 회복, 그리고 평화체제의 증강과 완전 통일에의 길을 모색하는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이리하여 남북은 제1단계의 융통성 있고 안심할 수 있는 통일체제를 출발시킬 수 있다. 통일체제는 법적으로 볼 때 영연방 제도와 비슷하면서 그보다

는 훨씬 더 긴밀하고 완전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이러한 「1연방 2독립정부」체제 밑에서 남북은 공존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면서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의 조정이 증진된 만큼,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 점차적으로 이관해 가서 마침내는 완전한 통일정부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로 보여진다. 북한의 연방공화국제도 이런 단계에 가선 고려될 수 있는 안일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민주정부만 수립되면 이상 제안한 제1단계의 완만한 통일체제는 머지 않아서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이 필요한 절대 조건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완전 통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나의 통일안은 미흡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일의 열망만 가지고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교훈을 명심하고 정열과 냉정한 이성의 결합체라 할 수 있는 이안에 대해서 뜻있는 동포들의 심사숙고와 고견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나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나는 현재의 남북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인도적 교류, 경제협력, 그리고 국회회담의 상당한 진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진전은 부분적인 현상일 뿐이고 참된 통일에의 연결은 물론, 이북 공산주의자의 남한 적화야망의 완전한 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오직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만이 참된 평화와 통일에의 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 1987.10.12,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 「민족통일을 위한 나의 구상」,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본인은 민족의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읍니다.

최근의 젊은 세대가 분단 43년이라는 기원을 쓰고 있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너무도 통일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된지 43년에 이르고 있고, 이 시대가 분단시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통일민족국가가 우리의 민족사적 지상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 시대를 통일운동의 시대라고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민주화가 실현되고 민주당 정권이 수립된다면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새로 들어설 민주당 정부는 통일문제에 임하는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는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던 반민족적 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통일논의에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국민의 계속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통일문제를 구체적인 국민생활의 향상과 결부하여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문제에의 접근은 온 국민의 무조건적 열망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국민생활에도 여러가지 이익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특히,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내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은 독재정권을 유지·강화시키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민족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신정부는 올림픽회담의 개최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남북 정부 사이에는 수백건의 제의와 역제의가 오고 갔으며, 합의와 결렬이 교차하면서 오늘의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읍니다.

7.4공동성명은 그것이 정부간의 합의이며 그 내용이 건설적, 전향적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합의과정에 도덕적 흠결이 있고 그 이후 양국정부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실효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현정부의 통일정책은 81년의 남북책임자 상호방문회담, 82년의 민족화합 통일방안, 그리고 최근의 외무장관회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구체적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의 교착상태가 타개될 가능성 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이에 본인은 차기정권을 담당할 민주당의 총재로서 그동안 본인이 밝혀온 통일론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6대원칙과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6대원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가 自主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통일정책만을 제시하고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주장만을 해옴으로써 외부로부터 긴장완화와 남북접촉을 위한 압력을 초래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만아니라 자칫하면 남은 북을, 북은 남을 비방하는 홍보전략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더 말할나위 없이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제적 환경을 자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가 和解의 원칙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소산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이질적인 이념과 제도의 충돌이 그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단이 만들어놓은 남북의 양정권은 이미 사실상의 독립정부로서의 체제와 실력을 갖추어 막

강한 군사력을 갖고 대결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을 제도상의 변경으로만 보고 연방제, 또는 단일정부수립 등을 문제의 촛점으로 삼아왔던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휴전선을 가운데 놓고 대치하고 있는 양체제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가 段階的 成就의 원칙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하겠다고 40년동안 서로 맞서 오면서, 통일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전쟁상태를 계속해 왔읍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온 남북의 전쟁관계를 평화관계로 전환시키고 난 뒤 평화적인 협조의 범위와 심도를 넓혀 거기서 생기는 협조관계가 정치적인 협력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민주개혁 단행 및 대 북한 민주개혁 촉구, 점진적 교류 및 쌍방의 실상공개, 비정치분야 협력 및 상호 자유왕래 등으로 긴장완화와 화해의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정치외교분야 협력 및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째가 平和의 원칙입니다.

통일과업을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평화적 방법을 택하겠다는 의사의 합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쌍방이 평화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치와 안보의 여건조성이 더욱 필요합니다.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 그리고 쌍방이 혁명이나 선동으로 내부적인 정치변화를 일으켜 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상호비방이나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가 轉換의 원칙입니다.

남북의 대립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다시 전쟁이 재연될 지 모른다는 준전시 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 양측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 군사력이 국토방위라는 군사적인 임무를 넘어 국내의 정치

사회 제부분에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쌍방은 내부체제를 평화태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민주주의 회복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나 민주정권 담당자는 의식적으로 내부의 여건을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와 보조를 맞추어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가 民族 大參與의 원칙입니다.

남북 양 체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조의 길을 넓히는 작업은 정부 당사자들의 책임이지만 남북간에 흩어져 있는 겨레 사이에 동족애와 동질성을 키워 나가는 작업은 국민 모두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해는 바로 이와같은 개인적 교류와 유대를 증대시키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남북간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여행과 통신의 자유를 통해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1단계는 국내의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북한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민선, 민간정부가 수립된 후 통일을 위한 대화의 기본적 전제인 남북한의 민주화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내정개혁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개혁을 단행하고 북한 정권에 대하여서도 민주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논의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일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단계는 모든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를 촉진하고 쌍방의 실상을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서신교환, 체육교류, 고유문화 및 민속교류, 성묘단 교환, 친지방문, 취재와 보도 및 관광의 단계적 허용, 간접교역 증대, 직접교역 모색 등 교류와 실상공

개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과 신뢰회복을 기할 것입니다.

제 3단계는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왕래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민족의 뿌리 및 역사찾기 운동의 공동전개, 대외 공동공연 및 전시회의 개최, 관세철폐를 통한 직접교역 추진, 대외 공동 관세율의 적용 모색, 기술훈련 및 기술제휴, 직접 및 합작투자의 추진, 교통통신의 자유이용 및 왕래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경제와 문화예술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강화함으로써 상호 자유왕래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4단계는 정치, 외교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상호이해의 기반위에서 대 비동맹 및 유엔 외교의 공동보조를 모색하고 남북한의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5단계는 一民族 一體制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앞단계들이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실천되어, 온 민족이 상호협조체제의 가치와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 위에 공동체로서의 완숙기를 거친후, 준비된 통일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남북한 주민들의 최종 확인을 거쳐 내외에 一民族 一體制의 한민족공동체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6대원칙과 이에 입각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계속 연구 보완해 나갈 것이며, 집권후 보다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7. 10. 12

統 一 民 主 黨

總裁 金 泳 三

□ 1988.2.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제 37 회총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우리는 먼저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한반도의 역사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속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되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의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창조주(창 1:1)이심을 믿으며, 모든 인간이 당신의 자녀로 초대받았음(롬 8:14-17, 갈 3:26, 4:7)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엡 2:13-19)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눅 4:18, 요 14:27)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행 10:36-40)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 5:9)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요 14:18-21, 16:13-14, 17:11)는 것을 믿는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골 3:15)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마 5:23-24)임을 믿는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 앞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남북한의 정부책임자들과 우리 민족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전통〉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백여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려고 애써 왔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성경말씀이 명하는 대로(눅 4:18-19)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자주의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일제에게 노예가 된 한국민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선교하여 왔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의미를 노예처럼 굽히고 복종하면서 얻는 안일이나 안정에서 찾지 않았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사 32:17)이어야 했으며 민족의 독립이 없거나 인간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렘 6:13-14)일 뿐이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때의 한국교회의 평화운동은 곧 민족의 독립운동이자 노예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역사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민족해방 운동이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참여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말살 정책에 저항하였고, 국가주의를 종교화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45년 남북 분단 이후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보아 왔다. 또한 북한을 떠난 이산가족들과 교우들을 교회의 품안에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왔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나타난 군사독재 정권은 안보를 구실로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성장 논리로써 노동자와 농민을 억압했으며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앙으로 저항하여 왔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인권 및 민주화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민족분단의 현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구조와 이념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이념적 대결과 상호분쟁 속에서 한국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국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북 분단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민족을 속박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명목하에 설정된 남북 분단선은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에는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는 지난 40여년간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어 왔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으며, 국제적 갈등은 극대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지역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되어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에서 남한군 22만명, 북한군 60여만명, 중공군 1백만명, 미군 14만명, 유엔군 1만 6천여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전쟁 중에 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포함하면 2백 50만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희생되었다. 남한 50만과 북한 3백만의 민간인 사망자를 합치면 6백만의 피가 이땅에 쏟아진 것이다.(브리태니카 백과사전 1970년도판 통계임) 그리고 3백만명의 피난민과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

6·25를 전후하여 북한 공산정권과 대립했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죽음을 겪어야 했으며, 수십만의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남

한으로 내려와 피난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한국전쟁 동안 적지 않은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납치되었고 참혹하게 처형되기도 했다. 한편 공산주의 동조자들은 이념전쟁의 제물이 되었고 '부역자'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는 계속해서 동서냉전체제의 국제정치적 갈등과 반목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간의 군비경쟁과 상호불신, 상호비방과 적대감정도 점차로 증가되어 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었고 민족의 화해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졌던 '휴전선'이 영구불변의 '분단선'처럼 되면서 남북 분단의 벽은 높아져 갔고 남북한의 두 체제는 단절과 대결 속에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었고, 북한병력 84만과 남한병력 60만을 합하여 근 1백 50만 군대가 무장대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겨냥되고 있는 핵무기는 이 땅을 없애버리고도 남을 정도의 가공할 파괴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양 체제에서 모두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인권은 유린되어 왔으며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되어 왔다. 그리고 서신 왕래도 방문도 통신도 두절된 양쪽은 한 땅덩어리 위에서 가장 멀고 이질적인 나라가 되었다. 남북한의 교육과 선전은 상호비방 일색이며 상대방을 상호 체제경쟁을 통하여 약화시키고 없애야 할 철천지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민들은 동족의 생활과 문화에 대하여 서로 무지할 뿐 아니라 서로 알아서는 안되는 관계로까지 길들여져 왔다. 양 체제는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가장 무서운 원수로 인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길은 1972년 이른 바 7·4공동성명이 계기가 되어 트이기 시작하여 대화와 협력과 교류에 희망을 갖게 하였다. 1985년에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재개되고 이산가족 고향방문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는 극히 한정되었으며

대화와 협상은 끝없이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 공산정권에 대하여 깊고 오랜 불신과 뼈에 사무치는 적개심을 그대로 지닌 채 반공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집착해 왔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면서 분단체제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어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1. 한국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 냉전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마 22:37-40)을 어기는 죄를 범해 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방지의 명목으로 최강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시 33:16-20, 44:6-7)를 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서 냉전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민족 예속화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롬 9:3)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2.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히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통일 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하기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

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출 20 : 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행 4 : 19)이다.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요 13 : 14-15, 4: 20 - 21)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요 13: 17)이다.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엡 2: 14- 17)을 실천해야 하며, 동족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해야 한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으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바로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한다. 통일은 곧 민족의 삶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갈등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마침내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4년 이래 수차에 걸친 협의 모임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2년 남북간에 최초로 합의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1) 자주, 2) 평화, 3)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이 통일을 위한 모든 대화 및 협상, 실천 속에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

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나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의 시행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도주의적 조치의 시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2.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는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별히 분단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 구성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언〉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당국이 성의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40여년간 분단체제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희생되어 온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느 곳이든지 당사자들이 살기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 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년중 일정한 기간 동안(추석이나 명절 같은 때) 자유롭게 친척과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 민족 분단의 고정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과오나, 가족이나 친척이 특수한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즉각 타

파되어야 한다.

2. 분단 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 정부당국이 남북한 양쪽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일논의를 독점하여서는 안되며, 남북한 국민이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일문제의 연구 및 논의를 위한 민간기구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여야 하며,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인권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민족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남북한 국민이 각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한 국민 스스로가 같은 운명체로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확인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굳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남북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상호신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신과 적대감을 낳는 모든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한다. 신뢰조성을 위한 모든 조치들은 분단극복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간의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거나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가)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공격적 성향을 없애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 배타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을 상호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서로의 실상을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류, 방문, 통신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에 관한 학술분야에서 교류와 협동연구를 추진하고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분야에서도 서로 교류하여야 한다.

라)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는 민족의 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호이해 증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최대로 개방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하여

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고 불가침조약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협상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한다.

다) 과다한 군사력 경쟁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역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협상에 따라 군사력을 감축해야 하며 군비를 줄여서 평화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라)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5. 민족 자주성의 실현을 위하여

가) 남북한간의 협상이나 회담, 국제적인 협약에 있어서는 주변 강대국이나 외세의 간섭에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

나) 남북한 양측은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국제연합이나 동맹국들과의 관계수립이나 협약에 있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합의와 공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골 1:20)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간구원과 해방을 위한 선교사역이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고백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이 비록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한분이신 하나님, 한분 그리스도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고전 12:12-26)을 믿는다.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최근 몇년간, 놀랍게도 우리와 떨어져 있던 북한사회내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려옴으로써 우리의 이 같은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다시금 이 한반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사역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는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입각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 분단의 고통에 동참하고 통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선포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한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눅 4:18-19)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레 25:8-10). 희년은 '해방의 해'이다. 희년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계약을 지키는 행위이다.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내외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샬롬을 이루어 통일된 평화의 계약공동체를 회복하는 해(레 25:11-55)이다. 한국교회가 해방 50년째인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는 것은 50년 역사를, 아니 전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믿으면서 평화로운 계약공동체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오늘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희년을 향한 대행진은 희년 대망 속에서, 민족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선교에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희년을 향한 대행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갱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가) 평화와 통일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교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일치를 위한 선교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 희년을 선포하는 한국교회는 '참여'를 제약해 온 교회의 내적 구조

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청년을 포함하는 평신도의 선교사역에의 참여는 과감하게 개방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3.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평화와 화해의 결단을 하는 신앙공동체로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폭넓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에 관한 성서연구와 신학연구 등 평화교육을 널리 보급하고 각종 신학연구기관과 기독교교육기관은 이를 위하여 정보교환과 연구를 촉진시킨다.

나) 한국교회는 민족통일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분단구조 및 분단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단문제에 관한 신학적 인식을 심화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는 통일교육을 촉진시킨다.

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결단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넓히고 이념적인 대화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연구와 교육을 촉진시킨다.

4.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선포하는 희년축제와 예전(禮典)을 통일하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실천해 나간다.

가)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기념하는 '평화와 통일기도주일'을 설정하고 예배의식을 개발한다. 이 예배의식에는 통일을 위한 기도, 분단의 죄책고백, 소명과 결단, 분단의 희생자들과 분단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민족화합을 위한 신앙고백, 말씀선포(희년선포), 찬송과 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성례전 등이 포함된다.

나) 남북한 교회의 상호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와 통일 기도

주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

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왕래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남북으로 헤어진 친척과 교우, 친구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5. 한국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희년'의 선포는 신앙고백의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개교회 차원에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앙고백적 행동과 실천을 가맹교단뿐만 아니라 비가맹교단과 천주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소명은 한반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과제이므로 한국교회는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북한 교회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동북아시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건이므로 한국교회는 한반도 주변의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 4개국내의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세계교회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 한국교회는 타종교 및 타운동들과의 대화를 확장, 심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식을 촉진시켜 공동연구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8.3.20, 중립화통일

— 최봉윤 (재미학자)

〈 중립화와 과도연방공화국 수립 〉

한반도 영세중립은 우리 민족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가 맺어야 하며 이 열매를 주변강대국이 따먹지 않는다는 약속을 서로 할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런때가 지금 국제정치형편으로 언제 올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야만 한반도 독립과 동양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어떤 정치학사들 중에서는 남북간에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통일정부 모형을 다음과 같은 7개로 제시했다.

①정치조합모형 ②연방제모형 ③연방국모형 ④무력해방모형 ⑤적대적 공존모형 ⑥중립적 평화공존모형 ⑦동맹적 공존모형, 이상 7개모형 중에서 최근 북한당국자가 제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연방제모형이라 하겠고, 남한당국자가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외형적으로 보면 정치조합모형 같이 보이나 실은 독일과 같은 평화공존모형에 가깝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과도연방공화국수립을 제의한다. 연방제를 과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 자명하다. 해방후 40년 동안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경제사회제도가 존재하여 왔다는 엄연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어느 한쪽이 사상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마음의 자세 위에서 조국통일이라는 공동목적으로 잠정적 과도연방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명제이므로 사상과 제도가 민족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 사회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고 다른 제도도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일이 흐르면 젊은세대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소화, 혹은 조화시켜 우리겨레에 알맞는 정치이념과 경제체제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과도연방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에서 동수의 헌법초안대표 회의를 구성한다. 대표는 현존 양정부대표와 국민대표의 동수비례로 선출한다. 헌법에는 이하의 기본원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①주권재민사상 ②국민의 기본자유와 평등보장 ③국민의 발의권·결의권·소환권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체제 ④국민의 복지향상을 기본으로 한 경제체제 확립 ⑤민족문화발전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도 실시 ⑥한반도 영세중립화 외교정책 수립 ⑦영세중립통일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재편성과 현존 남북군대를 10만으로 줄이며 군부는 정치문제 간섭을 절대 금지함 ⑧지방자치제 실시 ⑨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억제 균형을 지키면서 협력, 조정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한 3권분립체제 확립

둘째, 연방정부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가) 2원제 입법부 조직

연방공화국 아래 현 두 남북지역의 이념과 제도하에서 우리 겨레를 대표하는 연방의회—입법부를 구성한다. 그 구성은 남북한에 현존한 각 9도를 동수 "1도 3명씩" 대표를 민선해서 민족연방 상원을 조직한다. 남북 두지역 인구비례로 민선된 대표로 민족하원을 조직한다.

나) 행정부 조직

상하 양민족회의에서 5년단임제로 다수가결투표로 선거한다.

첫번 행정수반은 상의원에서, 두번째 수반은 하의원에서 선거한다. 단, 행정수반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못하는 남북 전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야 한다. 행정수반은 연방공화국을 대표하며 행정부조직과 각 행정책임자 임명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결정한다. 행정수반은 연방정부와 국가를 대표한다.

다) 사법부 조직

연방공화국 사법부판사 7명을 상하원에서 다수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재

판장은 최고투표를 얻은 자로 한다. 재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재선할 수 있다.

라) 통일정책위 구성

통일정책위원 17명을 상하양원에서 민간인 8명, 정부측 9명 비례로 다수투표로 선출하여 통일헌법제정을 5년이내로 초안해서 양원의 다수가결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후 3개월 이내로 일반 국민투표에 붙이되 다수가결되면 그 헌법에 의하여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 출처 : 월간「민족지성」88년 4월호

□ 1988.3.20,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박종화 (한신대교수)

1. 전제하는 말

이 글은 한국 기독교의 입장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분단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민족의 통일염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당위적 귀결을 향한 주체적 결단과 실천은 분단을 넘어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공동체의 실천적 삶의 과제이다. 그것은 민족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기독교'는 분명히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여 동시에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라는 이중적 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자임한다. 민족공동체는 민족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기에 단일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직능과 계층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기독교라는 하나의 구성체가 보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점 역시 이러한 다양성속의 일치를 배경으로 삼는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독교라는 구성체의 한계와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여타의 구성원과의 공생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보면 하나의 동일집단적 성격을 지니지만 대내적으로는 자체의 조직과 신조 내지는 역사적 전통이 너무도 다양하여 동일한 민족적 과제인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보는 시각과 해결방안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신자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대표성을 물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른 공식적 입장과 정책방안을 논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한국기독교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KNCC)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문제를 보는 입장과 실천적 과제 천명에 있어서도 KNCC가 논의하고 공식으로 채택한 것

을 바탕으로 삼는다. 경우에 따라 KNCC를 구성하고 있는 6개 개신교 교단이 각기 공식적으로 채택한 통일에 관한 문서와 입장을 보충자료로 삼을 것이다.

물론 KNCC나 그 회원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서나 선언은 일종의 합의사항이다. 일단 합의된 공식견해는 수많은 개체교회가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속에서 실천되고 반성되고 수렴된, 말하자면 삶으로 확인된 공동체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전단계적 조치임을 전제로 한다.

2. 통일논의의 전개과정과 지향점

KNCC가 분단극복과 통일성취를 신앙고백적 결단과 당면한 선교적 과제로 공식 채택한 것은 1982년 자체내에 "통일문제 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조직하고 통일문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가기로 결정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전진적 연구나 정책수립이 거의 성사되지 못했다. 공개적인 통일논의 자체가 금기사항으로 위압당하고 있었음은 물론, 정책협의회 모임 자체가 정부 당국의 방해와 탄압으로 햇빛을 볼 수가 없었다. KNCC의 회원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1983년 총회에서 "통일문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고, 그 이듬해 총회에서는 각도별 노회에도 똑같은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키로 결정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차원 내지는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 연구와 논의가 정부당국의 위압속에 거부당해 왔었다. 그것은 통일논의를 정부당국의 전유물인양 금기사항으로 강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정권안보 내지는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 현실때문이었다.

민족적 주체성이란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통일논의의 금기를 깨고 민간차원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추진한 계기가 바로 "도잔소회의"였다. 1984년 10월 29일～11월 2일 일본의 도잔소(東山莊)에서 세계 교회협의회(WCC) 국제문제위원회가 주관한 "동북아

시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협의회(Consultation on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1]가 열렸다. 이 협의회는 1983년 카나다 벤쿠우버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제6차 총회가 결의한 평화와 정의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적극적 공헌을 실천하는 첫보 후속조치로 모인 것이지만 그것이 한국의 KNCC의 요청과 발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함께 논의되었지만 주의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열망의 문제였다. 국내가 아닌 국외의 장소를 빌었으나 한국 기독교의 통일에 관한 신앙고백적 선교적 결단과 책임을 국제회의를 통한 결의로 천명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한국측에서 상황보고와 함께 "한반도 분단현실" 및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본 통일문제" 발제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입장이 제기되었다.

이 협의회는 국내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국제대회를 플래트폼으로 하여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용으로 보아 그것이 KNCC의 통일문제 접근의 최초의 공식적인 출발로 보아야 한다. 필자도 동협의회의 참석자로서 이 점을 개인적인 고백으로 확인하는 바이다.

도잔소협의회가 제시한 통일문제 접근과 기독교의 가능한 활동방향을 5일간의 협의끝에 채택한 공동결의문을 통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2]

도잔소협의회의 공동결의문은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과제를 70년대에 벌인 인권과 민주화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과제로 정리

주1) 도잔소 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채택된 선언과 자료는 WCC/CCIA(편),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 Prospects for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WCC/CCIA, 1985.1)로 출간되었다. 이 자료집의 결의문 부분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통일문제연구원(편)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1984.10~1987.5) 7-11면에 번역되어 나와 있다.

주2) 위의 자료집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 pp.8~15와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 pp.7-11에 실려있다. 중요한 것은 본 공동결의문의 3/4가량이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성취 곧 세계의 평화, 정의 실천에 초석이 되는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고 먼저 6가지의 공헌가능한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분단된 이산가족끼리의 접촉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예 :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적십자사, 유엔, 비동맹국들)의 활용을 적극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일논의에 국민모두의 주체적인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기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일환으로 도잔소협의회같은 성격의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째로 한반도라는 상황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기독교의 행동반경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변 동북아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교회들이 체험한 바를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는 점이다.

네째로 남북한 상호간의 뿌리깊은 오도된 적대관 및 적대관계 극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투적인 편견과 강요된 적대관 및 선동적 반제국주의론의 과장과 무기화된 반공주의라는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도적 참여에서 소외되고 손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어온 청년층과 여성층의 광범한 참여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로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적대관을 가장 첨예화시키고 있는 군비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겨냥하거나 배치된 모든 핵무기의 철거를 위한 운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몇가지 과제를 전제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상호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의 두절 내지는 정보교환의 방해가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남한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 구체적인 조치로 세계교회협의회가 아시아기독교협의회와 협력하여 한국교회와 연대를 맺고있는 각국의 교회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북한당국 및 북한교회와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도잔소협의회의 결의에 따른 노력들이 몇가지 형태로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세계교회협의회 실무대표단이 1985년 11월 북한을 공식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를 서울에서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에는 남한의 경우와는 달리 현재 가정예배처 형식의 교회가 평양에는 30～40개 정도가 있고, 조선기독교연맹은 3년간의 신학교육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20여명의 목사를 배출했고, 찬송과 성경을 출판해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천주교신자가 약 8백여명,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1만여명 가량이라는 조선기독교연맹 당국의 진술을 정보로 보고한 바 있다.[3)]

이와 함께 특기할 일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알선한 남북한 교회대표자들의 만남이 이룩된 점이다. 1986년 9월 2일～5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한 조선기독교연맹의 통역관을 포함한 5명의 대표단과 한국 KNCC측의 6명의 대표단이 세계교회협의회 대표단과 함께 첫 비공식 접촉을 갖고 양분단교회 상호간의 통일성취를 위한 기독교적 공헌에 합의하고, 성만찬 예식을 통한 서로간의 결의를 다진 점이다.[4)]

그 외에도 도잔소협의회 정신에 따라 두차례에 걸친 미국교회협의회의 북한방문과 그 보고, 일본기독교협의회의 북한방문과 그 보고, 그리고 KNCC 및 KNCC의 회원교단들과 미국장로교회, 미국교회협의회, 독일교회 등과의 상호협의회를 통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공동선언이 계속해서 나왔다.(이것들에 관한 내용이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에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주 3) 「WCC 북한 방문보고」(1985. 11.11～19)는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 18-21쪽에 실려있다.

4) Glion 회의의 만남과 내용은 WCC 월간지인 Ono World (No. 120, 1986 Nov) pp. 3～7에 특집으로 실려있고 동시에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 39-43쪽에 내용만 번역·전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약술한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기독교의 노력이 주로 국제관계를 통해 진척되어 왔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한 공개적 통일논의 분위기의 성숙과 함께 KNCC가 주체적으로 국내에서의 통일논의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통일문제 접근의 방향과 내용은 다음에서 논의하겠지만 특기할 만한 과정은 간략하게 언급해야 하겠다. 먼저 도잔소 협의회 이후 최초의 KNCC총회(1985. 2)는 "한국교회평화통일선언"을 공식으로 채택했고[4] 1985년과 1986년에 KNCC 주관의 통일문제 협의회를 2차에 걸쳐 주최했으며[5] 그 기간에 KNCC의 회원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수차례의 자체내 통일문제협의회를 거쳐 일차로 민족분단의 실상을 담은 연구자료를 개교회의 협의회 및 교육자료로 출간했고[6] 연이어 1986년과 1987년 9월의 총회때마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총회선언으로 채택한 바 있다.[7]

KNCC는 1987년 8월, 제3차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회를 개최하고[8] 한국교회의 통일문제 선언서를 작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작업을 위해 같은 해 11월과 금년 1월 두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통일문제연구원이 초안한 선언서 내용을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문안이 1988년 2월 29일 KNCC총회 결의에 따라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이것은 한국기독교가 만든 최초의 공식선언으로 평가될 성질의 것이다. 이와 함께 KNCC는 도잔소협의회의 후속 협의회를 1988년 4월 25~29일 인천에서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로 개최할 예

주 5)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자료집」 12-13쪽 참조

6) 같은 책, 14-17쪽, 31-38쪽 참조

7)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통일문제 연구위원회(편) 「분단의 원인과 민족공동체의 상실」 평화·통일자료 I (1986)

8)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 한국기독교장로회 「회보」 1986/11, 31쪽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 2" : 1987/11, 22쪽

정이다.

한국교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교회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한 국내개최의 첫 협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도잔소협의회가 국제협의회를 통한 한반도 통일문제의 공개적 토론의 시효였다면 인천협의회는 한국기독교가 통일문제를 주체적으로 논의하여 그것을 세계기독교의 공동관심사 및 선교적 과제로 채택케 한다는 의미가 부여될 것이다.

3. 통일논의의 신학적, 기독교적 입장

한국기독교가 통일문제를 놓고 취한 기본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9] 하나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명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①민족자주의 원칙, ②평화의 원칙, ③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여기에 기독교로서 두가지 원칙을 추가한 점이다.

첫째로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도 인간의 자유와 복지의 보장을 위해 있고 이념과 체제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와 조치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것이 유보될 수 없다는 인도주의원칙이고,

둘째는 통일논의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의 보장, 특히 분단체제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이면서도 의사결정과정에 항상 소외당해온 민중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민중의 참여우선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한국기독교의 민족통일을 향한 입장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인도주의, 민중우선이라는 5개원칙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기독교의 신앙고백적 내지는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평화와 정의라는 대원칙의 구조

주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편) 「제 3회 한반도 통일문제협의회 보고서」(1987)

적 받침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기독교의 존재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평화의 도구화에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의 내용은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땅"(계시록 21:1-3)의 실현이며 성령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와 정의와 기쁨"(롬 14:17)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실현이다.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된 평화를 파괴하고 저해하는 요인이 바로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이며,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성취하는 길이 바로 민족통일이라는 신앙고백적 확신이 통일문제를 보는 기독교의 기본입장이다.

평화를 통일과 접목시킨다해서 평화를 평화적 통일이라는 식의 통일을 위한 방법론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다. 평화는 통일의 방법인 동시에 통일의 목표라고 본다. 그것은 민족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느냐의 기본문제가 제기되는 때문이다. 민족분단이 현실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 곧 평화라는 삶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짓밟고 깨뜨리는 원인이기에 분단극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그것은 통일성취를 통한 평화의 정착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 곧 정치적인 민주화와 자유,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인 정의의 실현이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초석이고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화・자유・정의가 실현되는 평화라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반드시 정의를 내용으로 또 전제로 하는 평화인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시편 85:10-11)라는 말이나 "정의의 열매가 곧 평화"(이사야 32:17)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한다.

한국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민족통일이 바로 정의가 깃든 평화, 곧 정의로운 평화를 한반도에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한다. 앞서 제기한 5원칙가운데 인도주의 원칙과 민중참여 우선의 원칙이 담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다. 국가와 민족 또는 이념과 체제가 인간, 곧 민족공동체라는 집단적 인간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정의로운 삶의 보장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반대의 구조

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민족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라 해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수의 민중과 가장 고난받는 민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의 민중지향적 파당성은 배타적 파행성이 아니라 포괄적 적극성의 성격을 띤다. 특히 분단현실의 극복이 통일성취의 전제조건이라면 분단현실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층과는 반대로 가장 손해와 고난을 당하는 민중의 삶이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핵심적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곧 한국기독교 일각에서 점고되고 있는 민중신학적 관점을 왜 KNCC가 공식으로 채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요소이다.

4. 구체적 실천방안과 제안

KNCC가 채택한 통일선언은 먼저 통일운동의 한 주체로서 기독교가 취해야 할 전제를, 분단현실에 동참한 과오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죄책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외세의 강압과 자기이해에 의한, 그리고 민족내의 분단세력에 의한 비극적 민족분단을 기독교가 직접 동조했든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분단에 안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해준 과오를 고백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이다. 이것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분단현실에 몸담고 있는 평화의 도구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죄책고백, 다시 말해서 죄책고백적 행동을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KNCC의 통일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10]

주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1988. 2), 11-13쪽 참조

첫째, 대외적으로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건의사항은 다섯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분단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왕래 및 이주를 보장하고 친척, 친지들의 일시적 과오로 인한 후손들의 정치적·법적 부당한 대우의 철폐가 선행될 것.

② 국민적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당국의 정보 및 통일논의 독점을 포기하고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자유화 보장과 언론의 활성화 및 양심에 따른 비판의 자유 허용이 선행될 것.

③ 민족적 대단결을 위하여 남북한 상호간의 적대감과 공격적 비방과 욕설의 중단, 상호간의 자유로운 교류, 통신·방문보장, 학술과 문화 및 스포츠의 자유로운 교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실시할 것.

④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평화협정 체결후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회복이 확인되고 한반도 전역에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가 이루어질 것, 한반도를 겨냥한, 그리고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요구한 점.

⑤ 민족 자주성을 위하여 외세의 간섭없는 남북한 상호간의 통일노력과 동시에 민족공동체의 이익에 배치되고 분단 고정화에 기여하는 일체의 대외조약과 협약을 수정내지는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대내적으로 한국기독교가 스스로 담당할 과제는 다섯가지로 요약된다.[11]

① 민족분단 50주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을 축하할 수 있는 "해방과 희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차적, 단계적 구현방안을 마련하는 일.

② 희년을 향한 단계적 통일운동에 있어서 먼저 분열된 교회의 일치를 성취시키며 교회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내적구조를 민주적 개방체제로 갱신하며,

---

주 11) 같은 선언서, 13-23쪽 참조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예언자적 사명을 심화시키는 일.

③ 평화교육과 화해교육을 위한 자료와 교과과정을 교회교육훈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출간하고 실천하는 일.

④ 화해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일"을 설정하고 지키며, 이를 위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남북한교회 공동으로 작성하는 일.

⑤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한 교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의 형제교회들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 등이다.

이상의 간략한 과제설명을 통해서 한국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민족통일에 대한 입장과 실천해야 할 과제를 엿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앞서 처음에 제기한대로 기독교의 통일선언을 통한 입장발표는 결단과 결단적 행동을 위한 합의사항이다. 아직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경험된 합의적 삶은 아니다. 물론 통일문제의 인식과 실천과제가 더욱 보강 내지는 확대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더라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한국기독교가 받고 있는 평화·통일에의 신앙고백적, 선교적 사명은 이제 기독교 자체의 삶의 방향과 존재이유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리라 믿는다.

* 출처 : 월간「민족지성」 88년 4월호

□ 1988. 3.29, 한겨레민주당 창당대회 기본정책중 통일정책관련 부문

〈전 략〉

조국통일의 완수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과제이다. 조국의 분단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자들의 분열책동과 미소 양 대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고착되었다. 한민족전체의 참여에 의해서만 가능한 조국의 통일은 대다수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권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2년의 유신체제 성립과정에서 우리는 정권이 주도하는 통일논의 허구성과 정부 주도하의 통일논의의 한계를 똑똑히 인식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전후 45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온 조국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2년의 "남북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천명한 바 있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3단계의 "한겨레공동체(Korean Commonwealth) 통일안"을 밝힌다.

1.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적 힘을 결집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보장한다.

2.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단계(제1단계)

(1) 남북한간의 경제적, 문화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각 분야별 공동협력기구를 광범하게 구성한다.

(2) 무역대결에 의한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남북한 균형있는 군사력 감축을 협의하는 평화회담을 개최한다.

(3) 남북 불가침협정을 체결한다.

(4) 미, 일, 중, 소 등 강대국간에 한반도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고 중립국 감시인단의 감시아래 남북 쌍방간 균형있는 군사력 감축을 단행한다.

(5) 남북 쌍방의 군사훈련 및 군비축소에 대한 상설적인 교차감시기구를 설

치한다.

(6) 남북 상호간의 상설 교차 주재기관을 설치한다.

(7)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3. 한겨레공동체 실현의 단계(제 2단계)

(1) 정부차원의 남북한 대표로 구성되는 한겨레공동체(Korean Commonwealth)를 구성한다.

(2) 핵무기의 제조금지, 실험금지, 반입금지의 비핵 3원칙을 실현한다.

(3) 한겨레공동체(Korean Commonwealth)의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한다.

(4) 한겨레공동체에는 대내적으로는 남북 각 지역 정부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대외적인 행동통일을 꾀하며 한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한다.

4. 평화통일의 단계(제 3단계)

(1) 정부차원에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까지 한겨레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2) 남북한 각 당사자의 외국과 맺은 군사적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내의 외국기지와 군사기지를 철거한다.

(3) 한겨레공동체 명의로 한반도의 중립화를 대내외에 선언한다.

(4) 한겨레공동체의 통일 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5) 남북 총선거를 통해 단일정부와 단일국회를 구성한다.

□ 1988.3.29, 서울대 총학생회 정·부회장후보(김중기·유재석),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 제 1 차 서 한

수신 : 김일성대학 청년학생

발신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2

김중기·유재석

일시 : 분단조국 44년 3월 29일

(전 략)

……의 그 구체적 일정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가) 88년 8월 1일에서 14일까지 북한청년학생은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남한청년학생은 한라에서 판문점까지 순례대행진을 하고

(나)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 한판 대동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가) 88년 9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나) 서울대와 김일성대 중 한곳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실무회담은 6월 10일 민주화투쟁 1주년기념일에 판문점이나 제3국(제네바)에서 서울대 대표와 김일성대학 대표가 만나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대해 4월 19일까지 회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단조국 44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2 김중기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2 유재석

□ 1988.4.15, 서울대 총학생회산하「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 제 2 차 서 한

보고싶은 형제,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학생 여러분!

며칠 전, 귀 대학 학생위원회가 서울대 청년학생의 민족화해와 민족대단결을 위한 두가지 제안을 공식 수락한다는 가슴벅찬 소식을 일간 신문을 통하여 접하였읍니다. 비록 외세에 의해 그어진 휴전선에 의해 오고갈 수 없지만, 뜨거운 혈육의 정을 느끼며, 기어이 오고야 말 한반도 평화와 민족 대단결의 그 날을 다시 한번 그리게 됩니다.

우리 서울지역 40만 청년학도는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곧 전국의 백만 청년학도에게로 확산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접수 거부로 답신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통일조국의 동량이 될 남과 북의 청년학도가 민족화해와 민족대단결의 선봉에 서야함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6.10 실무회담은 판문점에서 열기로 합시다.

2. 우리 남한의 청년학생은 "서울대학교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책임자로 하여 백만 청년학생을 대표하는 10명 내외의 실무대표를 5.30일까지 구성하여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실무회담에 관심있는 내외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였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읍니다.

3. 6.10 학생회담에서는 "국토순례대행진"과 "체육대회"의 안건을 매듭지음

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호관심사를 토의하였으면 합니다.

ㄱ) 남과 북의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남과 북의 청년학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ㄴ)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상호교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기에 청년학생 차원에서 가능한 상호교류에 대하여 (예 : 체육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

4. 4.19 혁명 2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남한의 청년학생은 4.18일 청년학도의 통일의지를 한데모아 고려대에서 출발하는 통일구국대장정을 거행합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북한의 청년학생도 4.19 혁명 기념주간에 "통일구국대장정"을 거행하여 남과 북 청년학생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읍니다.

비록 우리들의 통일구국을 향한 상호교류와 상호대화가 내외의 민족분열주의자들과 반통일세력의 방해와 탄압을 받을지라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이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두와 한라가 이어지는 그날을 그리며!

통일조국 44년

통일염원 44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 1988. 4.16, 「민통련」의장 문익환목사,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

저는 지금까지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피해왔읍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국민의 하나로서 통일의 구체적인 제안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히 제안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물론 이것은 잠정적인 제안으로서 국민의 토론에 실마리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이미 남과 북에서 제안된 것들을 가급적 공정하게 순서를 매겨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1. 평화협정 체결

이것은 35년 끌어온 준전시상태를 종결시키는 일로서 통일에 앞서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불가침 조약이나 점진적인 군축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겠읍니다.

2. 미군철수

이 문제도 평화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워낙 중대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일단 독립시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군철수에는 두가지 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북 공산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련의 남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쵸프의 시대가 막을 올리면서 미·소의 군사대결의 시대는 끝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주둔은 사실상 그 명분을 잃어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둘째, 미군의 한국 주둔이 공산군의 남침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그 첫째는 남한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 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는 정부는 외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외세에 의존하는 정부는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없고, 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는 민족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를 가로막는 정부라고 보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읍니다마는 남북한 불가침조약 체결입니다.

세째는 미·소·일·중 4대국 혹은 UN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작금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고 하겠읍니다.

3. UN 동시가입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읍니다. 3년 혹은 5년 정도 시한부라면 연방제 통일에 이르는 긴장 완화의 과도적인 단계로 이를 거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4. 연방제 통일 제 1단계

이것은 그동안 김대중씨가 주장해 오던 것으로서 당분간 군사와 외교까지 남과 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영제국의 연방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씨가 제안했듯이 이 단계에서 UN외교만은 단일화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5. 영세중립화 선언

연방제 통일과 함께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휴전선 이북이 소련 및 중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남이 미국 및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립화 선언만이 진정한 민족자주를 이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세계평화의 초석을 만드는 길입니다.

6. 연방제 통일 제 2단계

군사와 외교까지 통합하는 통일의 단계로서 이것은 김일성씨가 제안하는 연방제안입니다. 이 단계는 남북한의 현 사회 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남과 북 두단위로 각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호네커 동독수상이 제안하고 콜 서독수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고르바쵸프가 뒷받침해 준 독일 통일방안도 이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연방제 통일 제 3단계

이 단계는 남과 북이 두 단위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를 도단위로 세분화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연방제는 미국이나 소련의 연방제보다 더 철저한 지방자치제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다 실험을 거쳐 실정에 맞는 체제와 제도와 정책을 창출함으로써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경쟁하고 협조하는 창조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 젊은 세대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어깨에나 지워질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남과 북의 정권 차원에서나 민간차원에서나 대담한 사고의 전환과 제도 전반에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말하는 통일논의는 정략적인 것이거나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1) 44년에 걸쳐 우리를 지배해오던 분단 논리를 남과 북은 함께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국을 분단한 외세의 냉전 논리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남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굴종적인 자세를 떨쳐 버리고 민족자주의 논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4 공동성명의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천명하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2) 44년에 걸친 적대 불신 관계에서 자라온 흑백논리라는 괴물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편의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보아 주는 자세입니다. 이편의 장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편의 약점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서 피차 노력하는 겸허한 자세입니다.

3) 북은 자유를 향해서, 남은 평등을 향해서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해야 합니다. 북쪽이 공산세계의 대세에 발맞추어 자유를 향해서 궤도수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읍니다. 중공과 소련에서 채택되어 실험단계에 있는 민주적인 비밀투표 제도가 북쪽에서 채택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아직도 못들었읍니다. 집권층을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아직은 시작도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신앙의 자유는 상당히 회복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은 가정교회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의 희생 위에서 평등은 자유의 평등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건 물으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민이 한결같이 누리는 자유의 평등이 무시된 평등이 얼마나 절둑발이냐는 데 대해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더 과감한 궤도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북쪽이 자유를 향해서 궤도수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남쪽은 평등을 향해서 궤도수정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79년 GNP(6백 23억)의 25퍼센트가 10대재벌의 매출액이었는데 84년에는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GNP(8백 10억)의 72퍼센트, 거의 3배나 되었다는 겁니다. 부의 불평등은 자유의 불평등이요, 자유의 불평등은 자유의 부정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스스로 자유를 부정하기 보기는 우선 정권을 비판한 죄로 좌경·용공으로 몰려 징역을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언론의 자유를 계속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잘 드러낸다고 하겠읍니다. 연구의 자유도 극도로 억압되고 있읍니다.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정부라면,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통일논의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지, 정부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정권이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이 없는 국민의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4) 인적·문화적·경제적 교류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과감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통일논의가 속임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특히 88년에 성취해야 할 일은 남북한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또 남북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남북청년 학생 체육대회를 기어코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쪽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남쪽이 이에 부정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가지 환경조성을 해가면서 평화협정 체결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민족통일에 이르는 대장정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민중의 소리」제 50호(1988. 5. 7)

*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건설준비위원회」주최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88. 4. 16, 연세대노천극장)

□ 1988. 4.25 ~ 4.29, 세계기독교 한반도평화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청년의 입장"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 참가한 우리 기독청년들은 협의회 기간중 수차례 모임을 갖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분단의 원인과 책임 : 분단의 결정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하지만 미국을 분단의 주범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실패하여 분단체제를 성립시킨 우리 민족의 책임도 간과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극우 반공주의자와 친미사대주의자를 길러온 한국교회는 민족분단을 예비하였고, 그것을 고착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 하나님과 민족앞에 회개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나) 분단의 실현 : 민족적 예속,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문화적 소외, 이산가족의 아픔 등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민족분단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분단이 기본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와 신식민지 국가 사이의 민족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민족내의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계급문제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다. 즉, 분단은 기층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단의 비극은 해외동포들의 비극적 삶속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한 가족내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아픔은 민족분단의 결과에 다름아니다.

다) 통일의 내용 : 통일은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 즉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땅"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통일없이 평화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정의가 실현된 평화란 구체적으로 민족적인 자주, 정치적인 민주,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라) 통일의 원칙 : 우리는 ① 민족자주 ② 평화 ③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④ 인도주의 ⑤ 민중주체가 통일의 5대원칙임을 밝힌다. 이 원칙에는 통일운동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방법이 담겨져 있다. 통일운동의 극복대상은 민족분단을 지향하는 외세와 국내 매국세력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극소수의 매국세력을 제외한 남·북한 한민족 전체이며, 주도세력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구성원 대다수 즉 민중이다. 또한 외세극복과 평화실현에 이해를 같이하는 제3세계 민중과 제1세계 평화옹호세력도 통일운동의 연대세력임을 분명히 한다.

마) 당면한 실천과제 : 우리는 K.N.C.C가 선언한 희년선포운동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건의하는 바이다.

① 이산가족문제 : 이제까지 이산가족의 문제는 적십자사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만 이용되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이산가족의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남·북한 교회는 세계교회의 도움을 빌어 이 문제를 최우선적 선교과제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일본, 중공교회 및 C.C.A, W.C.C내에 이산가족 문제를 전담할 상설기구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이다.

② 올림픽문제 : 같은 피를 나눈 한겨레와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온 인류의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치룰 수 없다. 따라서 올림픽이 열리기에 앞서 반드시 남·북한의 화해와 적대관계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때에만 올림픽이 분단고착화가 아니라 민족통일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적 대단결의 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공동개최, 분산개최, 단일팀 구성 등 북한의 참여와 올림픽기간중 남·북한 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 공동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기를 건의한다.

③ 평화통일기간 선포 : 우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부터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을 합의한 7.4까지를 평화통일 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한다. 이 기간동안에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공동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일을 정하여 지키며, 7월 4일에는 한국에서 전세계 평화애호 세력이 모여 함께 평화행진을 할 것을 건의한다.

④ 반핵평화운동 : 한국민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운동에 한국교회와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함께 연대할 것을 건의한다. 특히, 동북아세아의 비핵지대화를 위해 자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핵무기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간의 긴밀한 연대운동이 시급히 요구되며,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는 이에 다각적인 도움을 줄 것을 건의한다.

통일염원 44년 4월 28일

"세계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에 참석한 기독청년 일동

□ 1988. 5. 9, 서울대「대학신문」, "통일을 위한 선언"

남북이 하나가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저지하고 미·일·한국의 삼국군사동맹체결 움직임을 격파해 「아주 큰 하나의」 자주적인 나라 건설을 염원하는 이땅의 6천만 민중에게 알립니다.

바로 민족통일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민족자주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어떠합니까?

정부부처중 국토통일원이 정부종합청사내의 「한직」으로 치부되고 산하기구인 남북대화사무국이 개점 휴업중이며 「통일연수소」가 해외출국자를 위한 반공강연장인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현 집권세력이 반통일적 입장을 가진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6일 민정당 당직자 인선내용을 보면 「평화통일위원장」에 5공화국의 하수인이었고 4.26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원외인사가 임명된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정부는 진정 통일을 위한 작업들을 성실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디딤돌이며 6천만 겨레의 소망입니다.

지난 4.26 총선에서 야권의 양김씨는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부분들을 정치적 이용물로 전락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읍니다. 평민당 김대중 총재는 13대국회 개원이후에 올림픽을 지지한다는 것과 통일론 전개의 「자제적인」 모습을 비치고 있읍니다. 또 분단올림픽이후에 광주민중항쟁과 5공화국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대기성 발언」을 하여 한국민중의 사활이며 생존권적 문제인 통일을 뒤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읍니다. 서글픈 시대의 단면입니다.

이제 우리 겨레도 제도정치권을 떠난 민중적 차원에서 통일을 향한 실천적 작업들을 결행해 나가야 합니다.

핵전쟁의 위협과 분단올림픽으로 인한 분단영구 고착화 문제로 미·일의 경제적 압력의 가중, 계속되는 메카시즘의 선풍 등은 한반도 남단을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급기야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게 하고 있읍니다. 통일논의는 더 이상 지연될 수 없으며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아픔, 남북과 동서간에 걸친 민중불신의 고통, 허리가 잘리어진 이땅의 사람들에게 애잔한 한으로 자리하고 있고 분단은 그 처절한 정서적 한을 넘어서 한반도 민중이 담지하고 있는 모든 모순의 총화로 발현하고 있읍니다. 식민지 남단 이땅의 청년학도들은 6천만 겨레와 함께 애국적인 관점에서 민중지향적 원칙과 함께 실천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는 통일논의를 민중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정부의 통일독점을 무너뜨리고 고 보수야당의 당리당략적 통일론을 올곧은 방향으로 견인해 내어 실현가능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단계 통일논의는 자주화 운동의 진실속에서 실현화될 수 있읍니다.

지난주 백기완씨의 통일연구소 확대개편은 통일을 기구하는 전민중적 염원의 결실이라 하겠읍니다.

또한 분단조국 44년 3월 29일 「사랑하는 동포 김일성대학 청년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 본교 총학생회장 후보의 「남북한청년학생교류제안」은 학내외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철책선에 찢기워져 분단의 쓰라린 고통에 신음하는 6천만 겨레의 진하디 진한 통한의 아픔이 흠뻑 배어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KNCC의 「민족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등 통일 5원칙을 밝힌 바 있읍니다.

이처럼 6천만 한민족의 피맺힌 통일염원을 담고 있는 이러한 논의들의 대중적 확산과 현 정부의 추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정 6천만 민중은 통일의 주체로 떨쳐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 **1988.5.14,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 "남한의 백만 청년학도가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3차공개서한"**

시리도록 아프게 짙푸르러가는 조국의 하늘과 산천초목이 그대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만나게 될 감격의 그 날을 더욱 가슴 부풀게 합니다.

북한의 청년학도들이여!

회한과 분노와 부활의 5월입니다. 반도 남녘 광주에서, 얼어붙은 동토에 민주를 꽃피우려다 2천여 동포가 두 눈 부릅뜬채 산화해가신 분노의 5월 압니다. 그 날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는 가시지 않았으며, 그 날 반도 남단을 적셨던 눈물은 마르지 않았으며, 그날 흩뿌려졌던 민주 영령들의 선혈은 아직도 우리의 두 눈에 생생합니다. 그 날 그 참극의 주역들이 지금까지도 권좌를 차지하고 앉아, 애국을 외치고 통일을 절규하는 애국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황량한 거리로 내몰고 있읍니다. 오해에서 이해로, 반목에서 화해로, 대립에서 단합의 길로 가려는 6천만 민족의 가슴 절절한 민족적 염원을 애써 막아보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동포여!

통한과 분노의 5월은 다시 살아 척박한 향토에 민주의 나무를 뿌리내리고, 기어이 자주, 통일의 새 세상으로 가려는 우리의 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세요, 시대적 요구입니다.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속에 찬란한 민족사를 아로새겨 왔던 우리 민족이 어찌 외세와 그 반역의 무리들의 반백년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겠읍니까? 한 강토에서, 한 갈래의 핏줄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전통을 이어내려온 우리 순결한 단일민족이, 민족분열자들이 남과 북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한다고 해서 어찌 물러설 수 있겠읍니까? 이제 우리 조국통일의 주역, 남과 북의 청년학도는 반목과 질시, 오해와 대립의 반백년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민족 대단합의 길에 6천만 겨레의 선구자로 나서야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고, 반목과 질시의 대결상태를 화해와 대

단합의 힘찬 발걸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비록, 우리 남과 북의 청년학생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6천만 동포의 민족적 염원은, 조국통일의 대의는 이를 능히 포용할 수 있읍니다. 참으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사소한 차이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청년학도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6.10남북학생회담의 성사에 대한 각오가 우리들 못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우리와 그대들이 힘을 합쳐 못할 일이 무엇이겠읍니까? 우리 남한의 청년학생들은 이미 1, 2차 서한에서 발표된 서울대 학생들의 제안을 지지한 바 있읍니다. 이제 이러한 염원은 서울대와 김일성대 학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청년학생 모두의 소중한 바램이요, 6천만 겨레의 소망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월 10일 판문점에서 만나 다음 "안"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남북 청년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대하여

둘째, 통일의 숙원사업인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호교류에 관하여

세째, 남북한 청년학도의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상호교류에 관하여

네째, 올림픽을 남북한 민족대화합과 평화의 대제전으로 치르는데 관하여

등 4가지로 안건을 제안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무작업으로서 남한 청년학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실무단의 구성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영남, 호남등 지역별로 2인씩 12인의 대표단을 6월 5일까지 구성하고 공개하겠읍니다.

둘째, 위의 4가지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와 그 성사를 위해 각 영역(이산가족, 학술, 문화, 체육)별로 사업을 마련하여 전국 백만학도와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회담일시는 6월 10일 오후 3시 (북한은 오후 2시임) 판문점이었으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에 대한 그대들의 견해를 적십자사 혹은 외신등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년학도의 이러한 의지와 결의는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애국 청년학도의 의지임을 확인하기에, 민족대화합의 민족적 부름앞에 더이상 주저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애국에 불타는 청년학도의 막중한 사명임을 자각하기에, 전국 백만학도의 통일구국의 단심을 모아 결연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힘차게 주장합니다.

애국에 투철하고, 정의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남북한 청년학도가 한 자리에 모여 통일에의 희망을 가득안은 가슴으로 으스러지게 껴안을 그 날을 고대하며, 북한 청년학도들의 건강과 건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일염원 44년 5월 14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1988.5.14, 전국민적 통일논의보장을 위한 대정부공개서한

— 「전대협」등 6개단체

44년 동안이나 갈라지고 찢기워졌던 민족의 혈맥을 잇고자 하는 6천만민중의 열망과 노력이 날로 드높아가고 있다. 특히 88년들어 남과 북의 화해, 올림픽의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 애국민중의 목소리는 높다. 이는 남과 북의 화해·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6천만 민족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 과제임을 자각한 민족사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와같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조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현 정권에 민족적 양심으로 공개서한을 발표한다. 이 서한을 통해 우리는 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열망을 학살로 진압하고, 사상초유의 부정선거로 또 다시 온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짓밟고 등장한 현 정권이 이제부터라도 거역할 수 없는 민족사적 조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에 의해 제기된 통일방안, 남북체육회담에서의 상호제안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수차례 북한에 의해 제안되었던 통일방안이나 제의가 국민앞에 전면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간신문 구석에서 '위장평화전술'로 치부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조국통일의 문제가 민족적 과제인 만큼, 상호제안되었던 통일방안이나 제의들은 전민족앞에 공개되어 노동자, 농민, 학생, 국회, 종교계, 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국민스스로가 판단하여 가장 올바른 길을 민족적 의지로 결집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올림픽의 공동개최를 둘러싼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회담내용이 전면공개되어 민족의 염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당국자간의 비밀접촉이 아니라 온 민족에 공개되는 형식으로 통일문제나 올림픽 문제가 논의되길 요구한다.

최근 남북한 고위급 비밀접촉설은 국민들에게 심한 소외감과 함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통일문제나 올림픽 공동개최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만큼 당국자들의 비밀접촉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전후한 남북한 비밀접촉이 유신독재로 귀결되어 악용된 선례를 알고 있다. 온 국민을 우롱하는 비밀접촉설의 상황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통일논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제악법,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민중의 통일논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반공국시〉는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거기에서 파생된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폐기와 〈안기부〉, 〈보안사〉의 철폐를 요구한다. 국민의 지향과 요구를 담아야할 국시, 제도, 정책, 법이 오히려 국민의 지향과 요구를 어떻게든 저지·탄압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86년 유성환 의원의 정당한 통일국시의 주장이나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의 민족화해를 위한 국토종단 순례대행진, 남북청년학생체육대회 제안이 독재정권의 정책과 악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음을 주시한다. 국민들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통일논의·통일운동이 어떠한 제약이나 탄압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악법·제도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6,000만 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조국통일의 성취는 민족의 분열로 인한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고 민족의 융성과 발전을 이룩하는 민족운명 개척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조국통일의 문제가 6,000만 민중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민족적 과업인만큼 모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6,000만 민중 모두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으로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온민족의 소망을 실현시키려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민족사적 흐름에 동참하는 정신으로 위와같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를 적

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통일염원 44년 5월 14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서울대교구카톨릭대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김세진·이재호열사추모사업회

□ 1988.5.28, 조국통일의 대업을 앞당기기 위한 시국선언

— 남북공동올림픽과 6.10남북학생회담의 성사를 촉구한다 —

조국분단 44년, 분단이 몰고온 민족의 고통과 젊은 청년학도들의 가슴아픈 죽음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은 조국의 통일을 향한 절절한 염원을 담아 6천만 겨레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외세와 민족분열주의 세력에 의해 조국이 분열된 후 44년동안 그 분단의 장벽은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막고 같은 민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강요하여 왔읍니다.

이제 분단으로 인한 6천만 민족의 고통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우리 6천만 민족이 하나되어 분단을 강요하고 고정화하는 모든 장애에 맞서 조국통일의 새기운을 드높여야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독점하려는 정부당국의 정책에 반대하여 우리 모두가 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공동올림픽과 더이상 억제할 수 없는 청년학생들의 통일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는 남북학생들의 자주적 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온 국민적과제로 나서고 있는 광주학살, 5공화국 부정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올림픽을 이유로 지연될 수 없으며 이번 올림픽이 평화와 통일의 대제전으로, 온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다함께 참가하는 민주적 올림픽으로 되기 위해서는 광주학살과 제5공화국 부정비리의 문제가 온 국민의 희망에 따라 확실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장벽, 그 통한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데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실함을 느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남북공동올림픽과 6.10남북학생회담의 성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다가오는 제 24차 국제올림픽은 반드시 남북공동개최, 민족단일팀의 공동 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상, 이념, 제도보다는 민족적 대의를 앞세운 공동올림픽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이러한 민족적 대의와 각계의 공동올림픽 요구를 외면한채 단독올림픽을 강행하려하고 있읍니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공동올림픽의 성사에 나서는 여러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않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장애를 이유삼아 단독올림픽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을 무시하는 반통일적 처사입니다. 우리는 남한만의 단독올림픽이 초래할 분단의 영구화, 고착화와 독재의 연장을 심히 우려하여 공동올림픽의 성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1) 공동올림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올림픽의 수준과 내용은 남북한의 협조와 단합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제 24회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민족단일팀을 구성하여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개최와 단일팀을 성사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한결같은 열망과 굳은 의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능히 성사시킬 수 있읍니다. 이는 대결논리와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공동올림픽의 구체적 내용으로 나서는 개최지 문제, 대회명칭문제, 개·폐회식문제, 경기종목수문제, 조직위원회문제, 비용문제 등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천만민족의 염원과 남북한의 협력과 단합에 기초한 남북한 협상으로 결정될 수 있읍니다. 아울러 남북한 선수, 임원, 취재진 뿐만아니라 응원단, 관광객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공동올림픽의 정당성에 대하여

공동올림픽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은 남북간의 반백년

동안 쌓인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를 꽃피워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장소, 경비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대회명칭이나 조직위 구성을 상호양보의 정신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공동올림픽을 이루어낸다면 이후 남북간의 협력과 합작의 기운은 상당히 고양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일의 날은 눈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기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의 성사를 통해 현재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이유로 진행되는 각종의 군사훈련, 군비증강과 올림픽과 관련한 테러위협 등은 근본적으로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올림픽의 안전개최에 가장 좋은 방도가 되고 있읍니다.

공동올림픽은 올림픽에 드는 경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제혼란을 방지할 수 있읍니다. 현재 소요된 직·간접 비용만해도 22억불이고 안전개최를 이유로 소요되는 군사경비, 단독올림픽을 위한 경쟁 외교 비용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며 결국 4천만 민중에 희생이 전가될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은 올림픽운동의 분열을 막고 세계평화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반쪽 올림픽이 되었던 지난 경험은 이제 올림픽이 인류평화의 제전으로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단독올림픽으로 인해 여러나라들이 이번 올림픽에 불참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림픽운동에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호방문 등 1천만이산가족의 가슴깊은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읍니다. 공동올림픽을 통해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와 서신교환을 활발히 하여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공동올림픽을 통해 국민대다수의 올림픽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 사라지고 온 국민의 통일 열망을 수렴해냄으로써 국민 모두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공동올림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공동올림픽의 정당성에 대해 정부당국은 그 대의에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면서 'IOC헌장에 위배된다,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올림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올림픽의 정당성을 확신하는 우리는 공동올림픽의 성사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IOC가 공동올림픽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나 남북한이 협력하고 결의하여 IOC와 세계각국에 협조를 구한다면 너무나도 정당한 공동올림픽에 나서는 여러장애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마란치 IOC위원장과 베르디에 IOC대변인이 제 24 차 올림픽에 대한 남북한간의 협상을 촉구해 왔으며 일부종목의 북한주최가 IOC헌장에 상치되는 것이라면 IOC회원국을 상대로 그 타당성여부를 묻는 우편투표 또는 총회결의를 거침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87년 7월 17일 미국올림픽위원회위원장 로버트 헬믹씨는 제 8 회 미국올림픽 패스티벌 기자회견에서 제 24 회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허물어뜨릴 수 없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올림픽운동을 위해 훌륭한 일이므로 한국인 및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IOC는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7월 18일자에 보도되었다. 이 보도는 이어서 "그러나 남북간의 협상가능성이 줄어들어 남북한 공동개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미 올림픽위원장의 발언을 부인했읍니다. 또한 87년 7월 비동맹회의에서는 공동개최 지지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읍니다. 이는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가 세계각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형식상·실무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간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읍니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공동올림픽에 합의

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면 세계평화와 인류의 화합이 올림픽운동의 근본정신인 만큼. 이에 기여하는 남북공동올림픽을 세계평화애호민들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동올림픽의 성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각계의 제 정당, 사회단체, 민주인사들이 이를 위해 힘껏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둘째, 정부당국은 네차례에 걸쳐 로잔느에서 열린 남북체육회의의 의사록을 포함한 제24차 올림픽에 대한 제반 자료를 공개하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장애를 해결해나가는데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열릴 남북한체육회담을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째, IOC는 남북공동올림픽을 위한 남북한 민중들의 노력을 수용하고 공동올림픽에 장애가 되는 여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째, 남북한 공동개최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이번에 서명한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오는 5월 30일 방한하는 사마란치 IOC위원장과의 공동올림픽을 위한 공개회의를 요구합니다.

다섯째, 올림픽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 후 빠른 시일안에 국민들과 함께 공동올림픽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정부당국에 제안합니다.

여섯째,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해야 하는바, 현재 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이유로 미국측이 진행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군사력배치의 증강은 도리어 올림픽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며, 이의 중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올림픽의 안전개최와 평화적 수행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분단의 상처를 안고 6천만 겨레가 고통을 받는 이 땅에서 인류의 평화제전인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전 인류평화 애호세력은 한반도의 평

화와 한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세계적인 연대를 해줄것을 호소합니다.

2. 남북한 각계각층의 자주적인 교류는 보장되어야 하며, 6.10남북학생회담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자주적인 교류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맨처음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고 조성만 열사와 같은 애국학도의 희생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각계각층의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당국이 통일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독점해서는 조국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현대사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각계각층의 국민대중 모두가 민족의 사상 최대과제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서 나서야만 합니다.

남북학생회담은 남북한 각계각층의 자주적인 교류의 출발점이요, 민족대단결운동의 시발점입니다. 남북한의 청년학생이 함께 어깨걸고 국토순례대행진을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면 이는 반백년동안 쌓여온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립,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믿음과 화합, 대단결을 이룰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반드시 남북학생회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불온시하거나 이를 탄압, 방해한다면 이는 반민족적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지난 1982년 2월 1일 실현가능한 시범 실천사업을 제시하면서 제 10항에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해서 정치인, 경제인, 청년학생, 근로자, 문예인,체육인 등 각계각층 인사간의 친선방문을 실시한다고 말했던 바, 정부당국이 실행치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학생들 스스로가 실행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부당국의 통일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학생회담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의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6.10 남북학생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부당국이 이번 6.10 남북학생회담을 전반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방해하고 탄압한다면 이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세째, 주한 미사령관은 6.10 남북학생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판문점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6천만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째, 각계의 제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는 민족의 대화해와 대단결을 위해 자주적인 교류를 제안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구국의 단심으로 노력할 것을 호소하며 우리도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3. 지금 현재 온 국민적 과제로 나서고 있는 광주학살 및 제5공화국 부정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문제는 올림픽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될 수 없으며 온 국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하여야 합니다.

광주학살과 제5공화국 부정비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군사독재하에서 계속 시달릴 것인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 국민적 과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여야만이 이번 올림픽이 독재연장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적 합의에 따라 치루어질 수 있읍니다. 또한 광주학살의 참극을 주도한 책임자들이 정부요직에 앉아있고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주도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하루속히 광주학살과 부정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숨겨진 진상과 명백한 책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이 드러나는대로 국민의 뜻과 정의의 기준에 따라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세째, 모든 야당세력은 온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정조사권 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류화해의 제전으로 열리는 올림픽이 천여명의 양심수를 옥에 가두어 놓고 치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도록 촉구합니다.

통일염원 44년 5월 28일 사회단체 일동

□ 1988.5.30, 「6.10남북학생」실무회담을 준비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대협」임시의장 오영식

민주를 사랑하고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여러분!

조국의 푸르른 하늘이 백두에서 한라로 이어지고 푸른신록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뒤엎어가는 이 6월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6월 10일에 있을 북한청년학생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벅찬 기대를 억누를 수 없읍니다. 남과 북의 학생들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44년간이나 쌓인 혈육의 정을 나누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은 진정 가슴벅찬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돌이켜보면 분단시대에 태어나 분단교육을 강요받아왔던 우리는 44년동안이나 조국의 허리를 비정하게 가르고 있는 휴전선을 바라보며 같은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아파해야만 했읍니다.

그동안 이땅의 독재정권들은 범국민적인 통일논의를 철저히 차단해왔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분단상황을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악용해왔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전후세대라 철없는 소리만 한다고 질책해왔던 기성세대들도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읍니다. 분단된 조국에 살면서 우리의 국시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던 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법으로 구속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청년학생들은 누구에 통일을 기대할 것이며 언제나 통일조국에 살고싶은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 민족의 분단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광주학살의 원흉이 권좌에 올라있는 현정권은 결코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청년학생들은 3월말에 서울대에서 제기되었던 남북학생체육대회

및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이제 그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휴전선을 넘어 남과 북의 청년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한판의 어우러짐을 갖고자 합니다. 민족의 허리를 질끈 동여메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과업은 더이상 뒤로 미루어질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의 흐름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음을 잘 알고있지 않읍니까? 동서화해의 평화적국면은 어떠한 체제와 이념을 지향하고 있든간에 인류의 평화를 옹호하고 상호공존의 원칙을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즉 우리민족의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달성해야하는 자주적통일이여야 하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제반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여 평화를 정착시킨 속에서 달성해야 하는 평화통일이어야 하며, 한핏줄 한민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서로 단결하고 화합해야 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이룩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그 어떠한 군사훈련도 반대하며 우리민족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든 쇠붙이를 거부합니다. 더이상 우리 통일의 길에 외세가 개입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읍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놓여있더라도 우리의 성스러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6천만 동포의 가슴에 맺힌 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천만이산가족의 피맺힌 눈물을 거두기 위해 가슴벅찬 기대와 굳은 결의로써 판문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의 도정에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통일대장정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하여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안아봅시다.

통일염원 44년 5월 30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임시의장 오 영 식 드림

□ 1988.6.8, 민족통일논의에 대한 전국대학원학생 연합회의 입장

— 전국 11개대학원학생연합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국가를 평화적으로 건설함은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과제이다. 통일은 어느 정파, 어느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건 민족사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통일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을 되돌아 보건대, 분단 44년 동안 외세에 의존한 독재정권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써 매카시즘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논의를 억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통일에 대한 갈구는 더 이상 침묵을 거부하고 민족적 염원으로서 타오르고 있다.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곳곳에서 젊은 생명들이 산화해 가고 있으며, 그 소리는 민족의 메아리되어 울려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더이상 강압으로써 억누를 수 없는 민족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토통일원 장관의 발표를 통해 "통일논의의 개방 및 통일정책 수행의 정부로의 일원화"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집권층의 통일•안보논리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잊을 수 없으며, 정보의 엄격한 차단과 전횡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압박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또한 정보경찰의 감시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무차별한 연행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호도책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국회에 파견된 야당은 각계 각층에서 터져나오는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적극 수용, 정책

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채, 관망과 무기력으로 일관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하에 조속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며 그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통일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와 서적의 공개를 요구한다.

무릇 민주주의라 함은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서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소수에 의한 정보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국민을 우민화시키며 전체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통일에 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등 제반 관계악법은 개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관제의 틀 속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를 벗어난 어떠한 논의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서 탄압받아 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실질적인 통일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세째,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10남북청년학생 실무회담의 평화적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6.10회담이 그동안 억눌려 왔던 통일논의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애국청년학생들의 순수한 조국애의 발로라 보며, 이를 통해 민족화해의 새 장을 여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위해 운운 등으로 대 국민 위화감 조성이나 원천봉쇄로 일관하는 타성을 버리고 6.10회담을 보장·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네째, 제 24회 올림픽은 남북한이 공동개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림픽은 단순한 세계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의 올림픽은 민족화해의 한 마당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단독으로 개최될 경우, 이는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

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공동올림픽이 한민족의 하나됨을 과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결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식인의 양심으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감히 천명하며,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통일염원 44년 6월 8일

〈 **전국대학원학생연합회 산하** 〉

건국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경남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 1988.6.11, 북한의 청년학도에게 보내는 제4차공개서한

— 「전대협」

기어이 만나 어우러져야 할 그대 북한의 청년학도들이여!

6천만 동포에 대한 사랑과 우정의 들끓는 심정이 반만년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서로 만나 가슴 으스러지도록 안아보고자 하루를 천날같이 느끼며 기다렸던 6.10청년학생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한데 대한 사과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읍니다.

사랑하는 북한의 청년학도여!

그대들의 통일의 열망이 평양의 하늘을 뒤엎을 때 우리 남한의 청년학도들은 매국도당의 악랄한 파쇼적 폭압을 뚫고 남녘의 온천지를 민족 대화합과 대통일의 요구로 뒤덮었읍니다. 9일, 10일 양일간 전국 각지에서 민족분열주의자 노○○일당의 악랄한 탄압 책동에 맞서 분연히 함께 하였으며, 비오듯 쏟아지는 최루탄을 뚫고, 판문점을 향하여 돌진하는 가히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읍니다. 또한 민족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의 편에 서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애국민중들은 백만학도의 우국충정에 깃든 헌신적 투쟁과 6.10남북학생체육회담 성사에 열띤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고, 머나먼 이국의 하늘아래서 통일된 조국의 새 날을 그리는 도처의 해외동포들 또한 우리의 공명하고도 외로운 애국적 용기에 대하여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6월 10일 우리가 그대들과의 만남을 이루지는 못하였다하나 결코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내디딘 거보를 결단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민족의 비극적 운명을 구출함에 있고, 우리의 투쟁이 정의롭기에 그 어떠한 책동과 도발도 우리 배달 겨레의 더운 피가 식지 않는 한, 우리를 가로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대들과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이루어지지 못한 남북학생 실무회담을 오는 8월 15일 민족해방전날 동

일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과 8월 8일에서 14일까지를 민족적 대화합을 위한 남북해외동포 청년학생 국토종단순례 대행진을 각기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북한청년학생들은 백두에서, 남한청년학생들은 한라에서 출발하여 14일 정오까지 도착하고 해외동포학생들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남과 북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합시다.

2) 14일 저녁 또는 오후에 당일 대토론회 및 대동제를 개최할 것과 15일 아침 10시에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

3) 실무회담의 안건은 3차 서한에서 밝힌 4가지 안건과 동일하게 할것.

둘째, 다가오는 24회 올림픽은 전세계 평화 애호민들에게는 인류평화의 대제전이 되게 하고 우리 분단 민족의 6천만 겨레에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통일의 대들보가 되게 하기 위한 몇가지 실천사업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1) 올림픽의 공동개최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새 장을 열고자 하는 전 민족적 요구를 모아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 민중적 공동올림픽 쟁취본부를 남과 북, 그리고 가능한 해외 곳곳에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공동올림픽 쟁취본부의 일차적 사업으로서는 한 민족 천만인 서명운동을 남과 북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3) 남북 교류 및 통일사업의 일차적 과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앞당기고 핏줄을 끊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일천만 이산가족의 애절한 통곡을 하루 빨리 가시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 이산가족의 명단을 조사·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합시다.

무척이나 보고픈 북한의 청년학도 여러분!

앞서 제기한 우리의 제안은 민족의 미래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이며 청년학도의 두 어깨에 매어진 자랑스런 책무임을 확인하기에 그대들의 열렬한 호응과 세계 도처의 해외동포와 6천만 겨레의 뜨거운 자리, 그리고 남한의 백

만 청년학도의 옹골찬 각오와 단결된 힘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같이 험난한 형극의 가시발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들과의 만남을 이루어내고 기필코 용의 해를 분단 반백년의 어둠을 거두어 내는 희망과 환희의 해로 되게 합시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될 날을 그리며 형제들의 조속한 답신을 기다리겠읍니다.

통일염원 44년 6월 11일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보냄

□ 1988.6.12,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 보내는 서한" (남북불교교류 제안)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평화·화합 사상의 기치하에 청정 불국토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 불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장구한 세월동안 한민족의 역사와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불교에 있어 민족분단은 불교의 분단이었고 혈맥을 강제로 끊어 낸 고통이었읍니다. 특히 분단이후 서구문화와 종교의 홍수속에서 민족문화의 계승 담당자인 남한불교가 당한 치욕과 소외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읍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남한불자들은 불교의 민족적 사명을 하루도 잊어 본 적이 없었으나 반외세, 반독재, 민족통일에의 투철한 보살행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어언 40년의 세월을 소비하였읍니다.

북한의 불자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민족은 한반도에서 열릴 국제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평화정착과 통일이냐, 긴장고조와 영구분단이냐 하는 중대한 민족사적 기로에 서 있읍니다. 남북한 민족과 세계의 평화애호인들 사이에서 공동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금, 남한의 불자들은 그간의 안일과 무기력을 반성하며 민족통일에의 깃발을 다시 힘차게 잡고 일어섰읍니다. 그리하여 통일실현의 구체적인 방도로서 올림픽공동개최와 단일팀구성을 애국불교도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실천했으며, 오늘 미력하지만 조국의자주적 통일을 위한 공동올림픽기원법회를 갖기에 이른 것입니다.

북한의 불교도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불교도들은 절대적 생명존엄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기도 하였읍니다.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 화합과 통일의 원리로 평등·평화의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것이 불교의 종지입니다. 분단조국의 고통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민

족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과제앞에는 남과 북이 따로일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현시기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는데 남·북불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민족을 영구분열시키려는 일체의 반통일적 정책과 그 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단독올림픽강행에 단호히 반대합시다. 남북불자의 대단결을 기초로 6천만 동포의 민족대단결을 이루어낸다면 공동올림픽은 반드시 성사되어 민족통일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둘째, 동족간의 대결의식을 극복하고 상호존중과 신뢰하에 민족단결의식을 드높여 나가기 위해 남북불교간의 자주적인 교류의 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완역 및 초파일행사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들은 기쁜 마음 금할길 없었읍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융단폭격에 찢기우고 잿더미가 된 수많은 가람들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읍니다. 남북불교와 불자간의 자주적 교류를 밑거름 삼아 천만 이산가족과 6천만민족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의 문을 열어갑시다.

세째, 남북불자들의 민족자주와 공동올림픽에 대한 불퇴전의 보살도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모아 나갑시다. 7.4남북공동성명과 8.15해방을 맞이하여 남북불자들의 통일의지를 한껏 고양시켜, 조국의자주적통일을위한 남북불자 공동기원법회를 성사시켜 통일조국의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전기를 마련합시다. 조선불교도연맹과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가 주최가 되어 8월 15일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보현사와 조계사에서 각각 법회를 여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무적 협의 방안은 추후 제안하겠읍니다.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 불교도 여러분!

우리들의 염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전달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남북간의 교류가 실현되고 완전한 민족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원력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불기 2532.6.12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공동대표 지선, 법성, 배영진, 전연대 합장

□ 1988.7.1, 재서독음악가 윤이상, "민족합동음악축전" 제의

* 동경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시 배포한 제안내용

1. 이 념

조국분단 이후 43년, 오늘처럼 전민족이 통일을 염원하고 그를 위하여 행동에 옮긴 때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의 정치적 협상을 앞당겨 우선 온 민족이 동일성을 되찾고 그동안 쌓였던 복잡 다단한 감정과 갈등을 풀고 정치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우선 대행사를 마련하여 전민족에게 고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족합동음악축전을 마련하여 이 행사가 우리 강토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에 소개되어 우리 땅에서 세계평화에의 커다란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2. 범위와 출연단체

남북의 대표적인 교향악단, 합창단, 독창자를 양측이 선출하여 같은 장소에서 (휴전선상)공연하며 남북의 많은 청중과 해외동포들에게 국내외의 텔리비전으로 이 광경을 방영한다.

3. 연 주 곡

연주곡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화합을 강조하고 과거의 그릇된 역사를 깨끗이 씻고 앞날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희망을 고무하는 내용의 우리 민족의 작품이어야 한다.

4. 시 일

양측에서 연주에 대한 연습시간이 2개월은 필요하므로 적당한 시일은 1988년 10월초로 예정할 수 있다. (또는 10월말로도 예상할 수 있다)

5. 공연장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휴전선상이 분단을 극복하는 상징적 위치라는 의미에서 가장 적당한 장소이며 이것을 실천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장소에는 경계선을 중심점으로 하여 큰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이에 연결하여 남북쪽으로 커다란 가설관중석을 마련하여 양측에서 각각 약 2~3만명의 관중이 참가가 가능토록 한다. 그리고 그 밖의 관중을 고려하여 확성기와 스크리인을 준비하여 이 광경을 관람토록 하여야 한다.

6. 공보동원

국내 국외의 많은 공보기술과 기관을 동원하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이 대축전을 치르는 광경을 전세계에 소개하도록 한다.
(이 대회의 질서를 위하여 미리 계몽사업이 필요할 것임)

7. 외국귀빈의 초청

이 축전에는 남북정부가 각각 자기쪽 위치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그 외의 귀빈을 초청하여 그들의 지지와 참여에 대한 의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준비절차

이 대축전은 정부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설치, 실행하지 않고 민간인을 중심으로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치문제가 개재하게 되면 실현이 어려울 수가 있다. 양정부는 그 실천에 있어서 실무적인 모든 권한을 실행위원회에 일임하여야 한다.

윤이상은 연주회를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실행위원회를 편성하여 모든 준비와 연주회를 진행하도록 한다.

9. 발　표

양정부는 위의 내용에 동의하면 같은 날짜에 각각 이 행사 실행의 간단한

내용을 국내외에 동시 발표한다. (이 시기는 늦어도 8월 31일까지)

10. 기　타

양정부는 윤이상에게 이 일에 대한 신임장을 정식으로 8월 1일까지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며, 실행위원회위원(4명 정도)들의 남북행 여비는 각정부가 부담한다.

단, 윤이상 자신의 여비와 모든 경비는 양정부에 부담을 절대 끼치지 않을 것이다.

1988년 7월 1일 도쿄에서
윤 이 상 작성

□ 1988.7.2, 민족문학작가회의 성명,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창한다"

이제 남북한 당국자들이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열여섯돌이 되었다.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은 삼팔선이 그어지고 6•25의 전쟁을 통해 민족의 분열이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남북의 정권책임자들이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처음으로 공식 합의한 민족사적 대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합의한 3대원칙, 곧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는 자주적인 통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통일이라는 원칙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민족의 장전이다.

4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압제의 세월끝에 드디어 공식화된 이 통일원칙은, 아무리 억압적인 정권일지라도 우리 민족 대다수 성원의 사무친 염원을 무시하고서는 정권유지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원칙일지라도 그 협의와 실행이 권력자들에게 내맡겨져 있을 때 언제든지 포기되거나 악용될 수 있음을 실증해 준 것이 7.4이후의 역사이기도 하다. 남쪽의 경우 바로 같은해 10월에 정권에 의한 효율적인 통일추진을 핑계삼아 유신독재가 출범했고, 그 뒤로도 위정자들은 한결같이 통일논의와 남북접촉을 독점하여 국민의 통일염원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왔다. 그러나 7•4공동성명으로 분출된 민중의 통일의지는 어떠한 악용이나 탄압에도 시들지 않고 굳건히 자라왔으며, 통일의 달성은 오로지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거듭 가슴에 새겨왔다. 그리하여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의 전국적 민주항쟁을 겪은 우리 민중의 분단극복 운동은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이미 그 전신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당시부터, 목전의 기본권쟁취운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민족통일의 대의에 좀더 알차게 기여하

는 문학운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더구나 지난 9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창립은 진정으로 민족적이면서 민중적인 문학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7·4공동성명 16주년을 맞아, 민족통일의 대원칙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헌신을 재천명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제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 첫째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외세보다 민중의 지지에 의존하는 민주적 정부가 수립되고 외국군의 장기주둔을 포함한 외세의 간섭이 청산되어야 하며, 둘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군사문화가 극복되고 핵무기를 비롯한 한반도의 과잉무장상태가 해소되어야 하며, 세째 민족적 대단결을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은 물론 남북 민중간의 다각적인 교섭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늘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서, 남북의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남북작가회담'의 개최를 제안하는 바이다. 민족의 양심을 대변해야 할 이땅의 문학인들이 더 이상 당국자들의 편의에 맞춘 남북교류에 만족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의를 6천만 동포앞에 내놓는다.

1)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을 존중하는 남북의 작가들이 만나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같은 문학인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2) 장소는 서울·평양, 판문점 또는 그밖에 한반도의 어디라도 좋으며 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3) 회담에서는 남북간의 작품교류 뿐 아니라 모국어와 민족정서의 동질성 보존을 위한 공동작업, 국문학연구를 위한 현지답사반의 교환 등 지속적인 인적교류의 방안을 논의한다.
4) 되도록이면 남북문학인대회 및 축제를 정기적으로 열어 통일과업에 대한 문학인의 기여를 활발히 한다.

우리는 이와같은 우리의 제의에 북쪽의 문인들이 민족적 양심과 문학인의 이

성으로 호응해줄 것은 물론, 이 제안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남북의 행정당국자들이 성실히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1988년 7월 2일

민족문학작가회의 회 장 김 정 한

부회장 고 은

부회장 백 낙 청

□ 1988.7.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성명, "남북사회단체회담을 제안한다"

- 7·4공동성명 16주년에 즈음하여 -

이제 남북한 당국자들이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열여섯돌이 되었다.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은 삼팔선이 그어지고 6·25의 전쟁을 통해 민족의 분열이 더욱 깊어진 상황에서 남북의 정권책임자들이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처음으로 공식 합의한 민족사적 대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합의한 3대원칙, 곧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는 자주적인 통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 사상·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통일이라는 원칙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민족의 장전이다.

4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압제의 세월끝에 드디어 공식화된 이 통일원칙은, 아무리 억압적인 정권일지라도 우리 민족 대다수 성원의 사무친 염원을 무시하고서는 정권유지 자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원칙일지라도 그 협의와 실행이 권력자들에게 내맡겨 있을 때 언제든지 포기되거나 악용될 수 있음을 실증해 준 것이 7·4이후의 역사이기도 하다. 남쪽의 경우 바로 같은해 10월에 정권에 의한 효율적인 통일추진을 핑계삼아 유신독재가 출범했고, 그 뒤로도 위정자들은 한결같이 통일논의와 남북접촉을 독점하여 국민의 통일염원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왔다. 그러나 7·4공동성명으로 분출된 민중의 통일의지는 어떠한 악용이나 탄압에도 시들지 않고 굳건히 자라왔으며, 통일의 달성은 오로지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거듭 가슴에 새겨왔다. 그리하여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의 전국적 민주항쟁을 겪은 우리 민중의 분단극복 운동은,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가고 있다.

1) 7·4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통일의 3대원칙에 합의하는 남북 사회단체가 모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논의하는 회담을 개최한다.

2) 의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주적 남북교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남·북의 책임있는 사회단체가 선정되면 추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3) 장소는 협의결과에 따라 한반도 어디라도 좋으며, 시기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4) 남북한 사회단체는 제 24차 국제올림픽을 남북이 공동개최하고 민족단일팀을 구성하여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남북사회단체회담이 성사되기 이전이라도 남북사회단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학생회담, 남북작가회담, 민족화합을 위한 남북한 음악합동대제전, 몽양서거 41주기를 맞이한 몽양선생 큰따님 서울방문 추진 등 민간차원에서의 자주적 남북교류가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6) 이러한 남북사회단체회담을 남한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민주사회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기를 바란다.

이와같은 제의에 대해 남북한 사회단체의 민족애에 입각한 호응이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남북한 행정당국자들은 남북사회단체회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1988. 7. 4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1988. 7. 4, 한겨레민주당 성명, "남북한 제정당연석회의를 제 제안한다"

- 7.4 남북공동성명 16주기를 맞으며 -

최근 이땅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적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인 6.10투쟁으로 분단 44년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민족통일 3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 16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 6천만 민중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정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엄청난 좌절만 남기고 말았다. 그 결과 남북간의 적대감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전쟁과 핵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민족통일의 활로는 남북간의 적대감 해소와 신뢰회복을 통해서 개척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 각계각층의 사람이 서로 만나고 보고 듣는 학생·종교인·문화인·정당인 등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한겨레민주당은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의 상호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8월 15일 민족해방 43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에서 "남북한 제정당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한의 제정당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아울러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정의당도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민족통일대업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와 함께 "남북한 제정당연석회의 추진을 위한 남한측 제정당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한 정부당국은 이제까지의 관주도의 남북접촉이 민족통일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북한 제정당연석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라며 .....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7월 4일

한겨레민주당 대표 제 정 구

최 병 욱

이 강 철

□ 1988. 7. 4, 통일염원 범국민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결의문"

통한의 세월 44년! 5천년간 이어온 혈맥은 단절되고 동강난 조국의 비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반도를 가르는 철책선으로 이산가족은 언제까지 생살 찢기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며 남북 6천만 민족은 강대국의 멸시천대에 설움받으며 끊임없는 핵참화 위협과 전쟁공포에 떨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나 이 불행과 고통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제는 마침내 남북동포의 벅찬 열망과 염원을 하나로 모아 조국통일의 새 날로 성큼 다가서야 할 때이다. 삼천리 강산이 각계 각층의 통일의 함성으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은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굳은 자각과 결의, 민족의 여명을 앞당기고자 하는 절절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노○○정권은 통일의 간절한 열망을 폭력과 기만으로 짓밟고 있다. 6.10학생회담을 수천발의 최루탄과 살인적 폭력으로 탄압했던 사실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각계 각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가로 막았던 사실은 그들이 반통일세력임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근간 "창구단일화"를 구실로 통일논의를 억압하려는 모습은 그 이전과 조금치의 변화도 없음을 알려 준다. 입으로는 남북교류와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좌익서적이란 명목으로 민족의 상호실상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민족 적대의식만 강화하는 교과서 개편을 강행한 점은 그들의 통일논의가 대국민 속임수임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미국에 의존해 민족분열, 국민분열로 분단영구화를 의도하고 광주학살을 자행한 노○○ 군부독재정권은 결코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승만 정권이래 분단 반세기동안 온갖 민족이간책동을 일삼고 남북간 적대감만 부추겨온 독재정권이 북진 무력통일을 기도하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분단고착화를 의도하더니 이제와서 통일의 주인인양 화려하게 나서는 모습은 통일을 갈망해 온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더 이상 용서될 수도 좌시될 수도 없다. 또한 실질적인 분단의 원흉인 미국이 현재 들불처럼 번지는 통일운동에 온갖 비방을 일삼으면서 그들의 식민지 분단통치를 지속시키려 안간힘쓰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진정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우리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염려하는 해외 동포, 분단의 상처와 고통에 시달리던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입각해 반통일세력의 기만책동을 저지하고 통일로의 힘찬 진군을 시작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만나 서로를 알때만이 상호 이해도, 대단합도 가능하다. 이산가족의 남북한 자유왕래, 기독교인의 공동예배, 불교도의 공동법회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이것의 초석으로서 남북한 청년학생의 8.15 남북한 국토순례대행진을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완전 성사시켜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는 민족의 이해를 앞세우는 대표에 의해서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것만이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의 민족이간책동을 우리 힘으로 막아내는 길이다.

둘째, 이땅에 완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1953년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의 평화협정과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 회담에서 남북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적 장치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 군사력 감축과 팀스피리트훈련 등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군사무력시위를 중지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여 핵전쟁위협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셋째, 민족 대단합의 장이 될 공동올림픽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올림픽과 민족단일팀 구성은 두 개의 한국으로 영구분단될 가능성을 뿌리뽑고 남북이 상호 신뢰와 교류를 트는 통일의 지름길이다. 인류의 평화대제전인 올림픽이 민족의 반목과 질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올

림픽후 상호 교류는 가능한데 공동올림픽만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억지주장은 국민의 통일열망을 억누르고 독재와 분단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갖 말놀음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통일 논리를 박차고 민족대단결의 공동올림픽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그 목표를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다. 독재정권을 비호하여 이땅을 군사기지화 하려는 미국과 이에 빌붙은 노○○정권에 맞서 견결한 통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자. 이것만이 민족의 살길이요, 독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은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혀갈 힘찬 진군의 나팔이다.

자! 나아가자, 분단을 넘어 통일의 새 날을 향해… 7천만 민족의 힘찬 진군을 시작하자.

통일염원 44년 7월 4일

〈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 추진위원회 〉

-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 정토구현광주불교협의회
  - 중앙승가대학학생회
  - 동국대학교석림회
  - 대한불교청년회서울지구
  - 서울불교청년회
  - 조계사청년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동국대학교불교도연합
  - 대한불교청년회
- NCC 인권위원회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기독여민회
- 서울지역민중운동연합준비위원회
  - 서울노동조합운동연합
  - 서울민중연합
  - 민중문화운동연합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민중불교운동연합

—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 서울민주투쟁연합

—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

—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 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주쟁취국민운동서울본부

○ 민족미술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민주교육실천협의회

○ 민족문학작가회의

○ 서울시철거민협의회

○ 민족해방열사 김세진·이재호 추모 사업회

○ 대종교청년회

○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 서울지역대학생연합건설추진위원회

○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통일을 위한 카톨릭청년학생위원회

○ 서울철거민협의회

○ 천주교도시빈민협의회

□ 1988.7.4, 「7.4 남북공동성명」발표 16돌을 맞이하여

— 서울대총학생회

1.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아온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이 날은 남북한 온겨레가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다.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한후 거센 반공의 회오리가 몰아닥쳐 민족분단의 골은 점점 깊어만가던 암울한 시기, "7.4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발표"라는 소식은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조국통일원칙으로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등 3가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계속해서 성명에서는 상호비방중지, 다방면적인 교류실시, 남북적십자회담성사, 서울-평양 직통전화가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박정희정권의 배신적이고 반통일적인 행각

독재자 박정희 독재정권은 성명발표 3일후인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반공교육의 계속적 강화"를 지시하였고, 7월 11일에는 "북한은 합법적 국가가 아니다"라고 발표하여 공동성명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이는 공동성명이 정권의 위기(71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실상 패배, 경제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사기술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남북대화의 새로운 상황"을 빌미로 한 유신독재체제를 출범하여 국민의 민주민권을 유린함으로써 박정권의 반민주성, 반통일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다.

3.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은 지금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조국통일의 올바른 지침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권과 그의 후예들인 전두환, 노○○정권에 의해 파기되어 왔지만 분단된 조국에서 단 하루도 인간다운 삶과 참민주주의를 누릴수 없는 우리 국민에게는 소중한 조국통일의 지침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 3원칙을 구현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국민은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

3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외세가 통일해 주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외세는 오히려 민족을 끊임없이 대립시켜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미군은 외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주의 원칙을 부정하였다. 오늘날도 같은 핏줄인 북한 동포에게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는 미국이 외세가 아니라 혈맹이라는 논리가 강요되고 있다. 북의 남침가능성, 적화야욕을 호전성의 예로 들지만 군사력과 잠재적인 전쟁수행능력이 남한이 우위에 있는 현 상황하에서 북이 남침할 가능성은 없다. 뿐만 아니라 북에서 끊임없이 불가침선언, 군비감축 등을 제의해 오고 있는 사실은 북이 남침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남한을 군사 강점하고 있는 정당성을 북한의 6.25도발에서 찾을려고 하지만 6.25도 미국이 45년에 우리 민족을 학살하면서 점령군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6.25의 진정한 책임도 외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휴전 당사자로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수하여 군사적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분단을 통해서 군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미국이 서울의 심장부에 버젓이 행세하는 상황에서 어찌 감히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은 철수하라!!!"

(2) 평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대결을 배제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남북이 서로를 반대하는 무력을 행사한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6.25때도 민족의 생존과는 아랑곳없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던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남과 북 구별없이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킬 권리를 갖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불평등한 한미상호 방위조약(남한의 어디라도 군사기지로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904년의 한일 의정서와 거의 같다)이 폐기되고, 군작전지휘권이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에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고 상호감군, 군비축소가 실시되어야 한다.

"불가침선언, 상호감군, 군비축소로 조국통일 앞당기자!!!"

(3)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의 통일을 주장하여 사실상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치 않고 승공통일 또는 적화통일을 내세우면 남북간의 대결이 불가피하여 전쟁을 부르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반북반공정책을 고집한다면 북한체제를 파괴하고 2천만 동포를 몰살시키지 않고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안기부 요원들은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동포 500만명정도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공존이라는 허구적 논리속에서 우리 민족이 영원히 갈라져서 사는 수 밖에 없다.

40여년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아온 현실을 고려할 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민족대단결의 입장에 서지 않을 때 통일은 불가능하다.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북반공정책이 철폐되어야 한다. 수시로 진행되는 반북캠페인(심지어 고향방문단을 서로 교환할 때, 북에서 수재물자가 왔을 때도 북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었다)이 중지되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민중생존권이 탄압명분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전 민족이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사회제도를 결정하고 민족의 앞길을 민족적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남과 북 사이에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씻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고 통제됨없이 공개되어야 하고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남북대화의 교류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4. 7.4 정신 이어받아 올림픽 남북공동주최 실현하자.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6년이 지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중에서 어느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의 자주권은 미국에 의해 유린되고 있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군사훈련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어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고, 반북반공정책이 계속되어 남북사이의 불신의 벽은 높아만가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노○○정권이 단독올림픽을 강행하여 독재정권을 안정시키고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 단독올림픽은 남북대결만 부추키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의 탄압구실이 되어 분단고착화와 독재연장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미국·노○○정권의 음흉한 의도하에서 진행되는 단독올림픽을 반대하고, 올림픽이 민주화 실현의 계기로(올림픽이전에 광주학살 부정비리원흉인 노○○일당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

림픽을 남과 북이 공동주최해야 한다. 공동올림픽을 열어 남북사이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이산가족의 아픔도 해결해야 한다.

노○○정권이 사대주의적 반통일적 발상속에서 IOC 헌장위배와 기술실무적 어려움을 내세워 공동주최를 거부하고 있지만 6월항쟁을 일으킨 위대한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공동올림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올림픽을 성사시켜 조국통일의 신새벽을 열어나가자!!!"

〈 정부주도의 남북학생교류추진 주장의 허구성 〉

6.10남북학생회담을 계기로 하여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와 공동올림픽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동올림픽쟁취 불교본부의 공동올림픽쟁취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과 8.15 남북통일기원법회 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12월 15일 판문점 남북공동예배 제안, 남북작가회의 제의등은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다. 또한 청년학생은 노○○정권의 폭력적탄압으로 무산되었던 남북학생회담을 8월 15일 다시 열기로 결의하였다.

이처럼 청년학생과 애국적 종교인, 문학인들의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가 힘차게 추진되고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광주학살의 주범이요, 부정협잡선거로 민의를 도둑질한 노○○정권은 통일논의 개방 및 북한관련 자료의 개방을 표방하고 남북학생교류를 정부주도하에 올림픽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과연, 노○○정권이 조국통일을 바라는 절절한 염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시했을까?

1. 통일논의 개방 및 북한자료공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노○○정권은 말로는 통일논의, 북한자료 개방을 떠들고 있지만 자유로운 통

일논의의 전제가 되는 사상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을 발동하여 탄압하고 있다. 〈분단을 뛰어넘어〉,〈남북한 비교연구〉,〈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잠들지 않는 남도〉등의 북한실상을 소개하고 있는 서적이나 통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서적, 심지어는 소설책까지도 판매금지조치하고 출판인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서관모교수의 논문조차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듯이 보인다며 소환장을 발부하여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북한자료 개방은 말만 무성할 뿐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통일논의의 실제적인 장애물인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북한과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겠다고 하여 통일논의 자유로운 보장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통일해야 할 나머지 반쪽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자유로운 통일논의보장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남북학생회담을 올림픽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단독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도이다.

8월 8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되는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남북학생회담은 단순한 걷기운동과 남북학생의 만남이 아니며 전민족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될 올림픽 남북공동주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노○○정권이 학생교류를 올림픽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마치 남북학생교류에 성의를 보이는 것처럼 위장하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8.15 남북학생회담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올림픽 이전에 남북학생회담이 성사되어 공동올림픽주최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분단에 살찌는 노○○에게는 파멸의 길이기 때문이다.

3. 노○○정권이 남북학생교류의 주선자가 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왜곡하려는 것이다.

미국에 예속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정권이 남북접촉을 일원화시켜 독점하겠다는 것은 자격에 걸맞지 않는 소리이다. 역사적 교훈속에서도 독재정권은 남북대화를 정권유지에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노

○○정권에게 남북학생회담추진을 맡기는 것은 마치 도둑놈에게 은행 심부름시키는 것과 같다. 노○○정권에게 학생교류를 위한 실무회담을 맡긴다면 어떤 빌미라도 잡아 회담을 무산시킬 것이 뻔하며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학생교류의 규모, 교류에 참여하는 성원의 자격, 만나서 토의할 의제 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왜곡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학생교류는 85년의 고향방문단 상호교환 때처럼 남북화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반북선전에 이용될 뿐이다. 이러하기에 8.15 남북학생회담은 올림픽 이후로 연기되지 않고 학생들에 의해서 직접 추진되어야 한다. 8.15 학생회담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노○○정권과 미국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1988. 7. 4

서울대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

* 출 처 : 「통일의 길」 제 4 호

□ 1988.7.6, 「몽양사상연구회」, 재북 여연구 초청

* 재북 여연구(몽양친딸)의 몽양추모제 참석주선을 의뢰하는 서한내용공개

〈서울 적십자사총재 귀하〉

민족의 오랜 분단속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겠읍니까만 그래도 조그마한 물꼬를 트기 위해 우리 몽양사상연구회는 금년 7월 19일로 몽양 여운형선생의 41주기를 맞이하게 됨에 선생의 친따님인 북한의 여연구씨를 초청하여 추모제에 동참할 수 있게 배려를 앙망합니다.

모든 절차는 귀 서울적십자사에서 주선, 평양적십자사에 연락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여 초청장을 동봉합니다. 끝.

1988. 7

몽양사상연구회 회 장 한 창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88-8, 남영빌딩 505호)

* 북한적십자회에 대한 협조요청 서한내용

〈평양적십자사 총재 귀하〉

분단 반세기를 맞이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현실앞에 우리 모두 역사앞에 죄인임을 자각하며 민족앞에 반딧불을 밝히고 후손에게 자욱을 남기고저 합니다.

우리는 사상과 이념을 넘어 인도주의적 국제적십자 정신에 입각하여 본 초청장을 보냅니다.

독립투사이시며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싸워오신 지도자 여운형선생이 타계하신지도 40여 성상이 흘러 금년 41주기 추모제를 7월 19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선생의 유일한 혈육인 북에 있는 여연구씨를 한번이라도 추모제에 참석하여 부친 묘에 성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협의는 서울적십자사를 통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

1988. 7

몽양사상연구회 회 장 한 창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88-8 , 남영빌딩 505 호)

□ 1988. 7. 6,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봉초 회장,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 제의

1. 최근 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의 대도를 닦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민족자존과 주체성의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

4반세기 분단의 국토속에 이산가족의 통한을 안고 있는 이 민족의 비운을 두고 볼때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민족통일 대화합을 위한 민족의 축제가 개장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과 북의 예술인은 이념의 투쟁과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여 순수한 예술인의 자세에서 인류평화를 창조하는 예술적 정신의 공통인식하에 통일의 열망을 승화시키는 한마당 축제를 마련할 것을 제의한다.

이 축제는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으로 명명하고, 이 축제는 남북예술인의 공동작업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우리 남북 예술인은 조국통일의 대업에 작은 토석을 한점 올려 놓는 소명감으로 예술축제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면서 북한예술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2. 방 법

가. 분 야 : 건축, 무용, 국악,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나. 장 소 : 서울, 평양을 교차 방문, 공연과 전시회를 갖는다. 이 밖에 특정장소를 지정,(판문점 혹은 관광지역) 공동전시·공연을 한다.

다. 회 담 : 이 대축전의 준비를 위한 준비소위원회가 구성되며, 이 위원회는 수시로 예비회담을 갖는다.

라. 시 기 : 빠르면 올림픽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나, 양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선택하되,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마. 이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남북 정부당국자는 민족통일 대화 합정신에 따라서 남북 예술인의 신분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 6만 예총인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 예술인의 호응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민족예술대축전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분단 조국의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는 작은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망한다.

* 별 첨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대축전 개최(안)

1. 세부계획

가. 남북예술축전 개최를 위한 준비

- o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예술축전 개최 실무위원회 구성
- o 실무책임자 예비 접촉
  (판문점 또는 서울, 평양)
- o 공동실무위원회 개최
  (판문점 또는 서울, 평양)

〈의 제〉

- • 남북예술교류 방법, 절차
- • 공연 및 행사 종목 선정
- • 개최(행사)일시 및 장소
- • 기타 부수되는 문제

나. 예술축전 교류분야 세부계획(안)

- o 건축 : 예술성, 전통성이 깃든 건축디자인 전시
- o 국악 : 전통농악, 가야금산조, 판소리, 창극
- o 무용 : 현대무용, 한국무용 공연

○ 문학 : 분단문학, 민족문학 심포지움, 시낭송회

○ 미술 : 민족화, 한국화, 서예, 도예, 서양화 전시

○ 사진 : 보도, 선전성을 제외한 예술사진 전시

○ 연극 : 민족극, 우수작품 공연

○ 연예 : 가요, 팝송, 창작연기, 연주

○ 영화 : 문화영화, 우수방화 상영

○ 음악 : 오케스트라, 합창, 성악, 기악 연주

다. 분야별 공연 및 전시 세부계획

○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 작품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참가인원 선정

○ 공연(전시)장소

— 1차 : 판문점 → 양측 약 200명 관중 초청

— 2차 : 서울 또는 평양 → 상호협의

— 3차 : 평양 또는 서울

○ 실무작업 → 실무위원회 관장

2. 협조사항

○ 정부 관계기관 및 남북대화사무국

— 예술인 왕래 및 체류기간 신분 보장

— 공연장 설치 및 관객 확보

— 국내외 기자 자유취재 및 방영협조

○ 예총 준비사항

— 교류계획 작성

—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심의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실무위원 인선

— 실무책임자회의 결의사항 조치

□ 1988. 7. 12, 세계불교도회 (WFB) 한국본부, "남북한 WFB 임원회의" 개최제의

북한불교협회중앙위원회
세계불교도회 평양본부 회장 박태호 스님께

북한불교지도자여러분!

귀하들의 불법(佛法)전파와 중생제도를 위한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한 나머지 북한과의 적대감을 종식하고 나아가서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물어 동족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태우 대통령은 6개항에 걸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지난 7월 7일 발표, 내외에 천명하였읍니다.

40여년간 단절되었던 민족분단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장래를 희망차게 건설하자는 결단으로 남한의 동포들은 환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불교지도자 동포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우리 남한의 WFB임원은 물론 한국불교계의 지도자와 불교도들은 이를 대환영하며, 하루 빨리 북한불교지도자 동포들과 자리를 함께 하기를 염원하고 있읍니다.

특히 6개항의 노대통령 특별선언이 남북한간 관계개선의 첨예화된 결과라고 볼때, 이는 "국토통일"이란 논리에서 "민족통일"이라는 의식의 전환이며,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합친다면, 남과 북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 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한민족, 같은 동포의 열정으로 지난 과거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세계속에 뛰어난 민족의 정신사를 펼쳐 나아가야 하겠읍니다.

이에, 원융무애와 화쟁의 불타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수호하는 불교인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여 불타의 근본사상인 자비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축하는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있으며 민족의 통일은 겨레의 오랜 숙원이였기에 우리 남북의 불교도들은 힘을 합쳐 동포간의 애환을 구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이것은 부처님의 숭고한 자비사상이며 우리 불교인들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남북한 WFB 임원들이 1차회의를 갖기를 희망하며 장소는 서울, 평양, 판문점 등 귀하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시는 8월중으로 희망합니다.

2. 11월 19일부터 미국 L.A. 서래사에서 갖는 제 16차 세계대회 이전 2차 회의를, 3차 회의는 회의 기간동안에 현지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3. 남북한의 유명사찰 및 불교계 상호 방문을 희망하며,

4. 16차 회의시에 북한에서 발간된 8만대장경 한글 번역본 1질을 얻고 싶으며, 이에 우리도 남한에서 번역되고 있는 한글판 8만대장경을 증정하겠읍니다.

5. 남북한 합동통일기원법회를 판문점에서 9월중 열것을 제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제안을 충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민족통일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1988. 7. 12

WFB 한국본부 회 장 박 동 기

□ 1988.7.20,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발족선언문"

바야흐로 외세와 독재정권에 의해 억눌려 오던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은 통일 조국을 향한 열정으로 곳곳에서 뜨겁게 솟아올라 통일 운동의 바다를 이루어 가고 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애국에 앞장서 온 청년학생들이 조국 통일의 횃불을 치켜 들었고, 종교인·문화 예술인·천만 이산가족이 억제할 수 없는 염원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재 정권의 온갖 폭압 속에서도 애국적 선각자들과 청년 학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땅의 통일 운동을 면면이 이어 왔다. 특히 작년 6월 뜨겁게 타오른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통일운동은 점차 대중적 운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올해 6.10 남북학생 추진 운동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퍼져 나온 청년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마침내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 대중과 함께 통일운동의 큰 길에 당당히 나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해방이후 한번도 진정한 통일의 의지를 가진 바 없었던 독재 정권은 지금도 통일 운동을 좌경용공으로 모략하고 국가 보안법 등으로 철저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6월 항쟁 이후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민중들을 통일 운동에서 떼어 내고자 획책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운동은 바로 통일을 가로막는 독재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외세에 대한 투쟁이며 또한 민중 해방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가슴깊이 새기며 온 국민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정을 모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약칭 조통협)"를 결성하여 오늘 그 발족을 선언한다.

조국 통일의 대장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는 외세와 군사 독재정권은 오늘도 분단을 고정화 시키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 제반 악법과 제도를 동원하여 통일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럴듯한 통일 방안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청년 학생들의 남북 학생 교류 운동을 가로막고 조국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공동올림픽을 저지하고 있다. 현 정권이 발표한 "7.7선언"이라는 것도 통일을 진정 이루고자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통일 염원을 무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해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판 세력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최근 노○○정권은 통일 문제를 독점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정부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으로 동족을 학살하고 국가보안법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여 온 친미 독재정권이 어찌 통일 운동의 주체가 될수 있으며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조국 통일을 볼모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탄압하려는 독재 정권의 상투적인 작태인 것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외세의 지배를 배격하여 민족 전체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 상태와 군사대결을 없애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에게 한쪽의 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민족의 이름으로 대단결할 때 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남한의 4천만, 북한의 2천만, 해외의 1천만 동포를 망라하여 7천만 전 겨레가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는 애국적 제 정당과 모든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창구 단일화로 통일운동을 봉쇄하는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통일운동의 주체로 확고히 서야 할 것이다. 우리 조통협은 통일운동을 주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통일을 가로 막는 외세와 독재정권에 대항해 필사적으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와 독재정권을 분쇄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민족의 생명인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3) 민중의 민족 분열 의식 극복과 민족 대단결 의식 고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4) 공동올림픽 성사등 민족화해 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실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 남북한 각계 각층의 자주적 교류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6) 조국 통일의 주체인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반 통일 세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투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기필코 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어떠한 난관이 닥쳐 오더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저 통한의 철조망을 걷어 낼 것이다. 외세의 지배가 없고 전쟁의 위험이 없으며 같은 민족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 통일 조국의 새 날을 열어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 하나된 땅 위에서 살아 갈 것이다.

민족 자주 만세!

평화 통일 만세!

민족 대단결 만세!

1988. 7. 20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민주단체 협의회

□ **1988.7.21,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 불교본부,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는 2차공개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평등, 평화, 화합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불사에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불자 여러분께 지성으로 존경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이 땅 한반도가 삿된 마구니 집단인 외세에 의해 허리가 동강난 이후, 6천만 우리민족은 온갖 생존의 위협을 받아 왔읍니다. 외세의 군화발을 치장하는데 여념이 없는 퇴폐적인 서구문화와 잘못된 종교속에서, 보살정신으로 무장된 사회, 역사적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묶어 세워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시키고자 애쓰는 민족불교는 끊임없는 소외와 탄압을 받아왔읍니다.

북한의 불자여러분!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 하는 중대한 민족사적 기로인 제24회 올림픽을 앞두고, 남한불자들은 지난 6월 12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공동올림픽 기원법회"를 갖고 공동올림픽을 개최하여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정법수호의 길, 불국정토 구현의 길임을 천명하였읍니다. 또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대동단결해야 함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읍니다.

첫째, 현시기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는 데 남북불자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둘째, 동족간의 대결의식을 극복하고 상호존중과 신뢰하에 민족단결의식을 드높여 나가기 위해 남북불교간의 자주적인 교류의 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세째, 남북불자들의 민족자주와 공동올림픽에 대한 불퇴전의 보살도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모아 나갑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는 민족분단일인 8.15를 맞아 같은 시간, 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보현사와 조계사에서 각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불자공동기원법회"를 제안하고, 법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방안을 추후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

북한의 불자여러분!

6월 14일 대한적십자사에 서한 전달을 요청한 후, 우리는 온 겨레의 격려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디딤돌이 될 우리의 만남을 실현시킨다는 설레이는 마음을 간직한 채 여러분의 회답을 고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국토통일원이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북한에는 종교 및 종교활동 그 자체가 부재하므로 전달해 줄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불교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정권측에 의해 독점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들은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본부(회장 : 박동기)가 86년 12월 제15차 세계대회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WFB에 가입했으므로 "남북불교대표자회의"를 제의할 계획이며, 조선불교도연맹은 제16차대회(11월 19일부터 8일간, LA)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읍니다. (7.14자 중앙일보, 7.20자 불교신문) 진실로 정부측 주장대로 북한에 종교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박동기회장은 세계무대속에서 남북불교접촉을 시도하여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려하였으며, 세계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데 종교활동도 없는 유령단체가 어떻게 버젓이 WFB에 가입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는 정권측이 타오르는 통일에의 뜨거운 열기를 무마시키기 위해 '대북협상창구의 일원화'와 '남북상호교류추진정책'을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음을 드러낸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현 정부가 진정 통일에의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남북의 불자가 하나같이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1차공개서한의 전달 거부행위를 공식 사과하며 2차공개서한을 빠른 시일내에 전달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불교도 여러분!

8.15법회를 통해 남북불자의 뜻을 모아 공동올림픽을 성사시켜 민족대단결과 민족통일의 기운을 드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 취지가 북한불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찬의를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불교본부는 남북의 모든 불교도가 주인이 되는 8.15 법회의 기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미 남한의 전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8.15 법회 준비위"의 결성을 제안하였고, 준비주체를 튼튼히 꾸려나가고 있읍니다. 이제 8.15 법회를 성공적으로 꾸리는 것은 우리 불교도에 부과된 민족사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조선불교도연맹에 8.15 법회에 관한 실무협의를 위해, 8월 10일경에 판문점이나 기타 장소에서 '남북실무대표자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무회담의 주요 의제로서는 첫째로, 본회담의 직접적인 목적으로서 8.15 법회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법회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명칭을 선정하고 통일불사의 완수를 위해 남북의 모든 불자의 공동과업을 토의, 합의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번 실무회담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자주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주적인 남북불교의 교류는 이땅 한반도에 불국토를 실현시킬 그날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

이번 실무회담을 위해 우리는 실무대표자 12인(별첨)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제안에 동의하신다면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불교도연맹과 북한 불교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뜻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하여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마련하려는 우리불자의 간절한 염원의 실현을 위한 힘찬 진군을 결코 멈출 수는 없읍니다. 뜨겁게 마주잡은 미더운 손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불사를 완수하여 정토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1988. 7. 21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

* 별첨 : 대표단 명단

수석대표 : 지선스님(불교본부공동대표)

대 변 인 : 이 영 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실무대표 : 법성 (정토구현광주불교협의회의장), 배영진 (서울불교청년회 회장),
전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성연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사무국장)
법안 (동국대학교불교도연합 회장), 준수 (중앙승가대학생 회장)
성조 (석림회 회장), 이성주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장)
송연택 (불교본부운영위원장), 유재명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장)

□ 1988.7.23,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 제의의 기만성

―「서총련」

〈가슴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한다〉

1. 고도화된 미국―노○○정권의 대응

분단44년 올해들어 7천만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다. 이에맞서 예속과 분단에 살찌는 미국―노○○정권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민족의 통일열망을 무마하고 왜곡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제2의 6.29기만선언인 7.7선언, 연이어 발표된 학생들의 친선경기와 국토종단순례대행진 추진 의사표명은 우리를 어리둥절케하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노○○정권의 입에서 남북대결의 지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6.10회담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제2차 8.15회담을 불허하겠다는 노○○정권이 남북학생교류를 제의한 것이 우리의 머리를 더더욱 어지럽게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차리고 찬찬히 살펴보면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 제의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음을 알 수 있다.

2.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 제의의 기만성

1) 7.7선언 6개항중 "이산가족생사확인, 서신왕래, 상봉주선"주장에 대하여

노○○는 7.7선언을 통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간 생사·주소확인, 방문·상봉의 실현, 서신왕래, 상호방문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적십자사는 13일 "7월내 판문점실무회담과 88년내에 남북고향방문단교류"를 제의하였으며 "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갑자기(?) 등장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신을 접수하는 등 이산가족문제해결이 활기를 띠는 듯하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1970년대초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부터 남북대화의 주요한 과제였다. 그리고 남북은 이미 70년대초에 "이산가족의 주소·생사확인, 방문상봉의 실현, 서신교환, 재결합, 기타인도적문제해결"이라는 5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85년 5월의 제 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의제의 일괄토의와 자유왕래"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년간 이산가족의 문제는 제자리를 걸어왔을까? 이는 5개항의 구체적실천에 있어서 남한측은 "자유왕래가 우리의 현 반공태세와 무관하다는 전제하에 또한 자유왕래가 5개항의 의제 실천방도의 하나라는 인식을 토대"로한데 반하여 북한측은 "자유왕래가 해결되어지면 의제 5개항사업이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토의·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반공태세가 철폐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쌍방의 의견이 평행선을 걸어온데 원인이 있다. (남북대화의 경과와 현황, 국토통일원 1988.6)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교류"를 (남한의 반공태세가 유지된 속에서)가진 바 있다. 이에 온국민은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결과는 극히 제한되고 엄선된 일부사람의 이산가족상봉외에는 TV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것은 민족간의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반북한선전 뿐이었다.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은 평양에서 소년들의 매스게임 도중 집단퇴장해버렸으며 "해수욕"이라는 단어를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북한어린이의 모습은 두고두고 반북한선전에 이용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번의 7.7선언 발표와 남한적십자사에서 재차 제안한 "고향방문단 교환제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간의 대화재개를 위한 아무런 새로운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않다. 마치 십수년간 계속 돌아가는 낡은 녹음테이프를 다시 들어보는 듯하다. 진정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대화의 장벽을 걷어내려는 성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면 과연 노○○정권이 주장하는 "자유왕래는 우리의 반공태세와 무관하다"는 것은 사실인가?

남한에서의 반공반북정책의 상징적 표현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산가족문제의 원초적해결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2항 : 제 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제 6조 1항 :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 1항 :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같은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고 북한의 이천만 동포는 모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의 성원인 북한동포와 교류하고 대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북한동포를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속에서 앞서 말한대로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며,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편의에 따라 무시하고 정권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이산가족문제해결을 반북한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특별법"제정 역시 반북정책을 유지하는 속에서 독재정권이 이산가족재회를 비롯한 남북교류를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기만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현정권이 진정으로 민족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교류를 하고자한다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족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동족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이산가족문제 해결과정에서 장애가 되어왔던 "남한에서의 반북태세"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

구를 구태의연하게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독재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통일지향적인 정부로 치장하려는 것이다.

2) "각계인사 교류,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허용"과 8.15남북학생회담 불허 방침에 대하여

7.7 선언에서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1982년 2월 1일 전정권이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실천방도로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새롭게 보이는 것은 그 동안 이것이 한번도 실현된 바 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이에 비추어 볼때 아무런 하자없는 6.10남북학생회담을 무도하게 탄압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제안 역시 제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8.15남북학생회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 계기라 할 수 있다.

① 김영식 문교부장관은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남북 교육당국간회의를 제안하였으며 정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8.15남북학생회담을 절대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였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국토통일원대변인 명의로 전대협의 8.15회담 협조요청에 대해 회신을 보내온 바 있는데 8.15학생회담의 불허 이유로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정부와 큰 차이가 있음"을 들고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귀 협의회(전대협)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본조건의 하나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6.25 남침으로 초래된 것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만을 주장한 바 없었다. 현재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정

착을 위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하며 이에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함을 주장한 것이다. 평화협정의 체결 요구를 무시한 채 주한미군의 필요성만을 강변함은 무슨 까닭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정부는 "1960년대 이래 북한의 공개적인 전쟁준비와 군사력의 대대적 증강이 남침의도와 무관한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지 않고 있으며 또 폭력수단에 의한 남조선혁명의 기도가 전쟁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은 공개적인 전쟁준비가 아니라 휴전협정이래 일관되게 평화협정과 군비감축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87년에는 일방적으로 10만의 군대를 감축했다. 그리고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을 꾀한다는 것도 80년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남북의 양체제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통일할 것을 주장한 고려민주연방제가 채택된 지금의 현실속에서 설득력이 없다. (남한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민대중이 들고일어나 독재정권을 전복하는 것은 북한의 남조선혁명기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독재정권은 항상 남한 민중의 궐기와 북한의 남조선 혁명기도를 일치시킨다.) 또한 학생들이 정부와 같은 대북인식을 갖지 않음으로 학생회담을 불허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통령특별선언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에서 출발하여"라고 한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을 항상적으로 남침을 기도하는 위험한 적으로 낙인 찍고서 어찌 민족공동체의식에 근거한 남북교류를 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정부와의 차이때문에 회담을 불허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와 똑같이 인식해야만 교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사상과 이념초월!" 운운은 기만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정신착란적 이율배반은 결국 정부로서는 남북교류를 성실히 실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회담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산가족교류문제와 올림픽 공동개최문제 등은 누가 보아도 학생회담의 의제로는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해당기관에서 "오래전부터 북한측과 협의해왔던 문제"라는 것을 8.15회담의 불허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자주적 교류를 교류당사자의 "비정치적

이고 비군사적"인 편협한 이해에만 제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항쟁에서 보여주었듯이 청년학생을 비롯한 우리민족 누구나가 조국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남북간의 교류도 각계각층이 모두 교류의 주체로 나서 민족전체의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다.

세째, 정부는 "대북교섭의 창구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있다. 과거 독재정권에게 독점된 대북교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한다. 학생교류를 독재정권에게 맡겼을 때 학생교류의 의미가 심히 왜곡될 것이 뻔하다. 회담은 못하게하고 교류학생의 자격과 규모등을 제한하고 어용적인 학생을 동원할 것이 예상된다. 남북교류를 비롯한 제반의 통일운동은 통일에 절박한 이해를 가진 각계각층 당사자가 주도하여야한다. 하물며 현정권과 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대북협상을 독점할 자격이 더더욱 없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8.15학생회담불허 방침은 하등의 정당성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 제의한 남북학생교류안 역시 이미 준비되고 있는 8.15학생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학생교류 추진시기를 올림픽이후로 잡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8.15남북학생회담의 하나의 목적이 공동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8.15회담과 「국순」이 성사되어 국민적 차원에서 공동올림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공동올림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미국-노○○정권이 분단 영구화, 독재연장의 도구로 추진하는 단독올림픽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현정권은 단독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해 학생교류를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노○○정권이 진정 남북학생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8.15학생회담을 막을 수 없으며 6.10회담 관련 수배자·구속자를 해제-석방하고 통일운동 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남북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백마디의 그럴듯한 말보다 정

부의 남북교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② 선언에서의 "해외동포 북한방문허용"조항은 기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마치 선심쓰듯이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해외동포의 북한방문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제재의 권한이 없으며 해외동포 북한방문은 이미 보편화되고있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가 부당하게 북한방문자에 대한 "입국방해"를 해외의 극우단체를 이용한 협박등으로 방해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해외동포 북한방문허용"운운하는 것은 7.7선언이 얼마나 겉치레 선전에 치중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예라 할 것이다.

③ "북한의 대미·일관계개선 협조, 중·소와도 관계개선 추구"주장에 대하여 노○○는 7.7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미·일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와 관계개선을 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항은 모두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내용으로만 일관해온 6개항 중 유일하게 정치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7.7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이 조항은 7.7선언에 담긴 음모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 조항은 평화정착과 통일여건 조성을 강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개선, 나아가 강대국에게 승인받는 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는 노○○ 스스로 천명한 민족자존과 영 거리가 먼 것이다. 일제시대의 외교적 방법으로 독립하자는 주장의 재판이다. 남북한이 장사나하면서 공이나차고 왔다갔다하면 강대국들이 외교적 노력으로 평화를 정착시켜주고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철저히 비주체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위의 조항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남북한 상호불가침선언, 군비축소,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등이 남북대결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절박하게 제기되는 현재적 요구이다. 그런데 위의 요구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기반을 부정하는 것으로 미국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7.7선언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지지기반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비자주적인 선언이며, 미국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한반도"에서 남한이라는 한개의 국가와 북한이라는 한개의 국가, 그리고 이를 가르는 한개의 국경선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국제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맥도날드 미국무성안보담당관, 한미수교 100주년기념논문) 두개의 한국정책에 의거하고있고, 두개의 한국을 현실화시킬 올림픽 이후의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 추진의 사전포석에 불과하다. 이는 7.7선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미국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국민은 분단반세기 역사속에서 강대국의 외교적 노력이나 승인을 통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리고 우리민족이 바라는 것이 남과 북이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채 두개의 국가로 살아가면서 남북간의 평화공존만 안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3. 반북, 반공정책 철폐하고 동족의 가슴에 겨누어진 총부리를 거두어들이자!

진정으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로에게 비수를 겨누면서 아무리 회담하고 교류하더라도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지난 남북대화의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하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문제도, 남북간의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를 실시하는 문제도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문제도 남과 북이 서로에게 겨누고있는 총부리와 증오의 화살을 거두어들일 때만 잘 해결될 것이다.

노○○정권의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제의의 기만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철천지 원수로 대하는 제반정책과 악법을 유지시키면서 말로만 교류와 대화를 주장하는데 있다. 그리고 현재 당장 눈앞에 닥친 8.15학생회담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남북교류와 민족화해를 먼미래의 일로만 미루는데 7.7선언과 남북학생교류제의의 또다른 허구성이 나타난다. 민족화해와 단합에 기여하는 남북교류를 자유롭

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반북정책이 철폐되어야 하고 법적인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전대협이 지금 추진하는 8.15남북학생회담도 국가보안법만 철폐된다면 실정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폐기를 결정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민정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할 때 야당이 국보법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야당마저 국민의 통일열망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단결된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8.15학생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고조되는 남북간의 대립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남북간의 무력충돌, 전쟁위험이 가신상태에서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그야말로 올림픽을 세계평화의 제전, 민족대단결의 장으로 맞이해야 한다. 올림픽안전개최를 구실로 미군이 증강되고 대규모 핵전쟁훈련이 실시되어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남북간의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선 남북한이 서로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함께 군비축소, 상호감군,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도 병행되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남한내부에서의 독자적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북한과 대화할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화에의 의욕과 자신감을 보여야한다. 하지만 불가침선언이나 군비감축의 문제는 남한의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될 수 없다. 불가침선언과 군비감축은 최근에 북한에서도 남북국회회담을 여는 의제로 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결정한다면 남북이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노○○정권은 물론이고 국회가 현실적으로 전국민의 의사를 모두 대변하기 힘든 실정에서 남과 북의 전민족의 실제적인 대표가 참가하는 제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의 연석회의를 열어 불가침선언, 군비축소, 올

림픽 남북공동주최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교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임시국회 소집하여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남북 상호불가침선언 채택하여 평화통일 앞당기자!

－공동올림픽 주최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남북의 제정당, 사회단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회담을 즉각 개최하라!

－군사대결 청산없이 민족공동체 웬말이냐!

－전민족적 대화창구로 통일의 문 활짝열자!

－독재자가 주도하는 반공어용교류 반대하고 민간교류 실현하자!

* 출처 : 「통일의길」종간호(88. 7.23)

□ 1988.7.27, 북한청년학생에게 보내는 남한 백만청년학도의 제5차 공개서한

-「전대협」

반백년 조국분단의 쓰라린 상처위에 민족화해의 성수를 부어 통일의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하여 남북청년학생은 모든 시련의 언덕을 넘어 통일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읍니다. 온 겨레의 염원을 한몸에 안고 내달렸던 그 감격의 6월 10일은 우리 남북청년학생들의 애국적 기개를 만천하에 알리는 장거였읍니다. 비록 7천만 민족의 간절한 성사염원에도 불구하고 조국분단으로서만 연명할 수 있는 미국과 노○○정권의 판문점사용 불허와 국보법을 빌미로 한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6.10회담에 대한 탄압은 민족분열주의자의 마지막 발악이었을 뿐 전민족의 강렬하고도 확고한 통일의지를 굽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의지로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8.15남북학생회담을 마련하는 전주곡이 되었을 뿐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노○○는 청년학생과 각계각층 국민들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자 남북교류의 기본장애인 반공태세에 조금의 변화도 없는 구태의연한 남북교류방안과 우리민족을 영원히 강대국에 빌붙어 갈라져살게 하려는 두개의 한국정책구상을 그 무슨 획기적인 조치인양 7.7선언을 발표했읍니다. 이에 덩달아 문교부장관은 남북청년학생이 4개월동안이나 준비해온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8.15회담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채 남북교육당국간에 만나 학생교류를 논의하자고 이북에 제의했읍니다.

독재정권이 아무리 민족화합을 떠들어대도 군사정치적 대결상태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는 민족화합은 기만적 요설일 뿐이며, 가슴에 칼을 품은 채 진행하는 대화와 교류가 오래갈 수 없고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들이 골백번 민족공동체 실현을 내뱉어도 반공반북 대결정책을 종식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민족공동체는 환상일 뿐이며 동족의 나머지 절반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적대시 하면서 통일하겠다는 것은 이 땅

을 또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거나 아니면 영원히 갈라져 살겠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곳이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이므로 대북교섭과 대화는 정부가 도맡아야 한다는 소리도 남과 북의 대립을 체제간의 대립으로 치부하고 체제를 민족보다 우선시하는 민족분열주의자의 발상이며 대북교섭을 독점, 통제, 왜곡하여 민족분열정책에 이용하려는 반통일적 음모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노○○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독점할 자격이 없고, 학생교류를 올림픽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민족의 공동올림픽성사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남한의 청년학생들과 4천만동포들은 더이상 미국의 민족분열정책에 놀아나는 동족의 학살자 노○○ 도당의 손에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고 남북학생교류를 해주길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의 청년학생들은 저들의 온갖 기만적 요설과 폭력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 대장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한의 청년학생은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8.15회담을 기필코 성사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이 감격적인 만남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로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북한 청년학생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6.10회담준비과정에서 노○○정권의 광란적 탄압으로 많은 청년학생대표단이 구속되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었읍니다. 전대협에서는 김중기군을 단장으로 하여 전대협 6개지역중 서울지역은 4인, 나머지 5개지역은 3인씩으로 20인을 구성하여 8.15회담에 파견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학생들의 민족화해의 노력을 높이 사는 제정당·사회단체·각계각층의 대표, 그리고 우리의 은사님들 20여분을 8.15 회담에 함께 모실까 합니다.

둘째, 남한의 청년학생들 1,000여명이 통일선봉대로 8월9일 한라산을 출발하여 판문점까지 순례대행진을 시작할 것이며, 통일선봉대가 지나는 도시와 지역의 청년학생과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동참을 보낼 것입니다. 8월14일 3시 판문점에서는 통일대동제를 가졌으면 하고, 남한의 청년학생 1,000여명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대동제의 행사내용은 문화행사와 공연, 노래경연, 남과 북의 실상소개, 토론회등으로 하면 좋겠읍니다. 통일선봉대는 참가를 희망하는 애국시민과 함께 구성됩니다.

세째, 8.15회담은 오후 3시(북한은 2시)로 하며 안건은 4차 서한에서 밝혔던 남북청년학생의 상호교류문제, 남과 북의 이산가족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학생이 할 수 있는 바, 제24회 국제올림픽대회를 공동주최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노력, 9월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등과 함께 최근 올림픽을 앞두고 고조되어가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전민족의 요구가 높아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구국의 선봉 청년학생이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담을 끝내고는 8.15민족해방기념제를 남북청년학생과 참여인사가 함께 가지면 좋겠읍니다.

네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재회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남한 청년학생들은 8.15회담이 열리는 날, 그동안 우리들이 접수한 이산가족의 명부를 가지고 갈까 합니다. 그대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선봉대 학우들이 한라산에서 흙과 돌을 가지고 갈것이며, 전국을 행진하며 전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대들에게 전해줄 선물을 8.15회담때 가지고 갈까 합니다. 한라산의 흙과 백두산의 흙이 어우러지

는 8월 15일을 제 2의 해방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합시다.

다섯째, 그동안 남과 북의 청년학생간의 서신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읍니다.

남한적십자사가 우리 청년학생들의 노력이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둘러대며 그대들의 편지접수를 거부하고, 우리들의 편지전달을 거부한데 책임이 크다 하겠읍니다.

이러한 지난시기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 5차서한은 우리들이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7월4일 고응삼단장을 판문점까지 헛걸음하게 한것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번 5차서한은 기필코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가능하면 그동안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내온 서한들도 직접 받아 보고 싶습니다. 편지전달 일시는 8월 1일 2시로 합시다.

너무나 보고픈 형제들이여!

이번만큼은 6.10회담때와 같이 그대들을 판문점에서 홀로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주인을 만나지 못한 꽃다발을 들고 서운한 발길을 돌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놈들이 판문점사용 허가를 하지않는다 해도, 노○○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탄압하더라도, 청년학생과 4천만 동포의 합심단결된 투쟁으로 난관을 헤치고 판문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으로 성사된 8.15회담은 한가위때의 남북고향방문을 이루는 밑거름이되고, 올림픽남북공동주최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만남으로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7천만 전민족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가할 평화와 통일회담을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7천만 민족이 가슴벅찬 희열로 눈물을 가누지 못할 8.15회담 성사의 그날을 바라며·····

통일염원 44년 7월 27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1988.7.27,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공동올림픽 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공동투쟁선언문"

조국의 분단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조국의 새날을 열기위해 민족의 힘찬 투쟁 물결이 반도의 구석구석에 넘쳐 흐르고 있다. 통한의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남북한의 우리겨레가 하나되고자 만남의 제안들이 오고가고 있으며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희구하는 목소리는 우렁차기만 하다. 그 누구도 가로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는 통일의 열망,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통일에의 기세는 세계역사의 진보의 등불이 되고 있다.

이렇듯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유업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적 궐기가 앞다투어 일어나는 오늘, 통한의 철조망으로 민족을 갈라놓은 분단의 장벽을 걷어버리고 휴전선을 맞대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긴장고조책동과 맞서 싸워 평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휴전협정체결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투쟁과업을 밝히고자 한다.

1.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투쟁한다.

한국전쟁은 엄청난 민족역량을 파괴하고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고통을 우리민족에게 가져다 주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상자와 부상자, 파괴된 철도, 도로, 건물, 공장, 1천만에 달하는 이산가족은 두번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를 드높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화해보다는 대립이,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험이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고 있다. 전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천여개나 배치되어 있고, 핵무기사용권을 갖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실제로 핵전쟁의 연습인 팀스피리트훈련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의 안전개최라는 미명하에 일본해군이 동해상에 등장하고 머지않아 일본군국주의의 한반도 상륙도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민족은 화해

와 평화를 갈망했건만 조국의 현실은 우리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이 전쟁을 잠시 쉬는 것에 불과한 휴전협정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을 밝힌다. 다시 전쟁이 재발되어도 그누가 문제삼을 수 없는 휴전체제는 우리민족을 끊임없는 전쟁위험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다시는 이땅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휴전협정 제 60 조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군 철수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정치회담'을 약속했건만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이를 외면하고 고위급 정치회담을 파탄시키고 제네바정치회담을 무성의로 일관함으로써 35년간 휴전을 지속하게 만들었다. 휴전협정만으로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었기에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참전국 모두의 약속이었으며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은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반대해왔으며, 그리하여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아 왔던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평화대신에 전쟁을 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는 규정하는 바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정착이 없이는 조국통일이란 있을 수 없으며, 조국통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평화의 문제는 오로지 평화협정체결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과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계속 반대하고 나선다면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적으로서 엄중히 규탄하며,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지기 위해서는 핵무기 반입과 무력증강이 즉각 중지돼야 하며 핵무기 철거 및 군비축소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전쟁무기 핵무기의 지속적인 증강위에서 평화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2. 단독올림픽을 반대하고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올림픽이 분단영구화인 교차승인, UN동시가입안의 디딤돌로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남북이 공동개최하여 민족단일팀이 되어 참가하는 공동올림픽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간의 단합과 합작의 기운을 드높이며 민족이 화해하고 대단결하는 새 장을 열고자 한다. 우리는 올림픽이 민주·민권을 압살하고 전두환·이순자 비리와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수단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동올림픽을 통하여 올림픽이 노○○정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의 성과가 되며 민중의 참여하에 민주·민권의 새 장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는 올림픽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고조와 전쟁의 서곡이 되는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올림픽의 안전개최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진행되는 군사훈련, 미공군 및 항공모함증원배치, 일본해상자위대의 동해상에서의 대대적훈련 등 무력증강 및 무력시위가 올림픽 이념인 세계평화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며, 따라서 우리는 공동올림픽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내고자 한다.

공동올림픽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공동올림픽의 성사를 위해서는 전민족적 단결이 요구되며, 전민족이 단결하면 단독올림픽을 강행하려는 미국과 노○○정권의 의도를 분쇄하고 공동올림픽을 쟁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전민중적 항쟁이었던 6월항쟁으로 민주의 새날을 열었듯이 공동올림픽을 위해서 전 민족이 단결하면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날도 반드시 열릴 것이다. 우리 전민족이 공동올림픽을 기치로 내걸고 일치 단결하여 투쟁하는 데 총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독재연장 영구분단 단독올림픽 결사반대!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여 한반도평화 이룩하자!

1988년 7월 27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서울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주쟁취국민운동서울본부/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민족해방열사 김세진·이재호추모사업회/서울민중운동연합준비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카톨릭청년학생공동위원회

□ 1988. 7. 31, 북한해방·남북통일실천 서울시민학생결의대회, "북한대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장"

–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대학생 사상공개토론회"를 제의합니다 –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갈망하는 6,000만 겨레의 여망은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민족사적 절대 과제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를 개척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남북통일 전국학생총연합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사상과 이념의 갈등과 분열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86년 5월 15일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통학련을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사상운동으로서의 통일운동을 전개해 왔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거짓 사상임을 확인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남한의 절대다수 국민과 대학생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들은 사상문제의 해결없이는 6,000만 동포의 숙원인 조국통일이 올수 없다는 판단하에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대학생 사상 공개토론회"를 북한대학생들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양측에서 전문적인 학자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학생 연석토론회를 개최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토론회의 성사를 위한 토론주제 및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양측대표 2～3인이 참석하는 예비회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비회담 장소는 판문점에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이여!

그대들은 연공합작 통일논리를 내세워 전대협 계열의 일부 소수 학생들을 배후에서 공작·선동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일당의 적화공작에 대해 남한의

4,000만 동포가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알고 있읍니까?

사랑하는 북한 대학생 형제 여러분!

언젠가는 함께만나 조국통일의 필수불가결의 요건인 사상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야할 우리 남북한 대학생들이 아니겠읍니까?

이제 여러분은 사이비 이데올로기인 김일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폐쇄된 억압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한 공생·공영의 통일을 향한 새로운 민족통일 이념을 모색하는 열려진 조국통일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6,000만 동포와 세계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대학생 사상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우리들의 제의에 대해서 8월 15일까지 회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88. 7. 31

북한해방·남북통일실천 서울시민학생 결의대회

통학련 공동의장 박영하·이경오·김준복·이재호

□ 1988. 8. 1,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박영모회장, "남북기독교목회자 상호교류"제의

제 목 남북 기독교 목회자 상호교류

수 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기독교도연맹 위원장

참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기독교도연맹 총간사

예수그리스도의 평화가 분단조국과 이땅의 교회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족분단 43년간 신앙을 지켜오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해온 귀 연맹을 통해 북의 목회동역자들에게 상호교류를 제안하게 된 일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협의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민주화와 민중생존,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여 왔읍니다. 이 과정에서 본 협의회의 많은 회원들이 고난을 겪고, 투옥되었지만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전통을 몸으로 이루어 왔읍니다.

현재 이 땅에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역사를 이루고자하는 전민족적인 열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귀 연맹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함께 앞으로 남북 기독자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고, 또 그 결과 민족통일이 앞당겨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남쪽에서 민족자주와 통일,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 온 목회자조직인 본 협의회는 이러한 남북 기독자통일운동의 계기를 만들고, 분단극복에 기여하고자 먼저 목회자간의 상호교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제안이 북쪽의 목회자만의 단체에 되어져야 하나 본 협의회로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어 목회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기독자들의 연맹단체인 귀 연맹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남북 목회자통일운동에 합당한 목회자단체에 본 제안문을 전달해 주시거나 혹은 귀 연맹에서 직접 목회자를 대표로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9월 25)에 남북한 목회자들이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때 성만찬예식도 거행한다.

2. 이 상호교류안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하여 9월 1일(목) 오후 2시에 판문점에서 각각 12인의 목회자 대표로 공동예배를 드리고, 예비회담을 가진다.

   남쪽대표는 본 협의회 회원, 북쪽대표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선정하는 목회자 단체회원 혹은 목회자로 한다.

3. 본 제안의 모든 진행원칙은 조선기독교도연맹에서도 지지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정신에 따른다.

1988. 8. 1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 장 박 영 모

□ 1988. 8. 2, 사단법인 한국장기협회 이일훈 이사장, " 남북한 친선장기대회 " 개최제의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삼천리 강토가 동강난 반세기 우리 겨레의 역사는 수다한 상처와 민족적 희생만을 강요당한 지극히 불행한 시대였으며, 더욱 첨예화되어 가는 국제경쟁시대를 내다볼 때 민족의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자체역량의 소모가 극대화된 현상을 지속할 경우 장차 지구상에서 우리 겨레가 찾아야할 좌표의 위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시점에 이르러 있고, 더욱 세계적 추세인 자유와 개방의 물결은 젊은 학생들이 판문점으로 달려가려는 의지로 바뀌어 막아서기 어려운 역사의 흐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앞에 놓고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때 가족간의 상봉마저 어려웠던 우리 현실은 조상들이 숱한 항쟁으로 외세와 맞서면서 지켜온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에 결정적 위해를 가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6천만 겨레 모두에게 실로 가장 무거운 짐과 중요한 책임을 안겨주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통일이라는 민족 공통의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접촉이 각각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어 왔으나 통일에는 전혀 근접하지도 못한채 더욱 회한만을 쌓이게 해 왔읍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일은 이룩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민족적 숙원을 앞에 놓고 실패와 좌절만을 반복할 수만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저는 한국장기협회 대표의 자격으로 이북에 계시는 2천만 동포에게 화해의 실마리를 풀기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장기는 수천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이 즐기고 가꾸어 온 민족 고유의 전통민속이며 오랜 남북단절의 세월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모습을 변하지 않은 채 온 겨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며 우리 장기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신은 민족혼의 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이북에 계시는 각계각층의 동포에게 동족임을 실감할 수 있는 정감어린 장기판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와 살아가는 얘기들을 주고받음으로써 막혔던 민족의 혈맥이 뚫리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승패를 위주로 한 운동경기의 차원이 아닌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만남이며 양방 학생들의 대화도 전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판을 매체로 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 어느 분야와 계층간의 만남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읍니다.

이와 같은 저의 희망을 이루기 위하여 양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친선 장기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북에 계시는 장기단체의 대표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988. 8. 2

사단법인 한국장기협회

이사장 이 일 훈

□ 1988.8.5,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선언문"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국내외 7천만 동포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민주·통일 국민회의의 결성을 힘차게 국내외에 선포합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 일본 군국주의를 척결하고,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 일본의 패망 후 국토와 민족의 분단을 초래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민족통일국가 창설을 위하여 견결히 싸웠던 민족민주운동, 60년대이후 이 땅의 민중에게 억압과 죽음의 굴레를 강요한 이승만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민주화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민족 민주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아직도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작년의 저 빛나는 6월 민주화항쟁으로, 전두환정권의 장기집권 흉계를 무산시킨 바 있는 우리 국민은 이제 바야흐로 그 저력을 한데모아 민주화와 통일을 향해 우렁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온 우리의 자주 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꽃은 처참한 고통과 탄압속에도 꺼지지 않고 타올라 오늘 광의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읍니다.

조국의 자주화는 외국세력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즉 민족이 나라의 주인됨을 말합니다. 실로 역사상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이냐, 외타적이냐에 달려 있읍니다. 그러나 분단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도 100만(60만?)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이땅에 1,000여기의 핵무기까지 들여와 우리민족의 생사여탈권까지 점유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약소국의 경제파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상품수입을 강요하여 우리의 농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군대와 자본으로 이땅을 밀고 들어와 우리의 고귀한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무례한 작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더이상 우리 민족의 분단과 고통을 강요하고 우리민족의 생존과 풍요를 가로채는 그들의 부당한 지배와 수탈과 간섭을 묵과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생명을 초개와 같이 던져, 조국의 자주를 위해 싸워온 선조들의 거룩한 구국관을 계승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자주의 정신과 민족적기개로 독립된 나라로서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강대국에 의한 예속과 모욕의 역사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조국의 진정한 민주화는 민중의 생존권과 국민각자의 민주적 제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국민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발표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이 폐지되고, 고문과 폭력이 추방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노동3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저력을 생성시킨 선조들의 찬란한 철학, 문학 등 학문적 유산이 제대로 전수되어 민주개혁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독자적인 사상체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숭고한 민주주의의 제 권리들과 조국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애국적 열정이 소수 지배권력에 의해 규제, 탄압, 박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땅의 천만 노동자는 무리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항상 생계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재해와 직업병으로 수없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이 생산과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분배받으며, 나아가 이들이 소외로부터 극복됨으로써 인간평등사회가 건설되도록 이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행진에 이들이 주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중의 이 모든 고통과 가난과 소외는 분단구조와 냉전 이데올로기가 빚어낸 직접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국의 통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족성원 모두에게 부과된 지상의 과제입니다.

이 시대의 애국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이 시대의 매국노는 통일을 반대하고 조국의 항구적 분단을 획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대다수는 분단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에 한결같이 통일을 고대하고 있는 반면에, 외세와 이에 의존하고 있는 군사독재정권은 분단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에 통일을 원할 수가 없읍니다. 즉 미국은 신 식민주주의의 사슬을 한반도에 드리운채 극동에서의 자국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한반도의 분단 영구화를 꾀하고 있으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계승한 현 정권은 대북창구의 일원화를 외치면서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처럼 민족의 분단은 마치 피가 흐르고 신경이 살아 있는 몸뚱아리를 둘로 잘라낼 것과 똑같습니다.

조국의 통일은 굴욕적인 대외의존과 독재와 빈곤과 전쟁의 공포와 국력의 낭비와 일천만 이산가족의 비탄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화와 민주주의와 민족문화의 창달과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의 종결이 그 기본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휴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남북간에 무제한으로 행해지고 있는 군비증강정책은 억제되어야 하고,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군사량은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땅에 배치한 각종의 핵무기는 넓고도 넓은 자신들의 땅으로 도로 가져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때 이 땅은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평화로운 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민주·통일 국민회의는 이상과 같은 세가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자 하며 그 어떠한 반대 세력과도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혼돈스러웠던 재야운동의 새로운 정비를 통하여, 그 어

떤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고 오직 7천만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계 각층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양심적 제 민족·민주 민중 운동단체와 굳게 연대할 것이며 이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세력과도 견결히 맞싸워 끝내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자주민주 통일만세!

민족 대단결 만세!

자주·민주·통일 국민회의 만세!

1988. 8. 5

□ **1988. 8. 8, 카톨릭농민회 성명, "남북농민교류"제의**

사랑하는 북한 농민형제 여러분!

우리 농민 모두가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겨레가 세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남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카톨릭농민회는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민대중과 함께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농민운동 조직입니다.

민족문제의 해결없이 농민문제 해결없다고 믿는 우리는 2년전 10월 17일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종자, 농기계, 농업기술 교류를 공개 제안한 바 있읍니다.

북한 농민형제 여러분!

우리는 조국통일이야말로 분단으로 고통받는 민족 구성원 특히 민족의 알맹이인 농민과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평화·대단결의 원칙과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국통일원칙을 굳건하게 현실화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극단적인 정치·군사 대결구조를 화해·평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의 화해나 교류는 한낱 정치적 구호로 그치거나 결과적으로 분단고정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휴전하의 교전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협정체결과 온갖 분단장치를 걷어내는데 힘써야 하겠읍니다.

사랑하는 북한 농민형제 여러분!

농업이야말로 우리 땅에서 우리 힘, 우리 방법으로 삶을 이어오고 사회발전을 이룩해 온 기초산업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통일에 있어서 올바른 농업의 몫은 분단고착의 틀을 깨고 통일지향 경제를 이루는 밑바탕 힘인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민족의 어머니로서 강요된 분단의 쇠사슬을 녹여내고 체제와 이념을 뛰어 넘어 우리 민족에 알맞는 삶의 방식

을 이루어 내기 위해 따뜻한 정과 뜻이 오가는 '삶의 나눔'이 무척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카톨릭농민회는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그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농민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농민형제들의 깊은 논의와 애정을 기대합니다.

1. 남북 농민교류의 내용

- 종자, 농업기계, 농업기술의 교류
- 영농(기술)시찰단의 교류
- 남북 추수감사대동제의 교환실시

2. 교류의 방법

- 대표단의 구성 : 도단위 행정지역 농민대표 각 1명, 논, 밭, 과수, 축산 농민대표 각 1명과 농민운동대표 3~5명, 계 15~20명
- 연락과 교섭 (1) 남북대표단은 각각 실무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여 국회, 최고인민회의 통일관련위원회와 협력, 실무절차와 방법을 협의한다.
  (2) 남북대표단은 이를 토대로 판문점, 서울, 평양 그 어느곳에서든지 회합하여 남북교류를 최종적으로 합의, 실현시킨다.
- 1차시한 : 올해 한가위절 때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한다.

1988. 8. 8

카톨릭농민회

□ 1788. 8. 12, 민족미술협의회 성명, "남북미술교류전"제안

— 민족통일을 향한 남북의 작가와 해외교포 작가의 교류를 포함한 범민족미술대전을 제의한다 —

우리의 민족통일은 한겨레의 절대적이고 지상명언적인 염원의 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기동안 누적된 냉전 이대올로기와 적대적 대립체제, 그리고 주변 제국주의 세력간의 방해책동, 종속화 음모에 의하여 민족내부의 자주적 노력을 거세하고 탄압함으로써 좌절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뼈아프게 상기하면서 다시한번 민중 스스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통일열기의 고양된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미술인들은 이에 통일을 향한 노둣돌로서 다음과 같은 제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리 미술인들은 7.4남북공동선언의 참된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화해·평화통일·대단결을 주제와 내용으로 담은 민족적 형식의 창작 교류전을 남북의 작가를 비롯하여 해외교포 작가들도 참여함을 포함한 범민족미술대전으로 성사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촉구한다. 따라서 이의 성사를 위한 준비모임으로서 남북의 작가들이 만날수 있는 시기와 장소, 일정 등이 협의되기를 바라며 그것은 미술단체들간의 자발적인 주도에 의하여 진행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제의는 쌍방간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겠지만, 금년 안으로 준비모임이 성사되면 내년도 어느 시기라도 전시일정을 정하여 전국의 어느 도시이든 순회전을 가지고 싶으며 또한 중국, 소련, 일본, 구라파, 미국 등 해외교포 작가들이 참가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의 민족미술을 널리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동시에 민족미술의 창달을 위한 남북 미술인들의 심포지움도 아울러 가지면서 연례적 행사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족통일을 위한 과제는 산적하여 있는데도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데가 없지만서도, 분단의 고착상태를 풀어가는 민중의 노력과 운동이 최상의 방

법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분단의 장벽을 넘어 하나된 민족의 기쁨을 나누도록 소망하는 바 입니다.

통일염원 44년 8월 12일

민족미술협의회 일동

□ 1988. 8.20, 조국통일운동의 발전과 방향(발췌)

〈통일운동의 발전과 전망〉

앞서 지적한 몇가지 한계점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운동은 더욱 민중적 쟁점으로 올바른 보강을 필요로 한다.

먼저 공동올림픽 쟁취투쟁이 후반기 통일운동에서는 올림픽기간이 끝났다는 시간적 문제 때문에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공동올림픽을 대신할만한 중요 정치적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통일운동의 전술적 부재와 공백이 있을 수 있으며 통일운동의 급속한 침체분위기를 조성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공동올림픽이라는 중요 정치적 쟁점이 사라졌다고 해서 반통일세력의 이데올로기, 물리적 공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반통일세력의 자기모순이 존재하는 한, 중요 정치쟁점은 언제라도 새롭게 부각된다.

이중에서 올림픽과 관련되어 특기할만한 것은 올림픽 이후의 상황과 올림픽 후유증이다. 아직 공동올림픽안이 부결된(될만한) 이유가 정확히 해명된 적이 없으며(시간적 제약, IOC헌장 위배 등에 불과), 따라서 왜 공동올림픽이 되어서는 안되는지, 그리고 단독올림픽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중요성이 기껏해야 스포츠제전인 올림픽보다 못하는가 하는 시시비비를 따질 근거가 있으며, 이른바 평화구역이라는 이름아래 행해진 민중탄압·올림픽 최우선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전 민족 앞에서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그밖에 방송료삭감문제, 올림픽 재정문제, 올림픽 특수로 인한 인플레 폭등의 가능성, 올림픽 유치 흑막 등, 올림픽후유증으로 인한 정치적 쟁점은 얼마든지 폭로될 수 있다.)

둘째, 모든 문제를 미봉책으로만 남겨놓은 채 올림픽 이후로 미루었기 때문에 분단독재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회

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탄압할 명분이 없으며, 그밖에 각계각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회담 등 제반 민중의 통일논의 확산으로 분단독재의 통일논의 독점체제가 약화될 소지가 있고, 한편으로 사회주의국가의 올림픽 참가, 교류 확대는 전통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인 반공이데올로기의 무차별 행사에 일정한도 제약이 되기도 한다.

분단 독재가 대북이데올로기만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또한 올림픽 이후로의 약속(통일에 대한 접근)때문에 자기모순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반기 통일운동에서도 전술적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후반기 통일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반기 통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남북회담이다.

학생회담을 비롯해서 이 모든 회담 제안들이 성사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단 독재의 본질이 살아있는 한, 어리석은 일이다. 더구나 이 회담들은 모두 어느 특정계층이나 단체의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음뿐, 하다못해 국회회담처럼 공권력의 일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한 것이다.(개별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힘의 분산이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회담들은 남북민중정치회담의 수준으로 승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본질이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의 대립에 있다고 하면 통일세력의 약점은 바로 정권적 차원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숫한 회담 요구에도 불구하고(설사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일을 결단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 정치회담은 바로 이러한 통일지향세력의 힘의 결집이며 통일의 실체를 구성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노동자대표, 농민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 민중의 대표, 대표단체, 정당으로 이루어지는 민중정치회담의 의의는 여기에 있으며 한편으로 남북의 민중이 실제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또 한편으로 반통일세력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전국민적, 대중적, 차원에서 결행할 수 밖에 없는 남북민중정치회담의 쟁취는 민중의 통일논의, 통일운동의 최고 표현인 것이다.(현재 이것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있으나 연석회의는 기존의 조직, 단체, 정당만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기 쉽다는 한계, 그리고 반통일세력까지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수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석회의의 한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통일논의의 허실과 민중주체의 해방통일〉

무엇이 통일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남과 북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골몰하게 된다. 이것에 골몰하게되면 남북이 서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감상적 통일당위론에 빠져들게 되고,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은 통일방식이며, 어떤 통일방식이 참신한가, 또는 이 방식만이 유일하다고 하는 남-북 통일방식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이러한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훌륭한 통일방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으로부터 즉각 통일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총선거론은 분단 직후부터 7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는, 아니 서로 다른체제로 성숙된 분단 4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근거로 남북이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엊그제까지 총부리를 겨누고 있던 남북분단체제가 갑자기 평화적이라는 이름하에 선거를 치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매우 낭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민족적 동포애가 절절끓는(?) 애국지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통일이 되지는 않았다. 역대 분단독재정권이 통일을 말하지 않는 역사는 없었다. 그러나 통일발언 뒤에 항상 뒤따르는 반공·대북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통일을 단순히 남-북이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

단히 낭만적이고 추상적이며 분단체제의 본질을 모르는 사고의 소산인 것이다.

최근 민중의 통일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방제안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연방제라는 안만을 갖고 통일이 된다면 분단된 나라에서 살 이유가 없다. 남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국가의 형태를 띠면 통일이 되는가?라는 의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왜 그럼 지금 통일이 안되는가를 거꾸로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대답도 가능하다. "그것은 분단독재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두개의 한국을 유지시키려는 외세의 전략 밑에서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통일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압축된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되는 것은 연방제안이 관철 안되기 때문인가, 분단체제를 거머쥐고 있는 외세와 분단독재가 있기 때문인가? 다시 말해서 한반도 통일문제의 핵심은 남북한의 결합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단체제를 거머쥐고 있는 외세와 분단독재를 이 땅에서 척결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이러저러한 통일방식을 제시했으니 이렇게만 되면 통일이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통일문제를 대중과 괴리시키는 것이다. 민족해방운동 수행과정으로서 민중이 자기 본연의 권리를 획득하고 자기를 해방시키는 운동으로서 통일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통일 그 자체를 박제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으며,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다.)

외세와 분단독재를 물리치고자 하는 민족민주운동과 통일운동을 기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사고가 왜 잘못되었는가는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감상적인 민족동포애만 앞세워 통일방식만을 되뇌인다면 그것은 통일문제를 왜곡시키는 이적행위로까지 규정할 수 있다.

이 점이 올바로 이해된다면 왜 민중의 통일논의의 정치적 진출인 학생회담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차원으로만 국한될 뿐, 대중운동으로 승화되거나 대중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는가의 이유도 쉽게 해명될 것이다. 말하자면 분단독재정권 역시 감상적 민족동포애의 후

원하에 정권기득권세력으로서 공권력을 발휘하여 대북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독재의 통일방안이 아무리 기능주의적이고 분단고착적인 기만책임을 폭로한다고 해도 감상적 민족동포애만 앞세운다는 것은 치명타가 되지 못한다.(감상적 민족동포애는 민족적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정도로 국한될 필요가 있다.) 감상적 동포애는 민족민주진영은 물론 분단독재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공동영역인 것이다.(노태우 7.7선언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분단독재는 자신의 지배체제가 침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두 국가간의 경제·문화교류를 독일의 예처럼 허용할 수 있다.)

통일문제의 허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상적 민족동포애에 호소하거나 통일방식에 집착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통일운동의 주체인 민중과 분단독재가 분단체제를 허물어뜨리느냐 사수하느냐의 문제가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핵심은 분단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자주적 통일지향 정권의 수립 움직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자주적 통일지향 정권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분단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해체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한반도 분단의 성격을 밝히는 과정이다.

분단과 예속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반외세·자주화를 위한 평화통일 노선이다.

한반도 분단고착의 중요한 원인은 군사화와 긴장상태의 계속에 있다. 평화통일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평화체제 구축이 시급한 이유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대치의 균형을 원하는 외세의 세력균형 지배논리의 총화가 한반도 분단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군비축소, 반전반핵, 외국군철수등 제반 한반도 군사화를 배격하는 운동은 한반도의 영구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분단고착의 중요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으로 직결되는 이유는 뿌리깊은 대북·반공이데올로

기의 심화가 분단의 현상유지, 안보·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감상적인 민족동포애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통일요구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반대중의 통일에 대한 상반된 대응형태는 민중의 통일논의에 대해 스스로 방관자적 입장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급진론으로 간주해버리기도 하는 예가 종종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대중의 기회주의적·개인주의적 속성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은 대중을 일깨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래 전쟁에 대한 대중적인 공포감의 만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의식의 심화는 단순히 분단독재가 조성한 대북 이데올로기의 심화라고 단정하는 것 이상이다.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대중을 해방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의 차원으로 승화될 수 없다. 전쟁의 공포를 해체시키는 작업은 뿌리깊은 남북이질감을 해소시키는 작업인 동시에 미국의 한 전략단위로 전락해 있는 남한사회를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반기 통일운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반외세·자주화운동을 제위치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을 원칙적으로 하는 조국통일방안은 민족의 해방통일로 완결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민족이 외세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지 않고 식민지 대리통치구조가 해방되지 않은 채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모든 통일논의를 기능주의적 교류론으로 만들어버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가령 분단독재가 정권장악세력이라는 기득권으로 대북교류 또는 회담제안, 선언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제시한 민중의 어떤 통일논의, 통일회담 제의를 상쇄할 만큼 훨씬 강력한 대중적 성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할 때, 통일운동은 엉뚱하게 분단독재로 수렴하는 이적행위로 결말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분단독재는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대북·반공이데올로기를 철폐할 리도 없다. 그러나 두개의 한국을 영원히 인정하는 평화공존론이라는 전술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를 3대 투쟁의 나열식으로 분리시킨다든지, 반파쇼운동과 통일운동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가를 알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의 최종 목표가 제국주의와 분단독재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주적 통일을 이루는 것에 있다면 민족민주운동의 최후의 결과가 바로 통일의 그날로 맺어지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완성이 곧 통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단해진다.

독재의 자기모순을 폭로한다든가(광주, 5공비리 등) 반통일, 분단고착의 음모(분단올림픽, 분단영구화, 교차승인 등)와 맞서 싸우는 문제, 반외세 자주화 운동(반전반핵, 평화체제구축 등)의 전개, 그리고 분단예속의 과정에서 이중적으로 수탈당하는 노동·자본간의 계급적 모순을 척결하는 문제 등 제반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그 최후의 결과가 통일로 가는 운동, '넓은 의미의 조국통일운동'이라는 사실이다.(분단모순이라는 독자적 영역을 지닌 사구체논쟁과 함께 다시 환원시키는 관념적 오류는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임무를 소홀히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목표인 동시에 전진이다. 하물며 분단이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제국주의의 대한반도전략의 근간임을 분명히 확인한다면, 통일을 모순론 등의 소재로 삼는 식의 불필요한 논쟁은 다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의 의문을 즉각 제기할 수 있다.

"올해의 통일운동이 시발할 당시, 통일운동을 성급하다거나 대중과 괴리될 운동으로 말하던 사람들은 지금 통일운동이 폭발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일운동의 확산을 선도투쟁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일운동은 어느날 갑자기 폭발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대부분 선민주·후통일, 또는 선혁명·후통일과 같은 단계론에 머물고 있었던 통일관과 분

단독재의 통일논의 독점과 기만전술, 그리고 분단이데올로기의 협박이 통일이라는 민족적 전진의 과제를 덮어놓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운동의 영역을 넘어서 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전개와 발전의 결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완성이 통일이라는 점이 올바로 해명되고 조국통일의 과제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통일운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더우기 분단독재의 분단고착화와 합법적 재집권의 음모가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싸움의 성격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전역에 유포됨과 동시에 망각속에, 또는 단계론에 묻혀있던 조국통일운동이 그 한계를 딛고 올바로 부상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조국통일운동을 어떤 경우에는 조국통일촉진운동으로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국통일운동과 조국통일촉진운동이 등식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반기 통일운동에서 총력을 기울였던 공동올림픽과 학생회담이 쟁취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두개의 안건이 쟁취되었다고 해서 통일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반통일·분단독재의 분단고착화정책, 재집권 음모의 분쇄, 그리고 분단·대북이데올로기 철폐운동으로서 공동올림픽, 학생회담 쟁취운동이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운동의 주력방향은 분단독재를 물리치고 모든 분단의 기본장치들을 풀어헤치는 것이며 통일전제조건 쟁취운동만으로 조국통일이 즉각 결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단고착화 음모와 맞서 싸운 의의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통일운동의 한계는 통일전제조건 마련운동을 통일운동의 모든 것으로 잘못 파악하는 인식상의 오류가 일부 유포됨으로써 분단독재를 결단내는 조국통일운동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전제조건 쟁취운동과 분단독재를 물리치는 자주적 통일지향정권 수립운동은 자주화·민주화운동의 완결인 동시에 한반도지배의 특수성(분단국가)에서 오

는 민족민주운동과제의 다른 표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조국통일운동과 반파쇼운동을 별개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근절시킬 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은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최고 표현인 것이다.

〈맺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가지 미해결점은 여전히 남는다. 첫째, 자주적 통일지향정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자주적 통일지향정권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완결하기 위해서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국통일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핵심은 여기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운동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분단독재를 무력화시키고 외세의 식민지 대리통치구조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운동, 즉 통일운동이 반파쇼운동과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통일을 목표로 민족민주운동의 전략 전술을 적절히 구사할 때, 통일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통일운동, 또는 민족민주운동의 독자적 전개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국통일을 목표로 하는 자주적 통일지향정권의 창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 속에서 통일운동이 민족민주운동과 일치됨을 필요로 한다. 통일을 위한 민중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외세의 지배선으로 얽어매어져 있는 분단고착의 장치들을 풀어나갈때 분단독재를 무력화시키고 민족해방의 완성으로서 통일을 결단할 수 있는 힘으로 자주적 통일지향정권이 창출될 때 민중은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다.

* 출처 : 월간「사회와 사상」 88년 9월 창간호(필자 : 박인선)

□ 1988.8.24,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성명, "남북국회연석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

7천만 겨레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이 예비접촉 과정에서 고착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또 한번 무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본 조통협 가맹 12개 단체 대표들은 올림픽을 한달도 채 못남겨둔 긴박한 싯점에서 지난 7월 26일자 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국회회담 개최의 원칙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남북국회회담은 남과 북이 진정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담의 형식은 남북 7천만 겨레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연석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단체 대표의 참석 여부가 회담을 결렬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회담의 의제로서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토대로서 불가침선언의 채택문제, 다가오는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치뤄내는 문제, 그러고 아울러 경제, 학술, 문화, 체육, 종교 등 여러 부문의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 양측이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이 3항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 지엽적인 문구상의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즉각 본회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세째,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있어 지엽말단적인 문제가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국회회담이 다가오는 올림픽을 민족의 대축전으로 만들고, 40여년 계속된 남북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두터

운 분단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담의 시기는 반드시 8월 안에 성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이번 국회연석회의를 조속히 성사시키는 일이야말로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7천만 겨레가 하나되어 역사적 과업수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책무임을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회담을 성사시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988. 8. 24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문익환, 이우정, 지 선, 이재오, 오영식

□ 1988.8.28,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한반도 평화선언"

무릇 가리워진 진실은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굴절된 역사는 바로 잡혀질 수 밖에 없다. 공존과 공영의 인류사적 진실에 반하여 억압과 예속의 굴레를 씌어 오던 욕된 역사는 이제 도도한 민중의 물살에 밀려나고 있다. 전세계민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냉전상태와 그것에서 비롯된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냉전논리로 제3세계국가의 민족적 자주성이 훼손되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반평화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강대국이 지구촌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파괴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인류공동체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유린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본성에 기초한 가치와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중단될 수 없었으며, 바야흐로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냉전의 세계사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서서 군사적 긴장속에서 대치하는 민족사적 비극이 44년간이나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지배세력과 민중간의 대립으로 계급적 모순이 함께 맞물리면서 국민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셀 수도 없는 인명피해, 줄을 잇는 투옥 등의 쓰라린 희생속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 땅의 무력구조를 평화구조로 기어이 전환시키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에 의한 자주성의 유린,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인한 인간성이 파괴라는 역사적 질곡은 위대한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어둠이 빛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평화정착은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에 기초한 때에만 더욱 빠르고 굳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억압과 예속을 없애고 평

등과 해방을 지향하는 인류이상의 지표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지구상의 한 지역의 모순은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평화세력과 연대속에서 성스러운 역사적 소망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준전시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세계평화구축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의 실천을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1. 휴전협정은 남북상호 불가침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1953년에 미국, 중국, 북한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미국의 일방적 약속파기로 인해 이미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준전쟁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한사회의 민주화는 원천봉쇄되고 민족경제는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당사자간의 제도적 확인장치로서 상호불가침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휴전협정은 파기되고 휴전협정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새롭게 체결되어야 한다.

2.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억지를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지배의 군사적 도구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조차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분단과 긴장의 주요인으로 이전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가 한민족 전체의 총화된 의지의 결집과정을 통

해 새롭게 정정되어야 하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3. 한반도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65% 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은 이미 핵의 기능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으로 보다는 대소 공격용으로 재배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1983년 미국의 세계전략이 동시다발전략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미 한반도는는 세계제일의 화약고로 등장하였다.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은 강대국의 제3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저지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며, 북서태평양지대의 비핵지대화운동에 전환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남북한 상호간의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확장은 민족내부의 주체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따라서 핵지대반입주체인 남북당사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방법으로서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최하여야 한다.

5. 남북민중간의 자주적 교류와 평화통일의지의 확인과정은 다원화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주적 교류가 시행되는 점이 평화적 통일의 선결요건이다. 우리는 남한 군사정권이 남북 교류를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단언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질적 주체로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제 24차 올림픽은 국민내부의 화해와 민족대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평화제전인 올림픽이 현정권의 유지와 강화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올림픽 본래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최국이 우선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이 땅에서 심화되어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공포분위기의 조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대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게될 서울올림픽이 인류평화 뿐 아니라 한민족에게는 민족대단합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경우에 형성되는 민족적 자긍심은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 확신한다.

평화는 억압과 예속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실질적 과정이며 또한 그 목표이다. 따라서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막는 폭력과 억압을 뚫고 나감으로써 민족사에 일대 진보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평화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행진을 부담없이 이어갈 것이라는 결의를 전 세계평화세력과 함께 열사의 영전에서 거듭 확인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1988년 8월 28일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 1988.8.31, 노동자시인 박노해, 노동자의 통일운동선언 "남북노동자회담을 제안한다"

올 여름은 37년만의 무더위로 한밤중까지 푹푹 찌는 나날이었읍니다. 그러나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한반도는 달아올랐읍니다. 그것은 현란한 올림픽 열기가 아니라, 이 민족 흙가슴 저 깊이로부터 솟구친 통일의 열기 바로 그 때문이었읍니다.

6.10 학생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음악가·작가·미술인·종교인·농민 단체의 남북교류 제안이 물결쳤고, 8.15학생회담과 남북 국회회담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기운은 한반도를 거세게 휘감아 오르고 있읍니다. 조국분단 44년의 기막힌 세월을 끝장내려는 이 통일운동에 남한과 북한의 전민중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읍니다. 그리고 텔리비전과 신문만이 아니라 이나라 국민 모두가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표명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유일하게 침묵하는 집단이 있읍니다.

바로 이 사회의 최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역이 긴장과 열기로 달아오르던 그날, 노동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요?

공단거리에는 삼엄한 전경의 대오가 깔리고 공장에서는 강제잔업 지시가 내려졌읍니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자본가의 위장폐업과 구사대의 폭력아래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마저 짓눌렸읍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자각된 선진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통일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읍니다. 과연 노동자는 별세계의 버림받은 인간인가요?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조차 없는 생산 기계인가요? 아니면 민족통일은 이산가족이나 금강산 구경가고 싶은 여유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이기 때문일까요?

이제 이땅의 노동자는 남북통일에 대하여 분명한 발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허리를 갈라놓은 분단의 철조망은 노동자 생존권의 가슴팍 위에 선명하게 가로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민족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 때마다 '좌경용공'이니, '불순세력'이니 하는 딱지가 몸서리치게 붙여졌읍니다. 민족분단 때문에 방위산업체 쟁의금지 지침이 버젓이 내려지고 노동악법이 온존하고 구사대 폭력이 활개를 치고 있읍니다.

사회안정을 외치며 걸핏하면 '파국'이다, '중대조치'다 하며 총과 군홧발의 위압으로 군림하는 군사문화가 횡행하고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국가 보안법의 살벌한 조항마다에 공포의 핵무기와 더러운 양키문화와 미군의 위세에, 이 사회에 만연하는 살벌한 적대적 경쟁과 불신의 비수로 분단의 철조망은 우리의 가슴을 찔러오고 있읍니다. 그것은 요란스런 88올림픽평화구역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의 명분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분단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족쇄에 다름아닙니다. 노동자의 정당을 결성할 자유도, 정치활동을 할 자유도 옭아매어 버리는 쇠사슬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뜨겁게 온몸으로 통일을 열망합니다. 노동자는 이 세상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적인 사람들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고 자신이 노동한 댓가로 살아가며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을 그 존재로부터 거절합니다.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죽는 것은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건설한 이 세계의 가치있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아픔에 진실로 괴로와하는 것도 노동자입니다. 비민주적인 국가권력과 악법 아래에서 무방비상태로 착취당하는 것도 노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받고 희망을 빼앗긴 노동자이기에 민족사의 운명을 걸머지고 통일운동의 선봉에 나설 수밖에 없읍니다. 이제 통일운동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만 떠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남북통일은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천만 노동자와 민중형제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체된 민족사의 일대진전과 전세계 인류평화의 전제조건의 문제입니다.

지난 87년 노동자 대파업은 위대한 인간선언의 첫걸음이었읍니다.

이제 이땅의 노동자는 제2의 인간선언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급박한 경제적 요구와 눈앞의 생존을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걸머지고 나갈 주역으로 등장해야 할때 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의 통일운동선언'입니다.

저는 이땅에서 기름먼지와 쉿밥을 먹고 자라온 진짜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한과 북한의 노동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노동자의 역사적인 통일운동의 개막을 위하여 '남북노동자대표회담'을 개최할 것을!

남과 북의 노동자가 서로 만나서 성스러운 통일운동의 횃불을 드높이 치켜 올립시다!

이것은 이땅의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자 역사적 의무입니다.

정부가 7.7선언을 내놓기 이전부터 소수의 재벌들은 순수하게(?) 돈벌이를 위하여 존엄한 국법(?)을 위배해 가며 비밀리에 공산권국가를 방문해 왔읍니다.

이 나라가 몇몇 재벌들의 나라가 아니고 진정 민주국가라면 순수하게(?) 민족통일을 앞당기고자 남과 북의 노동자가 서로 방문하여 노동조건과 작업현장을 돌아보고, 생산기능을 교류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것을 금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남한 사회 최대 다수의 천만 노동자와 북한 사회의 최대 집단인 노동자가 서로의 뜨거운 가슴과 대의를 맞대고 통일운동을 주도한다면 감히 누구도 전쟁도발을 꿈꾸지 못할 것이며, 한맺힌 분단의 벽을 더이상 쌓지 못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는 지금부터 '남북노동자 대표회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중심으로 나설 때 민족통일은 급속히 앞당겨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인류의 오랜 숙원인 평화롭고 원대한 인류공동체의 건설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을 애타게 갈망하는 전민중과 대동단결하여 가슴벅찬 민족통일의 신새벽을 힘껏 열어 나갑시다!

* 박노해(노동자시인, 시집「노동의 새벽」저자)

□ 1988.10.19, 남북국회회담에 임하는 남한측 4당(민정·평민·민주·공화)에 드리는 공개서한

— 민족숭실총학생회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분단과 예속과 독재에 반대하고 자주통일과 민주를 염원하며 실천하는 이땅 청년학도들의 대화의 결정을 모아 귀당과 귀당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외세와 매국역도들에 의해 분단의 철책선이 그어진지 44년이란 시간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에게는 너무도 커다란 아픔이어야 했읍니다. 지난 85년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환갑을 앞둔 북의 아들을 40여년만에 만난 80의 노모가 아들과 헤어지고 아들을 그리워하다 2년만에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비운의 사실을 어떤 한 늙은이의 일로 치부할 수 없기에, 반공보다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의 발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가 채워져야하고, 20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철책선을 마주보며 살육의 총부리를 들이대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이제는 더이상 좌시할 수는 없기에 분단 44년 3월 서울대 김중기 학형의 의로운 발의를 시작으로 백만 청년학도는 경향각처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진군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10과 8.15 남북청년학생회담이 비록 성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애국청년학도들의 의로운 진군은 분단 44년동안 적으로만 알아왔던 북한이 또하나의 조국임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7천만 겨레의 가슴 절절한 염원임을, 우리의 조국은 백두에서 한라까지임을 확인하였읍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진행되어온 남한측의 국회와 북한측의 최고인민회의의 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은 시작부터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읍니다. 그러나 준비접촉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무의미한 만남이라는 비탄조의 원망만이 높아졌읍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회담의 형식과 회담대표 의원

수의 문제가 남북의 의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사려되어 집니다. 끊어진 조국의 허리를 이어야 한다는 가슴 절절한 통일의 염원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원칙에 대한 굳건한 신념만 있다면, 회담의 형식과 의원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의원들이 만나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있읍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길 수있는 불가침 선언과 남북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불가침 선언의 문제는 군사대결을 지양하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침 선언의 핵심적 요체에 대한 진지한 의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합의 노력에 경주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남북의 상호불신과 대결현상에 종지부를 찍기위해 남북의 약 150만에 달하는 정규군의 감축과 국방 예산의 축소입니다. 이는 남북 대결상태의 종식과 남북 정치·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익이 됩니다.

둘째, 조국의 핵참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내의 핵무기 배치에 대한 공개와 이의 철수, 그리고 법적인 제도의 장치인 비핵법안의 제정입니다.

세째,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고 반평화적 무력시위인 핵전쟁 연습의 즉각적 중지입니다.

네째, 휴전협정 체결후 3개월 후에 평화협정의 체결과 외국군의 철수라는 국제법에 의한 한반도내에서의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입니다.

이상의 불가침 선언에 대한 의제토론과 합의내용이 없다면, 불가침 선언은 백지에 불과함을 7천만 온 겨레가 증인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7천만 겨레의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염원이 모아질 때 자주적 평화통일의 찬연한 서광이 우리의 가슴속 깊이 안겨옴을 생각하며 귀당 의원님들의 고군분투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통 일 염 원 44년 10월 19일

민 족 숭 실 총 학 생 회

□ 1988.10.20, 북방정책의 본질과 민족적 과제

—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 북방정책의 본질

남한 정부 당국이 북방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선언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냈다. 6.23선언은 종래의 멸공통일 노선을 다소 수정해서 "남북한이 함께 UN총회에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또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 문호를 개방하자"고 촉구했던 것이다.

그후 한국 정부는 침투의 벽이 비교적 두텁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대소, 대중 접촉교류를 위한 노력으로 연결됐다. 그 결과로, 정부당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크게는 중국의 개방정책과 소련의 민주화정책(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정치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내세우기 쉬운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공산국가가 이번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남한의 북방정책을 위해서 큰 진전의 하나이며, 다음에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구실로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한국 정부당국의 북방정책이 그대로 민족통일정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방정책이란 말은 독일의 동방정책이란 말을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전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독일의 동방정책도 그것이 결코 통일정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사회민주당 브란트 수상이 적극 추진했던 동방정책은 주로 동서독 관계의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음에 비하여 6.23

선언이래로 남한 정부가 추구한 북방정책의 목표는 주로 한·소, 한·중 관계의 개선에 있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전개된 동방정책의 경우 그들은 현재의 국제적 상황하에서는 독일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단된 상황하에서나마 동서독 관계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동방정책은 독일의 통일을 일단 포기하고, 두개 독일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UN동시가입」을 실현한 것이다.

그동안 남한 정부 당국이 UN동시가입 또는 4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등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의 대북한 내지 대·중소 정책을 포괄하는 북방정책이란 분명히 동서독 방식의 두개 한국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북방정책이 통일정책이 아니고 「두개의 한국」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모방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적 화합을 촉구하고 민족분단이 초래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일에 관해서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모방하려 하지 않았다.

2. 북방정책의 한계

그러면 남한 당국이 추구하고 있는 북방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로 한국의 북방정책은 서독의 동방정책과 똑같이 주변외세가 원하는 분단 지향정책이기 때문에 한국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 민족국가를 이룬게 1백년도 못되는 독일 그리고 그 통일 민족국가 때문에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뤄야 했던 독일 민중들은 쉽게 「두개의 독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민족의 경우 이미 1천년 이상이나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살았으며, 또 이 단일 국가가 이웃나라를 한번도 침략한 일이 없는 민족인데 분단을 긍정하고 두개의 한국을 받아들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독일에서 성공한 「두개의 독일」정책인 동방정책이 한국에서는 두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북방정책으로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한계이다.

둘째로, 정부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의 한계는 그것이 민족적 화해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지 않은 채, 중국이나 소련을 대상으로 그들의 국가주의적 실리추구에 편승하여 반민중적 남한 재벌기업들의 돈벌이를 해보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서독의 동방정책 추구가 초래한 동서독간의 문화적, 경제적인 다방면적 교류는 동서독 주민들 상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적 화해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 정부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의하여 제시한 1982년의 「20개 시범실천사업」이나, 1988년의 7.7선언에 뒤따른 남북간 다방면적 접촉교류에 관한 제의들은 민족적 화해를 촉구하는 역할에 너무도 큰 제약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독에서는 남한의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법이 만들어진 일이 없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지금도 남북간을 왕래하거나, 북한측을 칭찬하거나, 동조하거나, 북한측 사람과 통신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남북한 왕래 금지), 제7조(북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 금지) 제8조(북측 사람과의 회합, 통신 금지) 같은 금지법이 유효한 이상 남북간의 그 어떤 접촉 교류도 민족화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정부 당국이 주장하는 남북교류론과 북방정책의 한계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3. 북방정책에 대한 우리의 과제

우리는 정부에서 통일정책의 명분으로 제시한 많은 대북정책들이 사실은 민족통일정책이 아니라 「두개의 한국」을 목적으로 하는 북방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만 한다. 예를들면 지난 10월4일 국회에서 노OO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최고책임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평양에 가서 그 무엇이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

이 과연 통일정책의 진전인가 아니면 종래 추구해온 북방정책의 일환인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40년간 적대적 대립관계를 유지해온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통일을 위한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두개의 한국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 쌍방 당국자들은 동서독의 경우처럼 두 국가체제의 공존을 상호 승인하는 회담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쌍방정상들이 민족통일을 위한 전진적 결실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노대통령의 말처럼 "남북 최고책임자가 만나는 것 자체가 민족 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마치 남북교류 자체가 민족화합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교류가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민족화합을 초래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남북간의 적대적 긴장을 완화, 해소할 수 있는 군사적 평화 보장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한은 6.25를 통해 피차 전쟁 당사자였다. 그리고 쌍방간에는 하등의 전쟁종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휴전협정으로 준전시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든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비공개 실무접촉을 통해서 합의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때 비로소 통일을 위해 의미를 가진다.

둘째로, 남한 내부에서 남북분단을 강요하고 민족적 화해를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물론, 북한측에서 제시해온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언명한 노대통령은 마땅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해야만 하며, 다방면적 남북교류를 주장하는 정부 당국은 국가보안법 제6조나 제8조를 고집할 이유가 없

다.

이승만이래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대통령이 좋은 말을 할줄 몰라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좋은말, 아름다운 말은 모두 골라 하지만 그 목적과 실천내용이 말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두개의 한국」을 추구하면서 통일을 말하고, 학문과 언론을 탄압하면서 민주를 말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민족적 화해를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중이 항상 깨어 있어서, 분단현실을 고착화시키려는 외세의 음모를 분쇄하고,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거짓인지를 똑똑히 구별하여, 오직 진실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될 수 있도록 교양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민족사와 세계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 출처 : 「민중의 소리」 제 58 호

□ 1988.10.25, 제 144 회 국회 민주정의당 윤길중대표위원 대표 연설

다음은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조국이 타의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 지금까지 43년동안 한시도 통일에의 꿈과 희망을 버린적이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역량 증대가 평화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신념에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등 제반 국가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대망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고 민주발전의 빛나는 장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성업을 자신있게 추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정부가 최근 7.7대통령 특별선언을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 제의, 그리고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같은 통일열망과 국가역량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개방과 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통합을 위한 일대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적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로 향해 함께 나가는 〈더불어 사는 정신〉을 발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조건없이 하루속히 열려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문제를 겨레의 여망과 이익에 맞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들의 통일념원에 항상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정책에 반영시키는 중심역할을 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저는 지금 남북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하루속히 타결되어 본 회담이 개최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북한측은 이제 통일문제와 남북대화를 적화혁명의 수단으로 보아온 기본적인 사고와, 자기의 주장과 입장만을 절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민족의 장래와 역사의 발전추세를 직시하는 안목을 가져주기를 기대합니다.

북한동포의 민생문제를 더이상 희생시키지 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도 개방과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순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 1988.10.25, 제 144회 국회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 대표연설

〈안보와 통일에의 대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남북간의 대화도 시작되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동서해빙의 무드도 커져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두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오랜 박해속에서 바라고 추진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간의 평화 실현과 이념을 넘어선 공존에의 합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당은 안보를 중시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온 종래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누차 강조해 온 대로 진정한 안보와 반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은 완전한 민주체제의 실현속에서 국민을 위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때만 가능합니다. 안보를 중시하면 할수록 정부는 민주주의를 더욱 열성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경제 성장, 총선 승리, 올림픽 성공 등으로 자신의 힘에 대한 각성을 높이고 있읍니다. 북방외교의 진전과 더불어 통일에의 의욕도 강화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이런 새로운 심리상태는 민족주의적인 각성과 열기속에 특히 젊은이들을 열정에 휩싸이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한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각성은 그간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에 대한 반미 또는 강한 비판에의 풍조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자주와 평등과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재정립 되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재정립만이 진정한 우호와 협력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작전지휘권의 이양, 핵무기 문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과

엄격한 시행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주와 평등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쌍방의 진지한 대화속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미관계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내외의 사정과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볼 때 비판과 시정의 대상은 돼야 하지만 결코 적대와 결별관계로 발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의 국익에 위반되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저는 60년대부터 남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진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았읍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조차 겪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70년 이래 주장해온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론과 미일중소의 4대국에 의한 평화협력체제의 주장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조차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볼때 감회어린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남북간에 불가침선언 등 평화공존의 노력과 전면적인 평화교류의 두가지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남북의 양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며 4대국은 협력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이 말한 평화시의 설치, 북한이 주장한 평화지대의 책정, 제가 제안한 바 있는 민족공원과 통일운동장 등은 남북간의 전면적 교류와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이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은 영구분단에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적 주장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북한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어떠한 북한의 고립화정책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내속에 성의와 민족애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다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의

흐름은 그러한 방법으로 가고 있읍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서방세계와의 협력, 중소관계의 급속한 개선, 그리고 북한내의 필요성 등이 머지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유연하고 개방된 태도를 취하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명년 봄에 있을 고르바초프의 북한 방문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판단에 저도 동의하고 있읍니다.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체제가 확립되면 머지않아 상징적인 통일기구 아래 제1단계 통일에의 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는 실질적인 완전통일을 의미하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이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 검토하여 제안한바 있는 공화국 연방제는 제1단계의 통일방안으로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를 당기구에서 적극 검토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룬지 5천년이며 신라통일 이래 1천3백년이 되었읍니다. 어찌 사십년의 분단을 가지고 통일을 저지할 수 있겠읍니까?

이제 통일에의 문호는 서서히 열려가고 있읍니다. 민족의 새로운 내일이 힘차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 1988.10.25, 제 144회국회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 대표연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역량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시대적 냉전 이념이나 독재권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분단논리의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식적 통일논의만을 하고 있을 수 없읍니다.

지금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발상과 접근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통일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소극적인 점진론과 기능론에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읍니다.

남북분단을 지속시키고 있는 본질적 요소와 근본적 요인부터 먼저 제거하는 일에 성실성과 과감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읍니다.

이런뜻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간의 정치·군사회담과 경제회담이나 문화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에서 주장하는 인적 교류를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실시하고 북측에서 주장하는 정치·군사문제도 동시에 논의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껴 더욱 교조적으로 나아가도록 해서는 안되며 저는 이미 이러한 의견을 미국, 일본 등 관계요로에 전달한 바 있읍니다.

최근들어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 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남북간의 교류주장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고 주선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8월, 통일의 3원칙으로 민주통일, 비정치적 교류와 정치적 협상의 동시 추진, 평화적 통일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현실적인 통일추진은 먼저 모든 논의를 현상에서 출발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한의 교류는 물론 불가침 선언, 평화

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 개정등 그 어느문제도 통일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것이며 우리 통일민주당은 국익적 차원에서 북방외교, 야당외교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 동경 외신기자회견에서 제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등 6개국 의원협의체 구성을 제의한바 있으며 이는 동북아 6개국간의 상호 협력과 균형을 도모하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함으로써 민족내부의 대화해를 향한 남북간의 자주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미국, 일본의 당국자와도 깊이 논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며칠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6개국 평화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며 이 제안이 실현되어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교류촉진, 나아가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저의 초청으로 일본 사회당의 이시바시 전위원장이 사회당 고위간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북한 일변도의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동북 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평화기반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중국, 소련, 동구권과의 야당외교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감은 물론, 이들 국가와의 교역증진이나 시베리아 개발참여 문제 등에도 기여토록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곳이든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북방외교나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의 조성도 미국과 일본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외관계에 있어 균형감각을 유지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인 이들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 때문에 우방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우방과의 관계가 튼튼해 질수록 북방외교의 지평도 더 넓어질 것이며,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때 한반도는 냉전과 대치의 최전방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광장" 으로 인식될 것이며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은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1988.10.25, 제 144회국회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총재 대표연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화의 실현과 함께 조국통일성취는 우리 겨레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민족적 염원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에 적지 않은 대화와 제의, 접촉과 교류를 시도해 왔읍니다만, 실질적인 통일접근은 조금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통일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일각에서 싹트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잘못된 한 정치세력의 등장이 결국 이와 같은 극단주의까지 나오게 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세력은 마땅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6공화국의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유엔연설을 통해 6개국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비롯한 몇가지 내용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유엔연설 내용이 바로 노대통령이 약속한 통일방안의 제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만, 본인은 6공화국의 통일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은 그동안 우리 나라가 추구해 왔던 모든 통일정책을 집약해서 국내외에 밝혔다는 점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의 하나로 6자회담의 제의와 대북 무력불사용을 명백히 선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제의의 성사여부는 좀 더 시점을 두고 봐야 알겠읍니다만, 관계 당사국들의 미온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그 실현성 또한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통일문제는 민족에 관한 문제라 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상대가 있고, 국제적 협력에 의한 여건 조성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우리 민족 간의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므로 우리측만의 직접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상대방인 북한의 실상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이나 개방도 자유민주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며 개방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년 간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렇게 상대방은 요지부동인데 우리만 서둘러댄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 냉전체제의 산물인 조국분단을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발상과 사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일 것입니다.

이리로 밀리고 저리로 쫓기는 듯하지 말고, 정부는 분명한 통일정책을 수립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뚜렷한 정책기조의 견지가 요구됩니다. 우선 남북이 화해공존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민족적 통일의지와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 바탕 위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통일 실현을 위한 내외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 상호불가침협정이나 평화협정 등의 실질적인 정치협상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야 군축협상도 논의될 것이며, 비로소 미군철수 문제도 감군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본격적인 통일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날 화해·개방조류에 따라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화의 진전은 우리의 다변적이며 폭넓은 외교노력을 더 한층 요구하고 있읍니다.

특히 중소를 비롯한 여러 공산권 국가들과의 문호개방과 직접교역의 출발은 비록 그것이 우선은 경제교류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점차 매우 유익한 영향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념과 체제의 벽을 뚫고 국제적 긴장완화와 화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북방정책을 촉진하는 한편, 그를 통해 북한의 개방과 남북화해, 그리고 조국통일의 국제적 여건조성과 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 附 錄 : 「社會와 思想」(1988. 9, 創刊號) 特輯

"現段階 民族統一運動의 實踐戰略"

어떻게 統一을 할것인가?

— 各界人士 6人이 내놓은 統一方案 —

- ○ 金大中(平和民主黨 總裁)
- ○ 南載熙(民正黨 統一特委員長)
- ○ 文益煥(「民統聯」 議長)
- ○ 吳忠一(KNCC 實行委員)
- ○ 金洛中(民族統一促進會)
- ○ 金重基(서울大 哲學科 4年)

□ 3단계 통일방안의 제창 : 공화국연방의 내용과 방향을 밝힌다

(김대중 · 평화민주당 총재)

〈 격세지감의 통일논의 활성화 〉

요즈음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한 현상이다. 정부도 봉쇄 일변도의 자세로부터 '건전한 통일논의'는 적극 권장하겠으며 통일에 관한 자료도 대담하게 공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에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6개항의 남북교류와 관계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남북간 교류의 전면적인 추진과 우리의 우방과 북한과의 접촉 촉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7·7선언 전날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그 내용을 미리 통고받았다. 그때 나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6개항의 선언은 종래에 비해서 큰 전진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7·7선언은 주로 남북간, 그리고 북한과 우리 우방간의 교류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표시한 것이 주였다.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남북간의 평화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나는 7·7선언은 현존의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며 북한이 이를 수락할지 의문시된다고 나의 의견을 노대통령에게 피력했었다. 결국 북한은 이 제안을 "분단고착의 영구화음모"라고 매도하면서 거부하고 말았다. 북한이 거부하였다고 해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 중 한쪽의 제안을 다른 쪽이 거부하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한 서울올림픽 참가를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 그에 대한 답신의 형식으로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양형섭(楊亨燮)의 이름으로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그 서신내용에서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불가침선언의 발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내가 볼 때 북한의 제안 역시 7·7선언과 마찬가지로 불충분한 것이다. 북한은 자기

들이 원하는 평화체제의 실현에만 관심을 보이고 대한민국 쪽에서 원하는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원하고 평화와 화해 속에 통일에의 전진을 바란다면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 양측의 정권이 두 가지 조건의 동시적 실현을 꺼리는 것은 각자 자기의 일방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했거나 지금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남북교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정부 또한 원칙적인 찬의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통일문제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당장에는 정부와 학생간의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전진적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나의 3단계 통일방안 〉

나는 1971년 대통령에 출마할 무렵부터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해왔다. 그 당시는 이러한 단계적 통일주장조차 위험시되었으며 나는 이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무수한 중상과 박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에서조차 표면적인 용어로는 이러한 3단계 통일방안을 채택한 것을 보고 이 또한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나의 용어를 빌어 쓰기는 했지만 그들이 과연 내가 말하는 3단계 통일방안의 정신과 내용까지 수용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나의 3단계 통일방안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적 공존의 실현이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우리 민족사상 영원한 수치이며 통한의 사건이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죄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전쟁억제의 튼튼한 안전조치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놓아야 한다.

먼저 휴전 이후 35년이나 계속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

되어야 한다. 이 평화협정의 체결에는 전쟁에 참가했던 4개의 당사자, 즉 남·북한의 양당국과 의용군을 파견한 중국,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의 4자가 참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니까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중국은 의용군만을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양자간에서만 체결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로 보나 현실적 군사대치의 상황으로 보나 또는 장래의 효력으로 보나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평화협정의 체결에는 4자가 똑같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고 실효가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과 아울러 남북간에는 상호간에 어떠한 침략이나 도발도 있을 수 없는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에는 전쟁억제를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의 장치도 확립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가장 열렬히 주장해온 미군철수와 군비축소 문제는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남북 쌍방과 군사동맹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미·일·중·소의 4대국이 적극적인 지지와 보장을 하고 유엔이 또한 이를 지지하는 결의를 하는 등의 다단계의 보장장치가 이루어진 연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지금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배치가 널리 믿어지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이 좁은 땅에서 어떠한 핵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둘째,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체제가 이루어진 후 또는 공존체제의 합의의 진행과정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언론, 학생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의 회복을 성취할 수 있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류만이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과 긴장을 해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편 남북간에는 경제교류도 활발히 하여 남북 양측은 대외무역 못지 않게 남북간의 무

역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통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억지와 상호협력의 최선의 수단이다.

세째, 평화적 통일에 대한 나의 견해는 신중하고 점진적이다.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업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어려운 지상과업인 것도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에는 불같은 정열과 얼음같은 이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을 위한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노력은 적극 추진해야 하며 또한 이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완전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로서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통일에의 열망과 장차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는 착실한 통일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 어떠한 통일방안이 가능한가 〉

현재 '고려연방공화국'의 이름 아래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통일방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사실상의 단일국가인 연방을 구성해서 이 연방정부가 중앙정부로서 주로 내정과 외교, 국방까지 다 관장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남북 양정부는 일종의 지방정부로 변하게 된다. 이 점은 40년의 분단에서 오는 각종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의 차이와 극단적인 적대적 대립관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북한과 남한이 일시에 단일의 중앙정부를 구성하며 국군과 인민군을 통합할 수 있으며 단일외교체제를 수립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모로 보나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정부당국자도 국회에서 시인한 바 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전두환정권은 막연히 인구비례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라고만 했을 뿐, 여기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중간적 절차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인구비례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 지금

당장의 실현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보다 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의 통일방안은 1민족 2체제의 원칙에 의하여 남북은 각기 독립정부로서 기능하면서 중앙에는 다분히 상징적인 통일기구를 수립하여 통일에의 제1보를 내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북 양측 정부는 독립정부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는다. 다만 양정부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민족적 의지와 실천목표에 따라 양측에서 파견한 동수의 공동대표에 의해서 통일기구를 설립한다. 이 통일기구에는 통일의회와 통일행정기구를 두어서 양측의 독립정부가 합의하여 그 권한을 부여한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한다. 제1단계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고 착실하게 출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 어느 쪽도 불안 없이 통일에의 출발을 단행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권한을 제1단계의 통일기구가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양측이 상호신뢰 속에 이러한 출발을 단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리하여 남북간의 믿음과 협력이 늘어남에 따라 양측 정부는 자기들이 합의한 만큼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중앙의 통일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의 통일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영연방의 양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영연방 각국이 영원히 독립국가로서 남는 데 비하여 우리는 완전한 단일국가로서의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다분히 상징적인 통일체제를 나는 북한의 연방공화국과는 전혀 다른 공화국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잠정적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명칭의 의미나 나의 통일방안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일부 악의에 찬 측에서는 덮어놓고 이를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제안과 같은 것으로 매도하고 비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북한의 실현불가능하며 그대로 실천한다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는 안과는 달리,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안전한 통일에의 출발이 된다. 물론 이 안은 제1단계의 평화적 공존, 제2단계의 평화적 교류가 실천된 연후에 실천된다. 이러한 신중하고 안전한 안조차 거부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포

기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이 안을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 라이샤워 교수 등 많은 한국문제에 대한 석학이나 전문가들도 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이라고 적극 지지한 바 있다.

한민족으로서 나의 최대의 비원은 하루 속히 평화공존, 평화교류의 체제를 확립하여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의 실현을 적극 도움으로써 장래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의한 완전통일에의 문호를 열어놓는 데 있다. 상징적인 통일기구의 수립은 이러한 나의 민족적 비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고민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안은 통일을 위협시하고 기피하는 측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전보장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침에 있어 내가 몇번이고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의 민주정부의 수립 없이는 통일에의 전진은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정부만이 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민족적 양심이 있다. 민주정부만이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북한 공산주의자와 자신 있게 통일문제를 추진해나갈 실력이 있다. 민주정부 아래서만 국민이 민족의 분단이 집권자의 정치적 야망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면 원할수록 대한민국에서 확고한 민주체제의 수립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발전을 등한히 한 통일논의는 환상이요, 낭만에 불과하다. 그러한 순진한 자세는 통일에의 성공을 가져오지 못함은 물론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는 통일에의 유일한 지름길이요, 튼튼한 보장이다.

○ 경계선이 의미가 없는 상태

(남재희·민정당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

통일된 조국에서는 공산당과 예를 들어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등이 공존하며 평화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네에서 김일성을 지지하는 공산당원과 노태우를 지지하는 민정당원, 김대중을 지지하는 평민당원 등등이 평화롭게 이웃하여 살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간의 죽느냐, 사느냐는 무력적 대결이 한동네 안에서의 평화적인 선의의 정책대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꿈같은 이야기로만 느껴진다.

그러한 "얼싸안고 춤을 추는"식의 통일은 우리의 궁극적 바람이지만 일단은 접어두고 그에 앞서 생각할 것이 남·북한간의 경계선(지금은 휴전선)을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다.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구상을 가졌다고도 들었는데 지금 동·서독간에 쌍방측 왕래가 연간 총 1천만에 이르고 보면 그러한 구상이 크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도 하겠다. 그러면서 남·북한간에 군사적 대치를 극복하여 평화를 정착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중간단계로서는 1민족 2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연합, 연방 등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중간 단계를 달성한 다음에 인내를 갖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이상인 "얼싸안고 춤을 추는"식의 통일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물리적인 접합에서 화학적 융합이 이루어지는 일과 같은 것이다.

〈 남북 긴장완화와 상호교류 〉

조국의 통일방안을 놓고 남·북한간에는 의도와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 흔히 말하다시피 북쪽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론에만 집착하다 보면 통일문제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

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북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이라면 남은 대북자유민주주의혁명노선일 것이다. 차이는 강도가 약하다거나 공언을 덜하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것 또는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의도론을 머리 속에 남겨둔 채 실제적으로는 방법론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남과 북은 일을 진행하는 순서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남쪽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가는 단계론·점진론이며 우선 쌍방간의 신뢰의 구축을 중시한다. 북쪽은 정반대로 일거에 중심과제를 해결하자고 정치·군사회담이나 대민족회의를 들고 나온다. 7·4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민족대단합이란 3대원칙엔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상의 대립은 당장 타협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참외를 머리서부터 먹는 방법과 꼬리부터 먹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런 차이 이상의 훨씬 심각한 차이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과업이 지난하고도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쪽의 접근방법이 설득력이 있다. 우선 긴장의 완화와 상호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갈 일이다. 그러면서 남쪽의 접근방법에 덧붙여 주문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사적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며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설명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남북문제의 군사적 측면은 다층적이다. 미·소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전세계적 차원이 있고, 중·일이 개재되는 지역적 차원이 있으며, 남·북한이란 국지적차원이 있다.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미·소의 군사적 대립이 문제이다. 지금 데탕트를 향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고,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지 아시아에선 아직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계적 차원 및 지역적 차원과 관련하여 중립화통일(혹은 영세중립화통일)을 주장하는 예가 있는데 만약에 바람직스러운 통일이 된다면 꼭 중립화라고 좁게 개념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의 비동맹노선을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노파심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일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미를 내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바람직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미국의 이해와 협조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단계나 조치들은 쌍방에 의해서, 또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그동안 제안되어 왔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군사훈련의 상호사전통고

군사훈련의 상호참관

군사훈련의 축소

기습방지협정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불가침협정의 체결

미군 및 핵의 철수와 철거

남북 쌍방의 군축

이와 같은 과제들 가운데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하나만 되어도 대단히 진전일 것이다. 10여년 전의 이른바 미류나무사건을 상기해 보면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긴장완화 하나가 얼마나 어렵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일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측면의 여러 안건을 놓고 쌍방은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군사문제라 하여 너무나도 비밀취급하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조차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이다.

한가지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핵무기의 문제이다. 한국정부측의 입장은 미국은 한국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러는 것이 북쪽에 대한 억지력도 될 것이란 판단인데 한국 당국도 그러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핵에 관해 그러한 비밀주의가 정당한 것인가? 또 그러한 비밀주의가 계명(啓明)된 세상에서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한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일인데 한국민이 알아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의 무지몽매주의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낙관하기가 어려운데 비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얼마간 낙관적이 되기도 한다. 중국(중공)이 경제특구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1민족 2체제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전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와이대학에 있는 북한문제전문가 서대숙(徐大肅)교수에 의하면 북한도 경제특구의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경제적 변화가 정치적 변화의 바탕이 된다고 하는데 이즈음 공산권에 성행하는 자유시장원리의 부분적 적용이나 경제특구의 설정 등이 보다 진전하면 남·북한관계에도 커다란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 경제적 측면이 오히려 결정적인 것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간에 경제협력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을 매개로 하여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 정보의 개방과 왜곡된 대북인식의 전환 〉

남북통일문제를 놓고 이 짧은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이러하다.

우선 남북간의 경계선을 의미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일의 중간목표일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동·서독방식을 따르는 일이라고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이고 그것을 매도하는 것이 환상적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는 상대방이 있고 국

제환경이 관련되는 것이기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고 인내심 있게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서둔다고 일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서두를 때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이다. 여론에 정치가 좌우되는 개방사회에서 특히 유념하고 조심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관한 정보, 남북대화에 관한 정보, 남북군사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보다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북한에 관한 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흔히 냉전체제나 냉전심리를 비판하지만 냉전만이 아니고 열전까지도 싸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북 경각심이나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해 그랬을 법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체제나 심리를 극복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관계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는 일이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또한 당국과 국민간에 신뢰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군사관계에 따르기 마련인 비밀유지의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많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군사적 대립에서는 1퍼센트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이기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과장은 없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평가는 미국에 의지함이 클 것인데 그 미국이 예를 들어 소련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한 적이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더구나 카터행정부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련의 위협증대와 거기에 대응한 미국의 군비강화가 시끄럽게 떠들어지지 않았던가.

남북관계의 알찬 진전을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이 중요하고 또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군사적 측면을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 연방제 통일의 3단계과정

(문익환·민중통일민중운동연합 회장)

〈 통일의 이념과 주체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일찍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글로 표명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7.4공동성명 이후였다. 그것은 나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국신학의 주제는 "남북통일"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남북통일의 신학"은 민족「화해」와 「빵」, 곧 유물론과 경제문제를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기독교사상」 1972년 10월호)

신학적인 시각을 떠나서 순전히 민족사적인 시각에서 표명된 나의 첫 통일론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낭독된 「민주구국선언」이었다. 그 선언의 골자는 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②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부조리를 시정하여, ③ 민족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나의 관심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국토"가 아니라 "민족"이었다. 그 후로 민주냐, 통일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둘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개념이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국토는 무력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주종(主從)관계로 갈라진 겨레를 하나로 다시 묶는 길은 "민주"의 길밖에 없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겨레를 둘로 갈라놓는 주종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건 종(從)의 자리에 있는 겨레를 그 자리에서 풀어놓아 주(主)의 자리로 복권시키는 일이다. 이걸 깨달음과 함께 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민중민주주의"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던 민족을 통일하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확실해졌다.

분단의 피해자들인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복권되기까지 통일은 가망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이 겨레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립·상충하는 두 이념이 민중 속에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나마 하나인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자유"와 "평등"이 소원의 형식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유"를 향한 몸부림은 "평등"을 향한 몸부림일 수밖에 없고 "평등"을 요구하는 주장은 "자유"를 요구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진정 자유일진대, 그건 만인의 자유여야 한다. 자유가 만인의 것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평등인 것이다. 경제적 평등이 없는 자유는 만인의 자유일 수가 없다. 그러나 평등이 경제적인 평등에 멎어버리고 자유의 평등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이 또한 평등이 못된다. 평등으로 완성되는 자유, 자유로 완성되는 평등, 이것이 주종관계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는 일이라면, 그건 민중의 소원속에서는 이미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민중이 통일의 주체로 복권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리하여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운동은 그대로 민족통일운동이요, 민족통일운동은 그대로 민주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복권되어 있는가? 아니다.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민중의 자기 해방운동은 처참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전개해야 하는 통일운동은 그대로 민중해방운동일 수밖에 없다. 민중의 자기 해방운동을 박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집권층의 통일론이 얼마나 반통일적인 속임수이며, 민중해방운동을 외면하고 전개하는 통일운동 또한 얼마나 관념적인가는 물어 의심할 나위가 없다.

〈 민족자주와 연방제 3 단계통일안 〉

그런데 민중민주주의통일운동은 가는 곳곳에서 절벽에 부딪쳐왔다. 그 절벽이 무엇인가? 그것은 외세다. 분단을 고정시키고 자국의 권익만을 지키려는 미·일의 국가이익은 원천적으로 한국민중의 권익과 상충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일이 우리의 민주화투쟁이나 민족통일운동에 지원을 보내온 일이 언제 있었는가. 언제나 우리의 민주화투쟁을 좌절시켰고 민족통일운동을 가로막아 오지 않았던가. 민주화는 오로지 우리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족통일도 오로지 우리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이 지난 44년 분단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이러한 까닭에 민중민주세력이 추구해야 하는 민족통일운동은 민족자주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민주화운동도 민족자주운동이어야 한다. 셋은 곧 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민주화운동도, 통일운동도 반외세민족자주운동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반외세민주화투쟁은 고립과는 다르다. 외세가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 막지 않는데도 우리가 반외세투쟁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의 강조점은 "반외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에 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민족자주를 쟁취해야 하지만, 통일조국을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는 영세중립화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아니라, 열강의 힘의 완충지대가 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핵전쟁의 위험요인이 되어 있는 분단을 극복함으로써 이 겨레가 함께 길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초석으로 만드는 일이자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하키는 일이 바로 이 나라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는 일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보장이 절대 필요한 마당에 우리는 "반외세"로 일관할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려는데 외세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반외세" 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4년에 걸쳐 남과 북 사이에는 불신과 대립, 적대감이 깊을대로 깊어졌다. 정치·경제제도뿐 아니라 사고와 생활방식이 심하게 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과도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연방제안이다. 나는 지난 4월 16일 연세대에서 열린 "국민토론대회"에서 연방제 3단계통일안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제 통일 제 1단계는 당분간 남과 북이 군사와 외교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그동안 김대중씨가 주장해온 통일안이라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군사와 외교까지 통합하는 통일의 단계로서 이것은 김일성씨가 제안하는 연방제안이다. 이 단계는 남북한 현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두 단위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를 도단위로 세분화한 단계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과도기적인 체제로 소극적으로만 이해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도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로서 적극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지방자치제는 미국이나 소련의 지방자치제보다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두 단위로 지방자치제를 실험하다가 때가 되면 도단위로 지방자치제를 분화한 후에도 도마다 개성있는 실험들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 통 일 을 위 한 과 제 〉

연방제통일 제 1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반통일적인 기득권세력을 밀어내고 국민의 통일염원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민주정부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민중민주세력의 대동단결과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관 주도적인 남북교류가 아니라 민 주도적인 남북교류가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을 44년에 걸쳐 두꺼워만 간 불신과 대립과 적대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필요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달라진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넘어서 한겨레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는 일은 절대 긴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민주원칙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고, 서로의 다른 것을 용납하면서 하

나의 공동체를 이룩해간다는 것이 7.4 공동성명의 "초월"이라는 말의 첫 뜻일 것이다. "초월"의 뜻은 거기 멎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용인하면서 같이 더 나은 것을 찾아 나선다는 뜻도 "초월"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민간교류는 둘째로 이 탐색과 모색이 민간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협정서에 서명하여 공식화하기 전에 다각도에 걸친 자유로운 교류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정부는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오고가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된다. 온갖 교류를 알선하고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면서.

교류에 나서는 민간인들도 이를 지켜보는 정부도 서두르지 않고 때가 성숙하도록 기다려야 한다. 통일의 기운만은 이제 성숙할대로 성숙해 있다.

○ 체제와 이념초월해 민족공동체 건설

(오충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분단되었고, 세계분단은 한반도 국토분단을 강요했다. 분단외세와 민족내부 민족분열주의자들에 의해 국토분단이 민족분단으로 고착되면서 1948년 이래 우리는 1민족 2국가의 비극적 역사를 살아왔다. 이 분단의 반세기는 이 민족에게 있어 기나긴 통한과 고통, 피흘림의 역사였다. 미군정하의 4·3제주양민학살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6·25전쟁에서 4·19, 5·18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피흘림의 역사는 모두 분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남·북의 정치와 경제는 분단의 모순에 걸려 민족자주와 평화, 민족의 화해를 막아 왔고, 민족이질화의 단계에까지 몰아왔다. 이제는 남북 민중의 생존과 고통의 문제를 넘어 민족 전체의 생존이 미·소의 핵대결에 볼모로 잡혀 있다.

이제 통일의 문제는 바람직한 이상(理想)의 문제가 아니라 죽기와 살기의 문제가 되었다. 최근 들어 다행히 금압되었던 통일논의가 민중의 힘에 의해 자유롭게 되고, 억눌렸던 통일염원이 분출되면서, 통일운동으로서의 범국민평화행진이 전개되었다. 남한정부는 이제 비로소 괴뢰라고만 불렀던 북쪽을 국호로 부르고 비방방송을 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의 내일의 주역인 학생, 청년 들이 목숨을 걸고 결연히 분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10 남북학생회담을 결의하고 강행했던 2만여 학생들의 결연한 모습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 보여진 통일에의 희망 그것이었다. 이 통일에의 거대한 민족에너지를 민족자주·평화통일로, 그리고 새로운 민족공동체 형성의 길로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 통일의 방안과 실천과제 〉

1. 민족적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남북의 6천만, 그리고 중국·소련·일본·구미에서 흩어진 삶을 사는 모든 민족구성원이 한겨레임을 확인하고, 민족우선의 원칙에서 한겨레찾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한 정치당국자들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냉전체제에서 민족이질화·적대화의 길을 재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복속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6천만 겨레는 분단냉전시대 반세기를 분단외세와 민족내부의 분단세력의 통치술에 속아온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민족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남·북한 당국은 민족이질화·적대화의 모든 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평화교육교과서를 공동제작하여 남북이 각각 그 교육을 실시한다.

3. 남·북한 당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민족우선·민족자주 입장에서, 이에 배치된 내용으로 체결된 모든 외교적 협상이나 조약을 수정 폐기해야 하고, 앞으로의 모든 대외협약은 남북민족 공동의 이익 위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4. 쉬운 것부터 실현해야 한다. 국토, 정치, 국가체제적 통일에 앞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민족구성원의 만남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시급한 천만 이산가족의 거주·생사 확인, 가족찾기, 서신왕래, 고향방문, 성묘, 여행 등의 자유가 무조건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막을 체제나 정부, 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분단 권력집단의 민족에 대한 폭력의 행사일 뿐이다.

5. 남·북한 거주민은 이데올로기, 남북정치체제, 남·북한 영토 전역의 거주이전 등에서 중립이나 선택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6. 통일 이후 민족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준비를 위한 남북민족대표자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은 노동자·농민을 포함한 여성, 학

생, 청년, 학자, 문화·예술인,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각계 대표로서 민족적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한다.

7. 남북의 모든 대학에 '민족통일과'를 설치하고, 교수와 학생이 남북의 모든 역사와 현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연구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8. 남·북한은 공히 민족통일운동에 장애가 되는 남북의 각종의 반민족적 법을 폐지하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적극 권장해야 한다.

9. 남·북한 당국은 민족분단으로 인해 발생된 이데올로기, 남북정치체제, 사상 등으로 구속된 모든 정치·사상범을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분단—전쟁, 냉전체제로 인한 남·북한 인사들의 각종 사회적 활동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10. 남·북한 정치·군사당국은 민족간의 군사대결체제를 지양하고, 이에 따라 남북대결군사체제를 남북민족방위체제로 전환하고, 민족공동방위체제를 위한 남북군사공동회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11. 남·북한 당국은 이 땅에 배치된 미국의 가공할 핵무기와 이곳을 겨냥하고 있는 소련의 핵을 철수시키고 비핵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관철해야 한다. 한반도에 배치된 핵은 결코 민족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제3지역의 미·소분쟁으로 인해 이곳에서 핵전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공식적 선언이 이미 누차에 걸쳐 미·소에 의해서 언급된 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이념·체제와는 아무 관계없이 미·소의 핵의 볼모가 되어 있다.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일이 민족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된 까닭이다.

1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모든 교류·연구가 속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의 언어, 역사, 지리, 생물, 자연자원 등 비정치적 학문의 교류를 우선으로 해서 문화, 예술, 종교, 스포츠 등의 교류를 서둘러야 한다.

13. 남·북한 교수들의 교환강의와 학생들의 교환수업이 허용되어야 하고 전항의 연구나 사업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4. 남·북한 민족과 정부들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의 큰 걸음을 내디더야 한다. 아직도 남북민족이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공동주최, 단일팀, 분산개최 어느 것이든 민족통일을 위한 것이라면 총궐기하여 남북이 같이하는 올림픽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올림픽은 민족의 수치를 드러내는 분단올림픽이 될 것이다.

15. 남·북한 민족과 정치당국들은 현존의 두 체제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정복적 통합적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민족합의에 의해 창출함으로써, 세계분단구조—한반도 분단구조를 깨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자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족경제의 외세의존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17. 남북민족과 정부당국들은 조국해방과 분단의 날인 8월 15일을 민족수치의 날로 정하고, 10월 3일인 개천절을 민족자주통일의 날로 정하여, 이 날에 6천만 겨레가 함께하는 민족통일축제를 올리도록 한다.

18. 남·북한 민족과 정부들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날을 확정하고 그때까지 모든 분단 외세와 민족내 분단세력을 몰아내는 민족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1995년 분단 50년을 맞는 해를 통일의 해로 선포하고, 민족적 대과업을 완결해야 한다.

19. 평화통일은 쉬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는 긍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적 대동(大同)의 염원 앞에서 모든 어려움과 조그마한 차이는 물리쳐야 한다. 6천만 아니 7천만 겨레가 크게 마음 한번 먹기에 따라서 통일은 가능하다. 이 한민족의 통일 에너지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 통일의 날은 오고 있다 〉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더구나 한반도·한민족의 통일과 같은 대사에는 더욱 그렇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세계는 반핵·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핵미사일이 철거되고, 동·서독간에 화해와 통일이 촉진되고, 대만사람들이 북경을 자유롭게 방문하게 되었다. 지구촌에서 이제 서로 오도 가도 못하는 민족은 오직 한반도의 한민족뿐이다.

이토록 민족의 수치를 안고 어떻게 하루인들 더 분단조국에서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늘도 바라지 않고 선조도, 후손도 바라지 않는 이 분단의 세월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된 삶이 아닌가!

지난 7월 4일, 조국분단 이후 최초로 남녘땅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중요 지역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범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다. 7월 3일에는 임진각에서 통일기원제가 열렸고, 민족자주·평화통일의 풍선과 족자가 북녘하늘 높이 떠올라 통일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미 통일의 날은 오고 있다.

○ 청년독립고려공동체 수립을 제창한다

(김낙중·민족통일촉진회 정책연구실장)

〈 남북합의에 의한 평화통일 〉

민족통일을 위한 방법에는 평화적 방법과 무력적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오직 평화적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이유는 무력적 방법은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구성원에게 너무도 참혹한 유혈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는 까닭이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이상 우리의 통일방안은, 첫째 현재 남과 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두 개 국가권력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둘째 일단 합의된 내용이 그 어느 일방에 의해서도 파기되거나 위반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역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첫째, 남북 쌍방 국가당국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언제나 남측 또는 북측의 정권을 어떤 집단의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각각 그 사회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권담당자는 남북 쌍방이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한계 안에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의 정치경제체제는 상당히 경직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체제변경 뒤로 미룬다면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은 매우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쌍방의 현존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쌍방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남북 쌍방의 현존체제를 인정하면서 다만 현체제를 자손들에게 강제로 상속하려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남북을 통일하고 쌍방 국가권력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의 생활공동체를 수립하여 남북 쌍방의 주권을 동시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승계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자는 방법을 여기에 제기한다.

〈 **통일독립고려공동체의 수립** 〉

다음은 남북 쌍방 당국자 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남·북간 기본조약의 초안이다.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간 기본조약(초안)〉

머리글(생략)

제 1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1953년 7월 27일 이래 이 조약 체결시까지 자국의 실질적 행정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호 승인하고,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을 촉진·보장하기 위하여 초국가적 기관으로 고려민족연방회의를 조직·운영한다.

제 2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통치지역을 존중하여 이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쌍방 체약당사국 사이에 야기되는 모든 분쟁문제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무력의 행사나 무력에 의한 위협을 삼간다.

제 3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195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였거나 출생할 모든 자국 국민을 자국의 국적에서 제외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독립하고 전체 고려민족을 통일할 자치적 생활공동체로서 비동맹 중립의 통일독립고려공동체를 수립한다.

제 4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군사령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폭 4킬로미터의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부근의 1천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각각 통일독립고려공동체에 이양하기로 하고 동지역 안에 통일독립고려공동체 운영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다.

제 5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통일독립고려공동체 성원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자

국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의 통일독립고려공동체 성원 및 그 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공동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에게 자국 영토 안에서 자치권과 치외법권을 부여한다.

제 6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행사하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통치권 이양에 관한 공동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 체결시부터 15개년 이내에 점차 통일독립고려공동체에 이양한다.

쌍방 체약당사국의 주권은 자국 국민의 노쇠와 더불어 통일독립고려공동체의 주권으로 지양된다.

제 7조 : 쌍방 체약당사국은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에 유관한 주변제국가의 협력을 얻어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에 관한 국제보장조약'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한다.

* 부칙

1. 이 조약은 쌍방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의하여 비준하고 그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의 교환은 19○○년 ○월 ○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실행한다.

2. 이 조약과 이 조약에 따른 제협정은 쌍방 체약당사국의 헌법 및 제법률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지며, 쌍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국제제조약은 이 조약과 이 조약에 따른 제협정에 배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약은 쌍방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를 개폐할 수 없다.

4. 쌍방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과 이조약에 따른 제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판문점에 쌍방 체약당사국의 전권대사들로 구성되는 상설합동대표부를 지체없이 설치한다.

19　　년　　월　　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

이와 같은 기본조약에 입각하여 〈고려민족연방회의에 관한 협정〉, 〈상호불가침협정〉, 〈청년총선거에 관한 협정〉, 〈통일독립고려공동체 운영원칙에 관한 협정〉, 〈운영도시 건설에 관한 협정〉, 〈고려공동체 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통치권 이양에 관한 협정〉, 〈상설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그리고 미·소·중·일과 남북 당사자 사이의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보장조약〉등이 체결될 것이다.

이 협정들에 포함될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지적하면 '고려민족연방회의'는 남북 쌍방에서 선출되는 동수의 민족의원과 고려공동체에서 선출되는 민족의원으로 구성될 것이며, 고려공동체에서 상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총선거는 인구비례에 따른 비밀투표에 의하여 복수 후보자를 놓고 완전공영선거의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것이며, 청년들의 대의원총회는 고려공동체의 하원이 될 것이다.

고려공동체가 어떠한 사회경제체제를 선택, 또는 창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장차 청년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지만 고려공동체가 국제적으로 비동맹중립의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과 고려공동체의 운영이 남북연방 형태를 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원칙적으로 협약될 것이다.

현재 남북 쌍방당국이 행사하고 있는 통치권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고려공동체에 이양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주권이 고려공동체로 승계되는 데는 15개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동안 고려공동체는 남북간의 각종 교류에 관한 사업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공동체의 수립을 통한 민족통일을 담당할 주체적 역량은 남북 쌍방당국의 지배에서 해방될 모든 청년대중이 될 것이며, 남북 쌍방당국이 합의

한 기본조약과 제협정의 실행도 청년대중들에 의하여 담보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민족의 중립화와 평화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 소, 중, 일 등 주변 4개국은 '고려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보장기구'의 이사국의 일원으로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중의 자기해방을 위한 투쟁 〉

지금 여기에 제시한 통일방안은 1955년 필자가 남북한 정권당국에 직접 제출한 통일안의 요지이며, 기본조약 초안 중 제 3조 "195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라는 부분이 당시는 "1950년 1월 1일 현재 20세 미만의 자" 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 통일방안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그 요지를 세상에 발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족통일을 위해서 남북 쌍방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는 사실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 쌍방이 모두 이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수렴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낡은 껍질에서 해방되어야 할 사람들, 참으로 통일이 절실한 삶의 요청임을 느끼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해방의 역량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민족을 통일하고 민중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길은 남북의 모든 청년들이 분단된 두개 국가권력에서 해방되도록 투쟁하는 길과 별개가 아님을 인식하고, 자기 지역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청년고려공동체 수립에 동의하도록 백방의 투쟁을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이 뒤따를 때 민족통일은 이상이 아닌 현실로 전화할 것이다.

○ 민족해방 자주화와 연방공화국 창설

(김중기·서울대철학과 4년, 8·15남북학생회담 남한대표단장)

조국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지금의 현실과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임금인상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청년학생의 반미구국투쟁 속에 조국통일로 가는 길이 있다.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7천만 겨레의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통일의 위업은 7천만 겨레가 조국통일의 미래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현재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나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깨달을 때만 실현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조국통일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 남북간의 평화정착 〉

남북간의 평화정착이라고 할 때, '두 개의 한국'='분단고착화'를 통한 남북간의 평화공존과는 구별해야 한다. 단독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 — 노OO정권이 추구하는 4대강국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을 통한 남북간의 평화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보장되고 독재정권의 민중에 대한 억압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단지향적인 거짓 평화이다.

이러한 분단지향적인 평화가 아니라, 통일의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되는 진정한 평화를 남북간에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명분으로 억압되어서 안되며, 사상과 제도조차 자유롭게 선택·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만 7천만 겨레가 조국통일의 방안과 민족의 진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결정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결집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의 제한 없는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파쇼적 폭압기구 철폐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민권이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민족화해가 이룩되길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전쟁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 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신뢰성을 가질 수 없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 가슴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으로서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의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10만 이하로 상호감군과 군비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세째, 외세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군사파쇼정권을 비호하고, 두 개의 한국을 조작하여 자국의 이익을 계속 확보하려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종식되어야 한다.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지배와 간섭을 보장해주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군작전지휘권이 반환되어야 한다.

네째, 위의 세 가지 과제를 남과 북이 실현하였는가를 대표단을 파견하여 상호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밝힌 민주화의 실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외세의 간섭 종식 등의 3대과제가 남·북한에 실현되면 통일정부를 창설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연방공화국의 창설 〉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되더라도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밑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급격하게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은불가능하다. 만일 남과 북이 서로 자신의 사상과 체제로 급격하게 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을 가져와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는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두어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는 것이 통일의 올바른 방도일 것이다.

①민족통일정부 구성방법과 운영원칙

민족통일정부의 구성은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서 연방정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체계가 아닌 상호 지지와 협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모든 위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상설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상설위원회의 의장은 남과 북이 번갈아가면서 맡고, 대내외적으로 민족통일 정부를 대표해야한다. 최고정치회의에 참여하는 남과 북의 대표선출방법은 지역정부의 대표성있는 기관(남한측은 의회, 북측은 전체인민대표자회의)에서 자유롭게 선출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의 대표수를 인구비례에 의하지 않고 같은 수로 하는 것은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고 일방의 제도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상설위원회에서는 자유로운 정책제안과 토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의사결정방법은 다수결을 배제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만장일치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②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

연방정부는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전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는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국방문제, 대외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결정해야 한다. 또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남과 북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존중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남과 북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대외관계는 지역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독자적인 관계를 갖는 조건에서 연방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불평등한 대외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인 대외합작은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남과 북에 자유롭게 허용되고, 합작한 외국자본의 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③연방정부의 성격과 임무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희망찬 통일조국의 새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첫째,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고수하여 외세의존에 반대하고, 강대국의 희생물이 되는 동맹에는 가담하지 않고 중립국가로 남으며, 유엔에는 연방정부가 전민족의 대표로 가입해야 한다.

둘째,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전민족의 의사에 맞게 연방국가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세째, 북과 남의 군사분계선을 철폐하고 국군과 인민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지휘체계의 20만~30만의 민족연합군대를 조직하여 국방의 자위를 이룩해야 한다. 민족연합군 유지와 국방에 드는 비용은 남과 북의 경제력에 맞게 공동부담하여야 한다.

네째, 남과 북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여 민족자립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독점과 매판행위를 하는 기업 외에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 사적 소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자원을 공동개발 이용하고, 분업과 통상을 발전시키고 공동회사·공동시장 등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여 통일적인 민족경제발전을 꾀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여 나라의 동맥과 신경을 살려야 한다. 교통과 체신의 연결은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와 합작의 토대가 된다.

여섯째, 과학과 문화·교육분야에서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여 과학기술과 민족문화·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으로 과학자, 교육인, 문화인들이 모여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곱째, 근로대중과 전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실업자를 해소하고, 근로대중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두가 잘 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교육·주택은 거의 무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민·소상인·수공업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

〈 연방국가의 발전방향 〉

앞에서 통일조국의 미래상인 연방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사회주의국가도, 자본주의국가도 아닌 연방국가가 어떻게 발전되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부닥치면 난감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난감함은 연방국가가 짧은 시일내에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둘 중의 하나의 길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자가 처한 사회계급적 위치 속에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이득이 되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결국 연방국가에 대해서조차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연방국가는 결코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국가로만 규정할 수 없다. 연방국가 자체로도 통일조국의 훌륭한 모습이다. 그리고 연방국가의 발전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족구성원의 이해를 폭력적으로 빼앗으면서 연방국가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의사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민족의 결정에 따라 연방국가의 발전방향은 규정될 것이다. 그 결정이 자본주의일 수도 사회주의일 수도, 아니면 제 3의 사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전민족의 민주적인 진로결정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